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2024 우수사례집

지방 규제 혁신

발 간 등 록 번 호
11-1741000-100001-01

2024 우수사례집 지방규제혁신

소통과 상생의 가치를
품다

지역 혁신의 미래로
나가다





2024 우수사례집

지방 규제 혁신

규제정보포털 www.better.go.kr 자치법규정보시스템 www.elis.go.kr 내고장알리미/지방규제혁신 www.laiis.go.kr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2024 우수사례집

지방 규제 혁신



행정안전부

Contents

Part Ⅰ.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 004

01. 지역 현장 중심의 지방규제혁신 추진 006
02. 지역 현장이 원하는 규제의 발굴 및 검토 008
03. 규제혁신을 위한 적극적 활동 013
04. 지자체의 규제혁신 활동 지원 022
05. 덩어리규제 집중 해소 및 그림자·행태규제 개선사례 024
06. 지방규제혁신 확산 및 체감도 제고 030

Part Ⅱ. **생활 불편 개선 우수사례** 034

경진대회 우수사례

01. 소비자가 먼저 반기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최우수상(대구광역시) 036
02. 제도적 허들을 넘어 학생 전용 통학순환버스의 길을 열다 장려상(경기도 파주시) 038
03. 폐기물 배출 방법 개선으로 환경오염은 낮추고 주민 편의와 행정 효율을 높이다 장려상(대구광역시 중구) 041

적극행정 우수사례

04. 시민 불편 및 교통 흐름 개선을 위한 물류 차량 '시간제 속도제한' 경상북도 구미시 044
05. 하수도 유형자산 전수조사를 통한 원가 절감 및 하수도 요금 부담 완화 부산광역시 046
06. 상가임대차인 간 분쟁으로부터 범죄 예방과 심리적 불안 해소를 위한 알선조정제도 도입 서울특별시 048

Part Ⅲ. **지역경제 활력 제고 우수사례** 050

경진대회 우수사례

01. 22년간 묶인, 석탄 경석의 폐기물 규제 해소 대상(강원도특별자치도) 052
02. 세계인, 전남人이 되다! 외국인 비자제도 개선 등을 통한 인력난 해소! 우수상(전라남도) 055
03. 규제혁신으로 전국 최초 블루오션을 찾은 우분(소똥) 고체연료화 우수상(전북특별자치도) 059
04. 농민 즉석판매 제조가공 탄소중립시대 로컬 판매 포문 열다 우수상(충청북도 괴산군) 062
05. 선제적 규제개선으로 지속 가능한 이차전지 산업 성장 기반 마련 장려상(경상북도 포항시) 064
06. 외국인 요리사 고용 요건 완화로 쇠퇴해가던 국내 최대 차이나타운의 명성을 되찾다 장려상(인천광역시 중구) 066

적극행정 우수사례

07. 전국 최초 2년 연속 여의도 면적의 61배(177.2㎢) 조업어장 확장! (인천광역시) 068
08. 수소충전소 입지 규제개선에 따른 수소 충전 인프라 확대 (제주특별자치도) 070

지방규제혁신위원회 개선사례

09. 농·어촌민박 연면적 제한 완화 충청북도 단양군 072

Part Ⅳ. **기업 애로 해소 우수사례** 074

경진대회 우수사례

01. 카페인 등 식품 기피 성분 표기 규제개선 최우수상(경기도 안양시) 076
02. 산업단지 입주협약 권한 확대로 기업 수요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 우수상(경기도 양주시) 079
03. 대덕특구 토지 이용 효율화(고밀도 개발)를 위한 규제개선 업무 추진 우수상(대전광역시) 082
04. 운행 중지 철도 부지를 활용한 공장용지 공급 우수상(울산광역시) 085
05. 미활용 산업용지 주차장·야적장 임시 사용을 위한 법령 개정 장려상(울산광역시) 087
06. 산업단지 내 주차장 임대, 기업 애로 사항 해결을 넘어 법률 개정까지 1+1 장려상(충청남도 서산시) 090

적극행정 우수사례

07. 경주 강동일반산업단지 구역별 부분 준공 (경상북도 경주시) 092
08.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른 이차전지 소재 제조업 투자 애로 해소 (대구광역시) 095
09. 전국 최초! 휴·폐업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업무 처리 개선 (부산광역시) 097
10. 공유재산 납부의 관행 행태 규제개선으로 전기차 급속 충전시설 설치 걸림돌 해소 (수원특례시) 099
11. 공장의 창고용 가설건축물 이격거리 삭제를 통한 기업활동 보장 (충청북도 청주시) 102

지방규제혁신위원회 개선사례

12.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 현실화 대한전문건설협회(국토교통부) 104
15. 도로굴착사업 불가 사유 규제 완화 대한전문건설협회(국토교통부) 106
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적용 범위 확대 대한전문건설협회(고용노동부) 108
14. 건설업 외국인력(E7) 활용 규제개선 대한전문건설협회(법무부) 110

Part Ⅴ. **지역환경 개선 우수사례** 112

경진대회 우수사례

01. 전국 최초! 빈집 규제 협업으로 불합리한 규제개선 우수상(세종특별자치시) 114
02. 빈집 방치를 초래하는 불합리한 재산세 제도 개혁 장려상(대전광역시 서구) 117

적극행정 우수사례

03. 전국 최초, 공유재산(행정재산) 용도폐지 운영 기준(대상, 절차) 자치법규 반영 (경기도) 119
04. 지속적인 개선 방안 모색과 논의를 통해 이루어낸 건축물 해체 절차 완화 (경상북도 의성군) 121
05. 국내 최초 공공하수의 적법한 재이용 개선으로 냉각탑 없는 주민 친화적 열병합발전소 건립 (서울특별시) 123
06. 건축물 관리자 확대 인정을 통한 빈집 정비사업 추진 가속화 (전라북도 김제시) 126

Part Ⅵ. **공공서비스 강화 우수사례** 128

적극행정 우수사례

01. 전국 최초 저소득 유·청소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제도개선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강원특별자치도) 130
02. 선불형 동백패스 도입으로 교통 분야의 복지 시책에 대한 형평성 제고 (부산광역시) 133
03. 전국 최초, GIS 기반 CCTV 영상 정보 스마트검색 서비스 운영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울산광역시 북구) 136
04. 전국 최초 스마트 응급의료 시스템 구축 및 환자 분류체계 일원화 (충청북도) 140

Part Ⅶ. **보도자료로 만나는 규제혁신 성과** 1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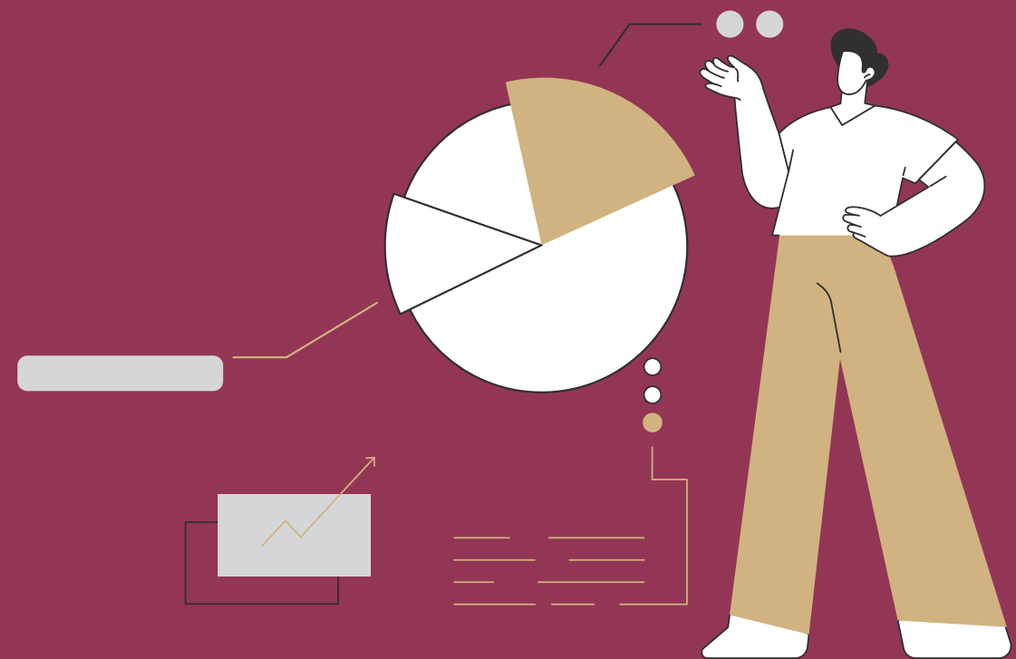


Part •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

행정안전부는 지역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으로
지역주민과 기업의 규제 애로 체감도를 제고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방 소멸 위기에 총력 대응하고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가고자 노력합니다.

- 지역 현장 중심의 지방규제혁신 추진
- 지역 현장이 원하는 규제의 발굴 및 검토
- 규제혁신을 위한 적극적 활동
- 지자체의 규제혁신 활동 지원
- 덩어리규제 집중 해소 및 그림자·행태규제 개선사례
- 지방규제혁신 확산 및 체감도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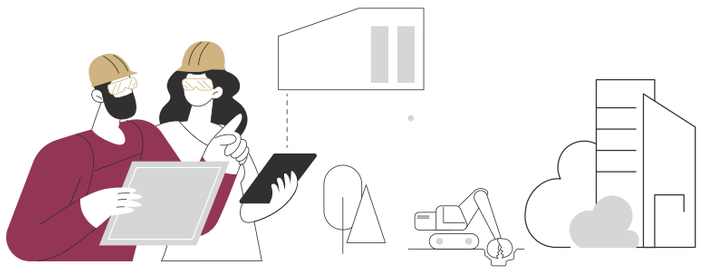
지역 현장 중심의 지방규제혁신 추진



강력한 규제혁신 추진체계 가동

규제혁신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강조함에 따라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및 민·관·연 합동 규제혁신추진단, 민간 주도 규제심판제도를 가동하여 경제활력 제고 및 민생경제 회복 유도를 추진하였다. 국정과제(114-1), 국조실의 2024년 규제정비 종합계획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역량 및 자율성 제고를 위한 지방규제혁신을 강조하였다. 또한, 중앙정부의 부담금 등 준조세 정비(대통령 지시사항, '24.1.)가 시행되면서 관련 자치법규의 정비 및 격차 조정이 필요하였다.

국정과제 114-1	지방자치단체의 인적 역량과 경쟁력 제고
규제정비 종합계획 6대 분야 : 지역발전	지역 소멸을 극복하는 지역 맞춤형 규제혁신
행안부 업무보고 1-2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지역이 스스로 발전할 기회 보장



지방규제혁신의 체감도 제고

그간 지방규제혁신을 위한 노력에도 지역주민과 기업의 체감도가 낮았던 터라 실생활에서 체감이 가능한 규제혁신과 지자체의 자율적 규제혁신 역량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지역의 규제혁신 체감도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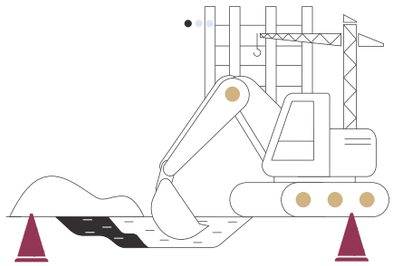
- 고금리,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건설사를 위한 맞춤형 규제 애로 해소를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 추구
- 국정운영 방향에 맞춘 준조세 자치법규 정비 및 지역별 규제 격차 조정으로 지역 현장의 규제혁신 체감도 제고
- 지역별 핵심과제 발굴 후, 중앙-지방의 협력이 필요한 과제에 규제책임관을 지정, 규제개선 전 과정에 참여토록 하여 효과성과 책임성 강화
- 인허가·공장 증설 등 기업 관련 중앙부처(산업부, 중기부)의 법령 유권해석 사례 분석 후 홈페이지(내고장알리미) 게시하여 편리성 확대

지자체의 규제혁신 역량 지원

- 지방규제혁신을 위한 지자체별 노력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정성지표 신설 및 전문가 평가 포함으로 공정성 강화
- 신설·강화 자치법규 제·개정 시 활용 가능한 표준형 규제영향분석서 및 등록규제 관리를 위한 체크리스트 배포
- 5년 이상 개정하지 않은 규제,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규제 등 조례 내의 등록규제 일제정비 추진 및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제공
- 지자체 담당자 교육, 지방규제혁신 진흥책 수립, 지자체의 규제 관련 자문 수요 등을 담당할 지방규제혁신 지원체계 구축

지역 현장이 원하는 규제의 발굴 및 검토

지자체를 활용한 통상적인 규제발굴에서 벗어나
업종협회, 행정심판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국민 등
규제발굴 채널을 확대하여 규제혁신의 사각지대 해소에 집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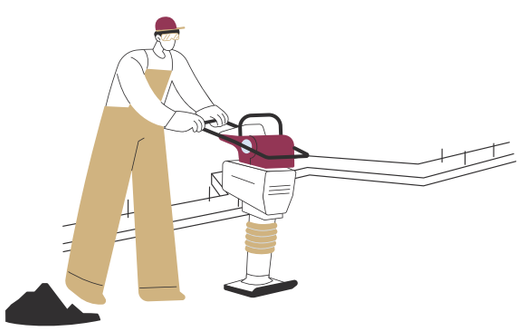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중앙부처 규제개선 과제 발굴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자체 및 지역기업이 개선을 요구하는 산업·환경·고용 등 중앙부처 덩어리규제 발굴 및 집중 해소하였다. 반기마다 지자체 건의과제를 접수하고 규제개선 필요성·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중점과제를 선정, 부처 협의를 추진하였다. 부처 불수용과제 중 개선이 시급하고 파급력이 높은 과제에 대해 현장 협의회, 지방규제혁신위원회 등을 통해 속도감 있게 해결을 모색하였다. 부처 수용과제에 대해 국민이 규제개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부처 규제개선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독려하였다.

상하반기 건의과제 및 개선 현황(2024년 12월 말 기준)

구분	상반기	하반기	계
지자체 건의(건)	767건	955건	1,722건
부처 협의(건)	655건	945건	1,600건
수용(건)	79건 (수용 39, 일부수용 40)	133건 (수용 58, 일부수용 75)	212건 (수용 97, 일부수용 115)



지역건설사 맞춤형 규제 애로 해소를 위한 유관 협회와의 협업

지역건설사의 규제 애로 해소를 2024년 지방규제혁신 중점 분야로 선정하여 현장감 높은 지역건설사의 규제 애로 발굴을 위해 대한건설협회 등 유관 협회 및 지자체와의 협업 강화하였다.

유관 협회와의 협업 내용

대한상의

- 지역 상공업계의 생생한 규제 애로를 발굴하고 해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와 규제발굴 간담회(7.3.)
- 대구상의, 충남북부상의 등 지역 상공업계가 제출한 규제 애로 30건 발굴(8.23.)

건설협회 등

- 지역건설사가 겪고 있는 규제 애로 발굴을 위해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건설업 유관 기관과 협업 확대
- 대한건설협회 규제발굴 간담회(2.29.), 대한전문건설협회 간담회(3.13.)로 지역건설사의 규제 애로 52건 발굴

중기중앙회

- 중소기업 등이 겪는 규제 애로 발굴을 위해 중기중앙회 방문(10.18.)

촘촘한 규제발굴을 위한 발굴 채널 다각화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소상공인이 영업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에 제기한 행정심판 재결례를 분석하여 규제발굴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이에 지자체 및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와 협업체계 구축으로 재결례 중 법령 등 규제가 불합리하여 해소가 필요한 경우를 적극 발굴, 규제 비용 및 파급효과 등 심층 분석 후 부처 협의·위원회 안건 상정 등으로 해소하였다. 또한, 지역 상공업계 활성화를 위해 대한상공회의소와 규제발굴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상공업계 애로 사항 해결 및 규제 해소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전망하였다.

민생규제 개선 대국민 공모전 개최

국민 눈높이에 맞고 공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국민이 규제를 직접 발굴하고 개선 과정에 참여하는 대국민 공모를 추진하였다. 취업·일자리, 외국인 근로자, 국민안전 등 공모 분야를 정하여 규제발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참여도를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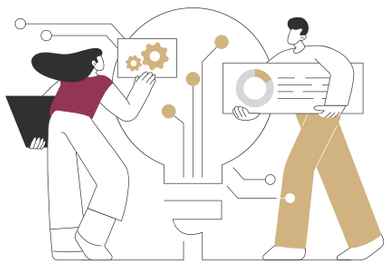
2024년 민생규제 개선과제 대국민 공모 개요

공모명	『2024년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
공모 기간	2024. 5. 1. ~ 5. 31.(31일간)
응모·제안자	일반 국민 누구나 가능
공모 주제	취업·일자리, 외국인 근로자의 정착·고용, 국민안전 등의 분야에서 민생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시상	**행안부 장관상**(20점) 및 부상품 **최우수상**(1명, 100만 원 상당) **우수상**(2명, 50만 원 상당) **장려상**(17명, 10만 원 상당)



공모 분야 및 과제(예시)	분야	과제(예시)
	취업·일자리	청년·경력 단절자·노인 등의 취업에 불합리한 규제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의 정착, 고용 등을 저해하는 규제
	국민안전	소방, 보건, 환경 등의 분야에서 국민안전을 저해하는 규제

접수된 총 865건의 과제는 요건 심사, 시-도 교차 심사를 통하여 50건이 선별되고, 전문가 평가와 소관 부처의 수용 여부를 반영해 수상 후보작 31건이 선정되었다. 수상 후보작은 소통24에서 10일간 공개 검증을 거쳐 우수과제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수상작 16건이 결정되었다.



지자체 건의과제 심층 분석으로 지역별 핵심과제 선정

2023년 미해결과제 및 2024년 시도별 건의과제 등에서 시급성·파급력을 감안하여 지역별 핵심과제를 선정(50건)하여 집중 논의 및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다. 지자체가 발굴한 규제 중 지역경제를 저해하거나 주민 생활에 큰 부담이 되는 규제 등을 선별하여 지역별 핵심과제로 선정하였고, 권역별 핵심과제에 대하여 지방규제혁신위원회 민간위원 중 책임위원을 선정하여 과제를 할당, 심층 검토 등으로 규제 해결의 논리를 강화하였다. 규제책임관과 연계하여 지역별 핵심과제에 대한 주요 현안 파악, 규제 애로 현장 방문 및 부처 소통 등을 통해 해결 방안을 협의하였다.

지역별 주요 핵심과제

지자체	과제명	소관부처
전남	해사시계 규제 완화로 섬 주민 정주여건 개선	해수부
경기	지역특구법 규제특례 외국인 교원 임용 자격 완화	중기부
충북	「산업입지개발법」상 공공시설에 주차장 포함	국토부
경기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 지원	보훈부
전북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완화 및 세분화	중기부
강원	스마트 양식산업 산업단지 입주 관련 규제 완화	산업부
경북	기초자치단체에 일반산업단지 지정 권한 위임	국토부
인천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시간 현실화	국토부
경기	택시 사업구역 조정	국토부

발굴규제의 심층 분석을 위한 전문연구기관 협업 강화

2023년 12월, 지방규제혁신 업무에 관한 전문적 조사·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연구기관으로 지방행정연구원 내 지방규제연구센터를 설치하였다. 지자체 발굴규제 등의 심층 검토 및 전문적 분석 기능 수행을 담당하며 발굴규제의 품질 제고 및 조정 절차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중요 과제에 대해 부처 협의, 위원회 안건 상정 전 필수 단계로 설정되었다. 지방규제연구센터는 비용-편익 분석을 통한 규제의 경제학적 접근, 규제 해소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 등 소관 부처 설득을 위한 다양한 논리 도출을 지원한다.

체계적 지방규제혁신 추진을 위한 '지방규제혁신 전략 방안' 연구

단년도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에 입각한 업무 추진으로 중장기적 관점의 지방규제혁신을 위한 비전 및 전략이 부재한 문제가 있었다. 현재 지방규제혁신 추진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업무 추진에 필요한 거시적 전략 목표, 추진 방향 및 세부 과제 도출이 필요함에 따라 '지방규제혁신 전략 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지방규제혁신 전략 방안을 마련하여 규제혁신 체감도 제고 및 지자체와 연계한 지속 가능한 추진체계를 확립한 것이었다. 법령 등 업무 추진 근거를 확보함으로써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조정 권한 확대 및 내실 있는 지방규제혁신 추진이 가능하였다.

'지방규제혁신 전략 방안' 정책연구용역 착수 보고회

기간 6.10.(월) 14:00~15:00

장소 중앙동 회의실

참석 지방규제연구센터(지방행정연구원), 지방규제혁신과 등

내용 지방규제혁신과 업무 추진의 방향을 설정하고, 내실 있는 지방규제혁신 추진체계의 확립을 위한 전략 방안 연구 용역 착수 보고





규제혁신을 위한 적극적 활동

규제혁신의 타당성을 보강하기 위한 규제 현장 방문,
지자체·지방규제개혁위원회 협업 확대 및 논리성 확보를 위한
발굴규제의 심층 분석 등 전문연구기관과의 협업체를 강화하였다.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책임위원의 규제 현장 방문

지자체 건의과제 등에 대하여 규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규제 해소의 필요성과 타당성 논리를 보강하였다. 특히 권역별 핵심과제에 대하여 지방규제혁신위원회 민간위원 중 책임위원을 선정하여 과제를 할당, 현장 방문을 통한 심층 검토로 규제 해결 논리를 강화하였다.

상반기 규제혁신 타당성 및 논리 보강을 위한 현장 방문 사례



경상북도(1.2.)
- 규제개선 현장 간담회



경상남도(1.29.)
- 수용성 절삭유 사용 기업은 폐수 배출 제한지역 내 신규 산단 입주가 불가능한 상황, 규제 현장 방문 및 건의 사항 청취

태백시(1.31.)
- 강원 지역의 석탄 경석 규제 관련 진행 상황 논의 및 선탄장 방문

충청남도(2.27.)
-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스마트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토지 수용 관련 규제 건의 사항 제출, 부지 방문 등으로 규제 해법 논의

제주도(3.5.~3.6.)
- 수도법에 따른 공장 설립 제한 규제 완화 건의 사항 청취

태백시(4.8.)
- 강원 지역의 석탄 경석 적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의 규제 애로를 청취함으로써 규제개선의 타당성 확보



창원시(4.26.)
-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자가측정 주기 완화 규제안건 관련하여 해당 사업장 직접 방문, 규제안건 내용 파악



하반기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책임위원 현장 방문 사례

책임위원	일시/장소	안건명	비고
원소연	7.12.(금)/안산	지역특구법 규제특례 외국인 교원 임용 자격 완화	
배영임	7.29.(월)/인천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시간 개선	
신성욱	8. 2.(금)/안동	햄프 산업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법 개정 논의	
임현정	8. 8.(목)/양양	스마트 양식산업 산업단지 입주 관련 규제 완화	
김우철	8. 9.(금)/목포	해사시계 규제 완화로 섬 주민 정주여건 개선	제16·17차 위원회
정준영	8. 9.(금)/서울	법인택시 면허 기준 대수 규제 완화 현장 논의	
탁현우	8.12.(목)/청주	「산업입지개발법」상 공공시설에 주차장 포함	
김민영	8.29.(목)/정읍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영양사 배치 규제개선	제16차 위원회
최인수	9. 6.(금)/파주	군 협의 조건부 이행에 따른 용도지역 건폐율 규제 완화	



규제 애로 현장 방문(8.2. 안동)



규제개선 현장 간담회(8.9. 목포)



규제 애로 현장 방문(8.8. 강릉, 양양)



규제 애로 현장 방문(8.29. 정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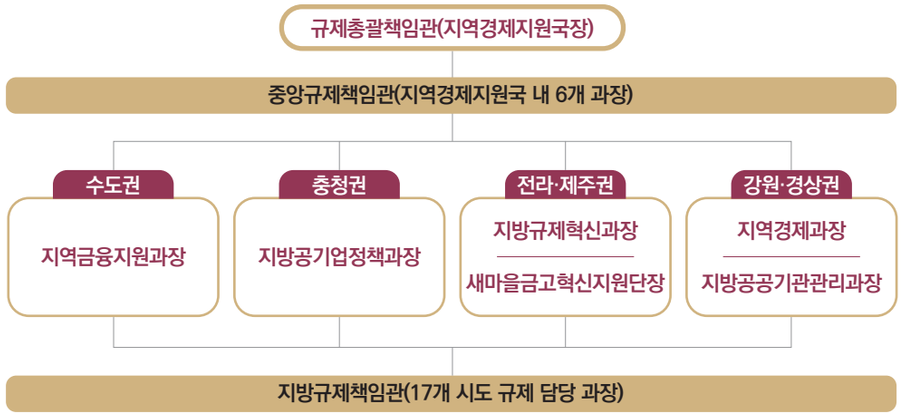




규제 애로 현장 방문(9.6. 파주)

규제책임관 지정·운영을 통한 지역별 핵심과제 해소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규제를 발굴해도 지역에서 소관 부처에 규제개선을 직접 건의할 경우, 수용률이 낮았다. 그래서 규제 수용률 제고를 위해 지자체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중앙부처인 행안부의 지자체-부처 간 중개 역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24년 5월, 행안부·지자체 간부를 지정하여 책임관으로 활동하도록 하는 규제책임관을 도입하였다. 지역경제지원국 국장을 규제총괄책임관으로, 과장을 중앙규제책임관으로, 시·도 규제업무 담당 과장을 지방규제책임관으로 지정하였다.



중앙규제책임관은 현안과제에 대한 현장 점검 및 부처 소통 등 규제개선을 지원하고, 필요하면 지방규제혁신위원회에 참석하여 소관 규제의 개선 필요성을 제시한다. 지방규제책임관은 현행 시도 규제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현장의 규제개선 목소리 청취 및 핵심규제 발굴을 수행한다.

중앙규제책임관 규제 현장 방문 사례

사례

- **전북 전주**(5.17. / 지방규제혁신과장) : 도로굴착사업 불가 사유 규제 완화
- **전남 함평**(5.17. / 새마을금고혁신지원단장) : 농어촌지역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 **대구 중구**(5.21. / 지역경제과장) :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규제개선
- **세종**(5.23. / 지방공기업정책과장) : 국가산단 편입토지 내 축산농가 폐업 보상
- **울산 중구**(5.28. / 지방공공기관관리과장) : 태화강 국가정원 도시민박업 운영 범위 확대
- **제주**(7.15. / 지방규제혁신과장) : 공장 설립 승인 범위 확대(지하수 취수시설 인근) 규제 완화
- **서울**(7.17. / 지방규제혁신과장) : 도시자연공원구역 행위 제한 높이 기준(12m) 개선
- **목포**(8.9. / 지방규제혁신과장) : 섬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해사시계 규제 완화
- **삼척**(10.11. / 지방규제혁신과장) : 수소 융복합 충전시설 관련 규제 완화


전북 전주(5.17.)


전남 함평(5.17.)


대구 중구(5.21.)


세종(5.23.)


울산 중구(5.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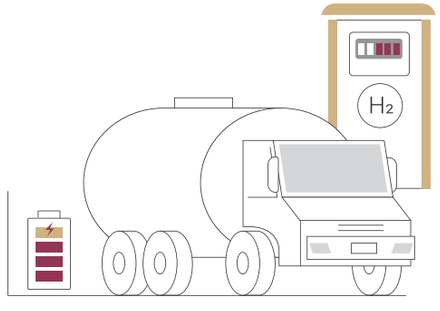

제주(7.15.)


서울(7.17.)



목포(8.9.)


삼척(10.11.)



성과 중심의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운영

2023년 5월 킥오프(kick-off) 성격의 제1차 위원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9회(2024년 총 11회) 개최하였다.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지역 현장의 규제 애로에 대한 전문적 검토·분석을 통해 실질적 대안 마련 및 소관 부처에 개선 권고하며 규제혁신의 속도감을 제고하였다. 특히 현장 방문, 실무 협의 등 위원회를 통한 규제개선 해결 노력으로 '건설업 외국인력 활용 규제 개선' 등 총 11건(상반기 4건, 하반기 7건)의 규제개선을 완료하였고, 추진 성과는 반기별로 국조실의 규제개혁위원회에 공유하였다.

중앙규제 → 입지·고용 등 핵심규제에 대해 전문적 검토·분석을 통해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고 소관 부처에 개선 권고

지방규제 → 자치법규규제, 그림자·행태규제 등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발굴하여 지자체 현황 파악 및 조사·연구 등을 거쳐 정비 방안 마련

2024년 지방규제혁신위원회 개최 현황


제9차('24.2.16.)


제10차('24.3.22.)


제11차('24.4.19.)


제12차('24.5.31.)


제13차('24.6.28.)


제14차('24.7.19.)


제15차('24.8.14.)


제16차('24.9.26.)


제17차('24.10.18.)


제18차('24.11.28.)


제19차('24.12.20.)

차수	일자·장소	안건	회의 결과	참석
9	2024. 2.16. (서울)	보고 '24년 위원회 운영계획 및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 심의 농어촌민박 연면적 제한 완화 심의 빈집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심의 석탄 경석의 산업 원료화 활용 방안 마련	원안 접수 수용 수용 재심의	14명 (민간9, 정부5)
10	2024. 3.22. (서울)	보고 책임위원 선정 결과 및 상반기 운영 방안 심의 전기사업 허가 의견수렴 절차 개선 심의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기존 폐기물 처리시설 현대화 심의 석탄 경석의 산업 원료화 활용 방안 마련	원안 접수 재심의 재심의 재심의	13명 (민간9, 정부4)
11	2024. 4.19. (서울)	보고 석탄 경석의 산업 원료화 활용 방안 마련 보고 빈집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보고 전기사업 허가 의견수렴 절차 개선 심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예외 조항 완화	재심의 원안 접수 수용 재심의	11명 (민간6, 정부5)
12	2024. 5.31. (서울)	심의 석탄 경석의 산업 원료화 활용 방안 마련 심의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 입소기한 제한 완화 보고 농어촌민박 연면적 제한 완화 규제개선 성과 보고 맞춤형 지역건설사 규제 애로 해소 방안 보고 규제책임관 및 책임위원 현장 방문 운영계획	수용 재심의 원안 접수 원안 접수 원안 접수	13명 (민간8, 정부5)
13	2024. 6.28. (전주)	보고 석탄 경석 훈령(환경부) 및 지자체 조례(강원, 태백) 상세 내용 보고 지역건설사 규제 애로 해소 결과 심의 도로굴착사업 불가 사유 규제 완화	원안 접수 원안 접수 재심의	9명 (민간6, 정부3)
14	2024. 7.19. (서울)	보고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 현실화 보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적용 범위 확대 심의 건설업 외국인력 활용 규제개선 심의 공익사업 편입토지 축산업 폐업 보상 기준 개선	원안 접수 원안 접수 수용 재심의	12명 (민간7, 정부5)
15	2024. 8.14. (서울)	보고 도로굴착사업 불가 사유 규제 완화 검토 방향 보고(2차) 심의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기존 폐기물 처리시설 현대화(2차) 심의 농어촌지역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심의 묘지공원 내 동물장묘시설 설치 허용	원안 접수 수용 재심의 수용 곤란	10명 (민간5, 정부5)
16	2024. 9.26. (서울)	보고 공익사업 편입토지 축산업 폐업 보상 기준 개선(2차) 심의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영양사 배치 기준 개선 심의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인증 사업장 기준 완화 심의 해사시계 규제 완화로 섬 주민 정주여건 개선	원안 접수 종결 재심의 재심의	11명 (민간7, 정부4)
17	2024. 10.18. (서울)	보고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인증 사업장 기준 완화 이행계획 보고 심의 여객선 출항통제 시계 제한 완화 심의 농어촌지역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원안 접수 재심의 재심의	11명 (민간7, 정부4)
18	2024. 11.28. (제주)	보고 관광 활성화를 위한 도시민박업 제도 개선(안) 보고 심의 축산악취 단속 세부 규정 개선 심의 제주도 취수시설 공장 설립 제한 지역 규제 완화	원안 접수 수용 재심의	10명 (민간8, 정부2)
19	2024. 12.20. (서울)	보고 농어촌지역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검토 보고 보고 '24년 자치법규 지방규제 일제정비 결과 보고 보고 '25년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운영계획 보고	원안 접수 원안 접수 원안 접수	12명 (민간7, 정부5)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한 규제 검토 사전 설명회 및 후속 조치 추진

지방규제혁신위원회 개최 전 사전 설명회를 통해 건의 지자체와 안건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규제 소관 부처의 대응 논리를 점검하였다. 위원회 수용 안건에 대해서도 후속 조치를 위한 컨설팅(11.1. 법제처) 등에 직접 참석하여 규제의 원활한 개선과 법령 개정 등의 이행을 지원하였다.

서울, 광주, 전남(함평)

8.7.(수)

- 안건1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기존 폐기물 처리시설 현대화
- 안건2 농어촌지역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 안건3 묘지공원 내 동물장묘시설 설치 허용

전남, 전북(정읍), 경남(합천)

9.12.(목)

- 안건1 해사시계 규제 완화로 섬 주민 정주여건 개선
- 안건2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영양사 배치 기준 개선
- 안건3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인증 사업장 기준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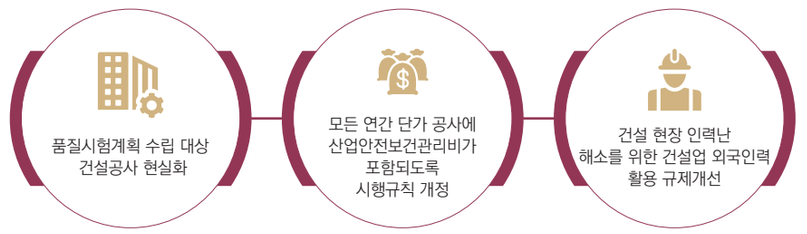
어려움을 겪는 지역건설사를 위한 규제혁신 현장 토론회 개최



지역건설사 규제혁신 현장 토론회(6.26. 충북 오송)

2024년 6월에는 금리,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지역건설사가 겪는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규제혁신 현장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지역건설사에게 불합리한 규제개선 주요 내용



규제 해소 과정의 모니터링 강화

위원회 등 운영으로 규제개선 건의가 수용된 경우, 법령·시행규칙·지침 개정 등 소관 부처의 규제 해소 이행 여부를 반기별로 정기 점검하고 추진 독려하였다. 특히 지자체 규제개선 건의과제 중 중앙부처에서 수용(일부 수용 포함) 의견으로 회신한 총 310건을 대상으로 이행 점검하였다.

준조세 정비를 위한 지자체와의 협업 확대

준조세 원점 재검토를 추진하는 국정운영 방향에 맞춰 자치법규 내 정비 대상에 대하여 지자체, 지자체별 규제개혁위원회(지자체별로 신설·강화 규제심사 및 규제정책의 심의·조정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 협업을 확대하여 준조세 심층 검토 및 정비를 하였다. 특히 지자체 자치법규 내 준조세 규제 내용이 상이하므로 지자체 간 정보 공유 확대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하여 규제개선의 당위성을 확보하였다.

지자체 간 정보 공유 단계

1단계	광역지자체 주도로 광역 내 기초지자체 간 정비 대상 규제 관련 정보 교환 및 교차 검증	→ 2단계	행안부 주도로 광역 간 교차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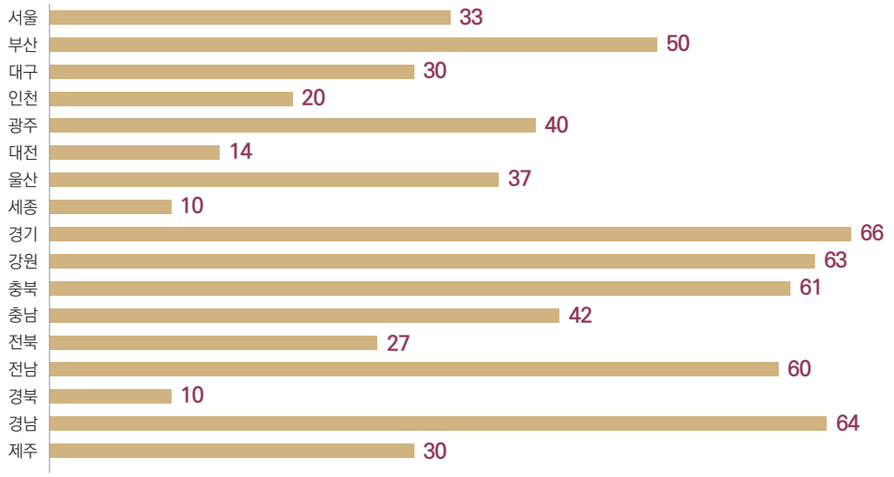
지자체와의 끊임없는 소통으로 정비 대상 준조세 등을 함께 검토하고 중간 점검 및 담당자 간담회(10.17.)로 정비의 방향성을 지속 확인하였다.
또한, 규제의 개선 타당성 확보를 위한 지방규제개혁위원회 협업 확대 및 지방규제혁신위원회에 정비 결과 보고로 미흡한 지자체에 이행 권고를 실시하였다.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으로 지역기업의 규제 애로 해소

지자체별로 규제·사업부서 및 전문가로 현장 방문단을 구성하여 기업·생업 현장 657곳을 찾아가 규제 애로를 청취하고 규제혁신을 추진하도록 지원하였다. 현재 찾아가는 규제사냥단(전남, 중소기업·소상공인 애로 해소), 기업호민관(강원, 기업 민생규제 발굴·해소), 찾아가는 규제상담실(경남, 기업 애로 해소) 등 지역별로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별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실적(건수, 10월 기준)



지역별 활동 현황


찾아가는 규제사냥단 활동(전남, 6.4.)


기업호민관 활동(강원, 2.16.)



찾아가는 규제상담실 활동(경남, 3.21.)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충남, 4.23.)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부산, 5.2.)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전북, 10.4.)

지자체의 규제혁신 활동 지원



인허가·공장 증설 등 기업이 겪는 규제 분야의 유권해석 사례 확대

지자체 대상 산업부, 중기부 소관 법령의 유권해석 사례 제출을 요청하여 총 73건의 유권해석 사례를 수합하였다. 소관 부처 대상 사례별 내용 확인을 요청 후 타 지자체 적용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47건을 내고장알리미(지방규제혁신 관련 자료, 정보 등을 제공하는 웹사이트(www.laiis.go.kr)) 게시 완료, 공유·확산하여 지방공무원의 적극적인 민원 처리를 통한 그림자·행태규제 해소를 하였다.

내고장알리미 게시 완료 건수

법령	소관 부처	건수
합계		47
1)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30
2) 계량에 관한 법률		2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3
4) 전기공사업법		2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1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중소벤처기업부	5
7)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4

자치단체 규제업무 매뉴얼 개정

지자체가 규제업무에 참조할 수 있도록 행정규제 개념, 규제 절차, 규제 DB시스템 활용 등 규제업무의 전반에 대한 매뉴얼을 개정 발간 및 배포하였다. 개정된 자치단체 규제업무 매뉴얼은 내고장알리미 내 지방규제혁신 정보 제공 게시판에 업로드하여 지자체 담당자 등의 접근성을 확대하였다.



2024 자치단체 규제업무 매뉴얼



내고장알리미 내 지방규제혁신 홍보 게시판

2024년 지방규제혁신 성과 평가 실시

행정안전부 주재 회의 참석 횟수, TF 운영 실적 등 정량평가 위주의 지표설계에서 벗어나 평가지표를 다양화(정량지표(80%), 정성지표(20%)) 및 다양한 가점 신설로 지자체 규제혁신의 저변을 확대하여 지자체의 총체적 규제혁신을 유도하였다.



정성평가

지자체의 규제여건을 분석하고,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규제혁신을 위한 사업을 도출하도록 유도, 사업의 현실성 등을 함께 분석

정량평가

신규과제 발굴 노력, 개선 성과, 불수용과제에 대한 개선 노력 등 지자체의 규제혁신 노력을 총량적으로 평가

인센티브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90억 원)를 제공하여 지자체의 규제혁신과 이를 위한 역량 제고를 지속적으로 독려

덩어리규제 집중 해소 및 그림자·행태규제 개선사례

지자체가 건의한 중앙부처 덩어리규제(중앙규제)의 집중 해소 및 지자체 자치법규 내 규제와 그림자·행태규제(지방규제) 개선으로 피부로 체감하는 지방규제혁신을 추진하였다.



법령 등 중앙부처 규제의 해소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건설업

지역건설사를 위한 다방면의 규제개선으로 경영상 애로 해소 및 비용 절감을 지원하였다.

기 존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 방지를 위해 건설공사 건설근로자의 출퇴근을 기록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실시('24.1.1.)로 3억 원 미만의 지역건설사는 의무적으로 카드 단말기를 구입해야 하나, 전자카드 단말기 정산 부담, 동시에 다수 현장이 있는 경우 관리인력 부족 및 건설근로자의 전자카드 미소지로 사용 불편 등을 호소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인증 사업장 기준 완화

전문건설협회, 경남 합천군 → 고용부

개 선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가 어려운 건설공사에 구체적 예외 인정 가이드라인을 마련(고용부)

효 과

중소·지역건설사의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및 운영으로 인한 경제적·행정적 부담 경감



관광업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던 도시민박업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규제개선으로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을 지원하였다.

기 존

현행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는 도시지역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을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으로 규정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개정

충남 보령시 → 문체부

개 선

현행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바목 외국인 관광객을 국내외 관광객으로 개정

효 과

내국인 관광객의 증가로 다양한 형태의 숙박시설에 대한 수요가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

농·임업

도심형 스마트팜 농업인 인정 등으로 수혜 대상자를 확대하였다.

기 존

도심형 스마트팜은 새로운 형태의 농업 방식이나, 현재 관련 법령은 농지 등 기존의 기준에 따라 농업인(농업경영체)을 인정

도심형 스마트팜 농업인 인정

세종시 → 농림부

개 선

도시형 스마트팜도 일정 규모 이상 경영·경작 시 농업인 인정 또는 농업인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 개선

효 과

농경지가 없거나 부족한 도심지역에서의 실내 농업을 활성화하여 푸드마일리지를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차세대 농업 육성

기 존

임업직불금 지원 대상을 임산물의 연간 판매 금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임업인으로 제한하는데, 판매 금액 증빙서류(거래 내역서, 카드 영수증 등) 제출이 어려운 실정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직불금 지급 기준 완화

울산 울주군 → 산림청

개 선

임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투입된 관리 및 생산 비용을 지급 기준으로 변경·보완

효 과

판매 금액 기준 개선을 통한 임업직불금 지원 대상 확대 및 임가 소득 보전

산업

전기사업 허가 의견수렴 절차 개선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지역 내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였다.

기 존

태양광·풍력 등을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경우, 사전 고지를 통해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사업 내용에 따라 공고 기한이 상이해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사전에 알기 어렵고, 허가 신청 후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에 따라 신청 취하 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재신청해야 하는 경우 등이 발생

전기사업 허가 의견수렴 절차 개선

충북 음성군 → 산업부

개 선

태양광사업 인허가 매뉴얼 작성 및 권역별 교육 실시로 사전 고지 사업 대상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추진

효 과

태양광·풍력 등 인허가 사업 활성화 및 민원인 편의 향상

기타

공익사업 편입토지의 축산업 폐업 보상 기준 개선 등 규제개선을 통한 지역주민의 혜택을 확대하였다.

기 존

축산업 폐업 기준(시장 또는 군수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하는 경우)이 명확하지 않아 폐업이 아닌 휴업 보상이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법제화 요구

공익사업 편입토지 축산업 폐업 보상 기준 개선

세종시 → 국토부

개 선

국토부는 폐업 인정 사례에 대한 유권해석('24.8.27.)을 통해 객관적 사실 가이드라인 제공, 세종시는 사업시행자(LH)와 구체적 보상(안) 마련

효 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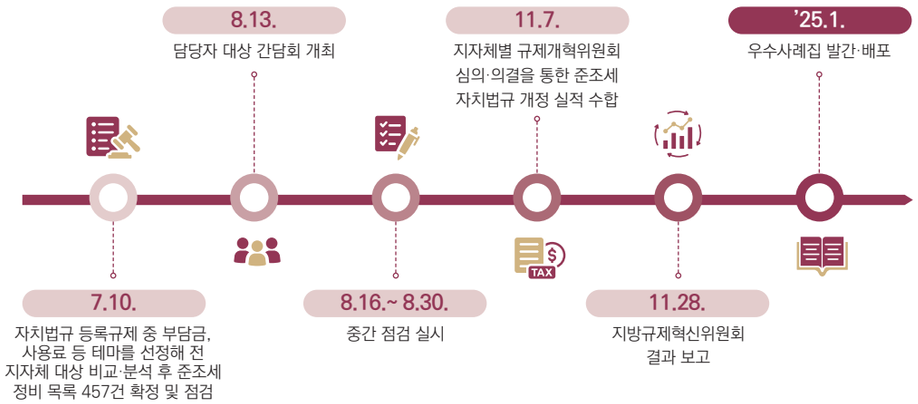
공익사업 편입토지의 축산업 폐업 신속 보상

이외에도 2024년 10월 말 기준으로 지자체가 발굴한 중앙부처 법령 등 덩어리규제 총 73건이 해소되었다. 지자체와 지역주민·기업이 협업하여 산업·환경·고용 등 중앙부처 덩어리 규제를 발굴하고 집중 해소를 위하여 노력한 성과였다. 중요도·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중점과제는 실무자 협의·부처 협의 등을 통해 신속 해결을 추진하였다. 소관 부처의 불수용 과제 중 개선이 시급하고 파급력이 높은 과제를 현장 협의회·지방규제혁신위원회 등을 통하여 끝까지 해결하였다.

자치법규 속 규제의 정비를 통한 민생 분야 지원

자치법규 내 부담금·사용료 등 준조세 관련 규제의 합리적 격차 조정으로 지역주민과 기업의 과다한 부담을 완화하였다.

격차 조정 단계



준조세 정비 사례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기 존

제30조(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공유재산에 설치 시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규정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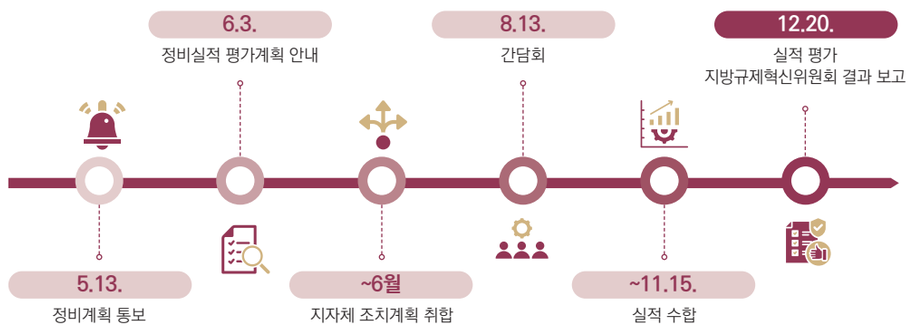
개 선

제30조(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④ 〈신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3제5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100분의 80을 감경할 수 있다.

또한,「2024년 지자체 등록규제 일제정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 이후 지자체 등록규제 중 오래된 규제를 재검토하고 시스템 정비를 위한 등록규제 일제정비를 실시하였다.

일제정비 실시 단계



그리고 10개 우수 지자체 선정하여 인센티브(지자체별 특별교부세 1억 원씩, 총 10억 원)을 지급하였다.

지자체 등록규제 일제정비 인센티브 규모 및 지원 대상

구분	1차 선정					2차 선정	
	243개 지자체				인센티브	235개 지자체 (8개 지자체 제외)	인센티브
	광역 (17개)	시 (75개)	군 (82개)	구 (69개)			
1, 2순위	2	2	2	2	각 1억	2	각 1억
계	2	2	2	2	8억	2	2억

지자체의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독려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규제 해소 우수사례 선정·확산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에 전파, 정책 개선 방향 및 업무 지침을 제공하였다.



그리하여 지자체가 적극행정을 통해 그림자·행태규제를 직접 해소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2023년 4분기 지자체 적극행정 규제혁신 총 611건(신규 581/벤치마킹 30), 2024년 1~3분기 지자체 적극행정 성과사례 총 1,890건(신규 1,667/벤치마킹 223)이 집계되었다.

시·도별 제출 현황

2024년 1분기

시·도	제출건(주요, 벤치)	시·도	제출건(주요, 벤치)	시·도	제출건(주요, 벤치)
계	518(89, 60)	대전	7(3, -)	충남	38(3, 2)
서울	16(9, -)	울산	8(4, -)	전북	6(1, -)
부산	26(7, 1)	세종	4(2, -)	전남	45(9, 14)
대구	13(5, 2)	경기	180(10, 30)	경북	39(8, 5)
인천	19(6, 2)	강원	23(7, 3)	경남	67(3, 1)
광주	10(4, -)	충북	12(5, -)	제주	5(3, -)

2024년 2분기

시·도	제출건(주요, 벤치)	시·도	제출건(주요, 벤치)	시·도	제출건(주요, 벤치)
계	645(104, 80)	대전	14(4, -)	충남	36(8, 4)
서울	42(11, 1)	울산	21(4, 1)	전북	24(6, 4)
부산	27(6, 1)	세종	3(2, 1)	전남	64(9, 10)
대구	26(5, -)	경기	209(10, 39)	경북	35(9, 9)
인천	24(7, 2)	강원	22(7, 2)	경남	56(3, 1)
광주	14(5, 3)	충북	23(5, 2)	제주	5(3, -)

2024년 3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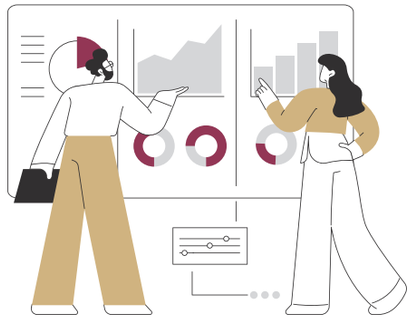
시·도	제출건(주요, 벤치)	시·도	제출건(주요, 벤치)	시·도	제출건(주요, 벤치)
계	727(109, 83)	대전	12(4, 1)	충남	50(9, 2)
서울	79(9, 2)	울산	23(4, 2)	전북	39(7, 6)
부산	37(8, 1)	세종	2(1, -)	전남	93(9, 12)
대구	49(5, -)	경기	95(10, 17)	경북	52(8, 20)
인천	36(6, 4)	강원	61(9, 2)	경남	39(7, 4)
광주	20(5, 4)	충북	35(5, 6)	제주	5(3, -)

분기별로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규제 혁신 우수사례를 발굴(2023년 4분기 우수사례 7건 선정, 2024년 3분기까지 우수사례 17건 선정)하고, 언론 보도, 카드뉴스 등을 통해 전국 지자체 전파 및 홍보하였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시기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우수사례 내용	지자체
2023년 4분기 (7건)	① 공장의 창고용 가설건축물 인접대지 이격거리 삭제	충북 청주
	② 강동 일반산업단지 부분 준공	경북 경주
	③ 수소충전소 입지규제 개선	제주 본청
	④ 공공하수(2차 처리수) 재이용으로 냉각탑 없는 열병합발전소 건립	서울 본청
	⑤ 하수도 유형자산 전수조사를 통한 원가 절감 및 하수도 요금 부담 완화	부산 본청
	⑥ 공유재산 납부의 관행 개선으로 전기차 급속 충전시설 설치 걸림돌 해소	경기 수원
	⑦ 건축물관리자 확대 인정을 통한 빈집 정비사업 추진 가속화	전북 김제
2024년 1분기 (7건)	① 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가 막힌 기업 애로 해소	대구 본청
	② 한정면허를 활용한 학생 전용 노선버스 개통으로 통학환경 개선	경기 파주
	③ 선불형 동백패스 도입으로 소외계층 교통 분야 복지 혜택 증진	부산 본청
	④ 전국 최초 스마트 응급의료 시스템 구축으로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	충북 본청
	⑤ GIS 기반 CCTV 영상 정보 검색 서비스 운영으로 시민 생명과 재산 보호	울산 북구
	⑥ 선제적인 자치법규 규제개선으로 빈집 정비사업 걸림돌 제거	세종 본청
	⑦ 적극적인 공유재산 용도폐지 지침 마련으로 행정 처리 혼란 해소	경기 본청
2024년 2분기 (5건)	① 2년 연속 조업규제 해소로 여의도 면적 61배 조업어장 확보	인천 본청
	② 운행 중지 철도 부지를 공장용지로 활용해 기업경쟁력 강화	울산 본청
	③ 비대면 알선조정제도 도입으로 상가임대차 분쟁 조정 활성화	서울 본청
	④ 저소득 유·청소년 스포츠 이용권 제도 개선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강원 본청
	⑤ 소규모 건축물 해체 절차 완화로 빈집 정비사업 활성화 도모	경북 의성
2024년 3분기 (5건)	① 22년간 묶인, 석탄 경석의 폐기물 규제 해소	강원 본청
	② 미활용 산업용지의 주차장·야적장 임시 사용 허용 개선	울산 본청
	③ 규제혁신을 통한 전국 최초 우분 연료화 추진	전북 본청
	④ 휴·폐업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업무 처리 개선	부산 본청
	⑤ “시간제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으로 시민 불편 해소 및 교통 흐름 개선	경북 구미

지방규제혁신 확산 및 체감도 제고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2024년 한 해 동안의 규제개선 사례 중 지자체 노력과 파급력 등이 우수한 대표 사례를 선정·시상하여 지자체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벤치마킹을 독려하고자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 2024년 규제개선 성과 중 현장성·파급력이 높은 과제 105개를 선별하고 행안부-시도 교차 심사, 전문가 심사를 거쳐 수상 대상 17건을 선정하였다. 경진대회 현장에서 지자체는 규제혁신 과정, 파급효과 등을 직접 발표하였고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수상 등급이 결정되었다.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요

기간 및 장소	9.24.(화) 13:30~17:00 / 대구 엑스코(EXCO)
참석	지방재정경제실장, 지역경제지원국장, 심사위원, 사례 발표 기관(10개), 행안부-지자체 공무원, 일반 국민 등 200여 명
주요내용	사례 발표, 현장 심사·시상(대상1, 최우수2, 우수7 / 장려7은 개별 시상) ※ 대상(1)은 국무총리 표창, 최우수(2)·우수(7)·장려(7)는 행안부 장관 표창 수여 ※ 지역경제혁신 박람회와 연계하여 '규제혁신 홍보부스' 운영(3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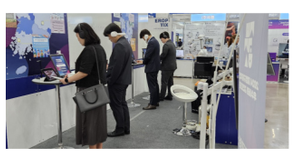


지방재정경제실장 개회사


수상 기관



지자체 발표(강원)


홍보부스 운영



챌린지 영상(지자체)


챌린지영상 국민응원상 수상(전남, 울산)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작

수상	사례 내용	지자체
대상(1)	• 22년간 묶인, 석탄 경석의 폐기물 규제 해소	강원 본청
최우수(2)	• 소비자가 먼저 반기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대구 본청
	• 카페인 등 식품 기피 성분 표기 규제개선	경기 안양시
우수(7)	• 대덕특구 토지 이용 효율화(고밀도 개발)를 위한 「연구개발 특구법」 시행령 개정	대전 본청
	• 운행 중지 철도 부지를 활용한 공장용지 공급	울산 본청
	• 전국 최초! 빈집 규제 협업으로 불합리한 규제개선	세종 본청
	• 지방 소멸의 해답, 규제혁신에서 찾다 (산업단지 입주협약 권한 확대로 기업 수요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	경기 양주시
	• 농민 즉석판매 제조가공 탄소중립시대 로컬 판매 포문 열다 (소규모 농산물가공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충북 괴산군
	• 규제혁신으로 전국 최초 블루오션을 찾은 우분(소똥) 고체연료화	전북 본청
	• 세계인, 전남人이 되다! 외국인 비자 제도개선 등을 통한 인력난 해소! (외국인 근로자와 공존을 통해 농·어업과 조선산업 등 지역산업 활성화)	전남 본청
장려(7)	• 폐기물 배출 방법 개선으로 환경오염은 낮추고 주민 편의와 행정 효율을 높이다	대구 중구
	• 차이나타운특구 사증발급 매뉴얼 개정으로 외국인 요리사 고용 요건 완화	인천 중구
	• 빈집 방치를 초래하는 불합리한 재산세 제도 개혁	대전 서구
	• 미활용 산업용지 주차장·야적장 임시 사용을 위한 법령 개정	울산 본청
	• 제도적 허들을 넘어 학생 전용 통학순환버스의 길을 열다	경기 파주시
	• 산업단지 내 주차장 임대, 기업 애로 사항 해결을 넘어 법률 개정까지 1+1	충남 서산시
	• 선제적 규제개선으로 지속 가능한 이차전지 산업 성장 기반 마련	경북 포항시

2024년에는 현장 홍보부스 운영을 통해 지자체가 자체 제작한 우수사례 챌린지 영상을 홍보하였고, 경진대회 우수사례 발표·시상 내용을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지자체·국민과 실시간 공유하여 현장 국민 참여 및 홍보를 강화하였다. 또한, 카드뉴스 및 우수사례집 제작 등을 통해 사례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지방규제혁신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내고장알리미 정비

내고장알리미 홈페이지는 지방규제혁신의 의미와 추진 업무 등 정보 제공이 미흡하고 불필요한 신고게시판이 타 부처와 연계되어 있는 등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지방규제혁신의 의미와 업무 추진 흐름도 등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를 위한 카드뉴스 및 동영상과 우수사례집 등을 제공하도록 개선하였다.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운영 성과 및 규제개선 사례 홍보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출범 1주년을 맞이하여 기획기사·차관 기고문 등으로 지자체 규제 애로를 직접 해결하는 기관으로서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의 역할 및 성과를 집중 홍보하였다.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의 성과 및 향후 비전을 제시하여 지방규제혁신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제고하였다. 특히 위원회 성과 중 파급력이 높은 사례의 경우 보도자료를 발간하여 규제개선을 통한 변화와 혁신을 앞당기고 지자체 등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다. 중앙부처 규제 및 그림자·행태규제를 개선한 우수사례를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국민 이해도를 높이고 접근성을 강화하였다. 연간 규제혁신 사례 중 우수사례를 선별하여 상세한 규제개선 과정과 담당자 인터뷰 등을 포함한 2023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발간·배포(3월)함으로써 규제혁신 체감도를 제고하며 지자체의 벤치마킹을 유도하였다.

규제혁신 우수사례 카드뉴스 제작



2024년 2분기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





2024년 2분기 벤치마킹 사례





2024년 3분기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 카드뉴스



2024년 3분기 벤치마킹 사례

지방규제혁신에 대한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한 홍보 영상 제작

국민에게 친근한 방식으로 지방규제혁신을 홍보하기 위해 전 부서원이 참여하는 숏폼 영상 및 사례 중심의 스토리텔링 형식 홍보 영상을 제작하였다. 이를 유튜브·내고장알리미 등에 올려 국민의 관심도를 제고하고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현장 등에서 적극 활용하였다.

홍보 영상 제작





지규혁송 영상(숏폼)



스토리텔링 형식의 홍보 영상(혁신의 명수)



Part •

생활 불편 개선 우수사례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소통하며
생활 속 곳곳에서 과도한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와 그림자·행태규제를 적극 개선하고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갑니다.

경진대회 우수사례

최우수상 ___ 대구광역시

장 려 상 ___ 경기도 파주시, 대구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상북도 구미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경진대회 우수사례
최우수상

소비자가 먼저 반기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Brief Report

→ 현 황

유통산업구조가 오프라인 업체 간의 경쟁이 온라인 유통업과의 경쟁으로 변화하면서 다수의 점포가 폐점하는 등 대형유통업체 생존권 문제의 대두

→ 개 선

전국 최초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구·군 동시 평일 전환을 시행하여 시민 소비 만족도와 지역 내 소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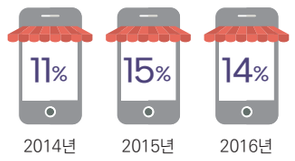
규제개선 배경 유통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의 위기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위하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2012년 도입되었으나 실제 기대했던 전통시장과 중소 유통업체의 매출 효과는 미미하였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의 급성장과 코로나19 이후 유통시장에서 온라인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유통시장의 경쟁 구도가 오프라인 업체 간이 아니라 오프라인과 온라인 유통업체의 경쟁으로 변화하며 대형유통업체의 생존권 문제가 대두되었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4개소 대형마트(이마트(시지, 감삼), 롯데마트 칠성, 홈플러스 대구)가 폐점하였는데 이는 일자리 감소, 상권 위축 및 지역 경기 침체로까지 이어져 경쟁 구도 고도화 및 오프라인 위주의 현 규제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온라인 쇼핑 거래액(통계청)



일요일 휴업 시 온라인 쇼핑으로 매출이 넘어가는 추세
(한국체인스토어협회 2017)



규제개선 과정 지속적인 협의로 의무휴업일의 평일 전환

대구광역시는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치는 경우에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이 아닌 날로 정할 수 있다는 「유통산업발전법 및 8개 구·군 조례」에 따라 의무휴업일의 평일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8개 구·군 회의 및 상인회·소상공인 단체 등 이해당사자와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간담회 개최 등 지속적인 협의를 실시하였다. 또한, 대형마트 지역 기여도 확대와 상생 협력 추진 등을 노력한 끝에 2022년 12월에는 시, 구·군, 대·중소 유통업계의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 체결을 이끌어냈다. 2023년 대구광역시는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8개 구·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심의를 거쳐 의무휴업일을 변경 고시하였다. 마침내 2월 10일,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구·군 동시 평일 전환을 시행하였다.

결과 및 기대효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역 유통업계 상생 협력 방향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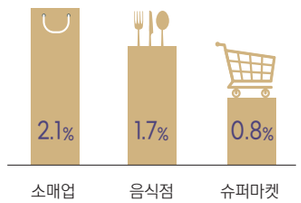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후 6개월(2023년 2월~7월) 동안 변화를 신용카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전년도 동기간과 비교 분석한 결과 대형마트 및 주요 소매업종 매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주요 소매업종 및 음식점, 전통시장 매출 증가(한국유통학회)

분류	2.4주 일요일	2.4주 월요일	전체 기간
전통시장	29.1% ↑	37.8% ↑	32.3% ↑
음식점	22.2% ↑	26.6% ↑	25.1% ↑
소매업종	15.2% ↑	21.2% ↑	19.8% ↑

특히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는 긍정 평가가 87.5%로 매우 높았으며 지역 외 소비는 감소하는 반면 지역 내 소비는 증가함으로써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대구광역시 지역 내 소비 증가율
(한국유통학회)



대구광역시의 규제개선 성과는 전국적으로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청주시(2023년 5월), 서울 서초구와 동대문구(2024년 1월), 부산광역시(2024년 5월)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였다. 이에 정부는 2024년 1월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한 결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전면 폐지를 결정하였다. 또한, 대구광역시는 앞으로 1대형마트-1전통시장 전담지원제, 상생실무위원회 구성 등 지역 유통업계 상생 협력 방안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진대회 우수사례
장 려 상

제도적 허들을 넘어 학생 전용 통학순환버스의 길을 열다

Brief Report

→ 현 황

현행 제도상 학교장만이 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으나 행정력의 부족으로 통학버스 운행이 차질을 빚으면서 학생들의 부담이 증가하였음

→ 개 선

학교장만 운행 가능했던 통학버스가 아니라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통학버스를 지방정부가 제공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환경을 조성함

규제개선 배경 — 현행 법령·제도적 한계로 발목 잡힌 통학버스 운행

파주시의 대중교통 부족과 열악한 통학환경은 많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과다한 통학 부담을 전가하는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특히 일선 학교에서는 예산과 행정력이 부족하여 통학버스 운행이 불가한 데다 현행 법령과 제도상 통학버스는 학교장만이 운행이 가능하고 교육청 주관 통학버스 운행이 불가한 문제가 있었다. 더군다나 파주시에서는 경직된 한정면허제도로 학생 전용 노선버스 운행 불가 인식이 팽배하였다. 이에 파주시는 기존 한정면허 인식의 전환과 지방정부가 운행하는 통학버스라는 새로운 방식의 도입에 나섰다.

규제개선 과정 — 현행 법령 해석의 인식 전환으로 한정면허제도 활용 해법 도출

기존 한정면허는 법령에 명시된 방식으로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파주시는 경직된 한정면허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긴 논의 끝에 한정면허 통학순환버스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정면허에 대한 현행 법령 해석의 인식 전환

구 분	기존 인식	파주형 학생 전용 통학순환버스
한정면허	관광지, 공항셔틀, 출퇴근 또는 심야 시간대 노선버스로만 활용 가능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업무의 범위(학생, 등하교 시간), 기간(최대 6년) 한정하여 활용 가능
공동운수협정	노선버스에서만 활용 가능	마을버스(한정) 등록, 노선버스화하여 공동운수협정 활용 가능
여객 한정	대중교통이므로 여객 한정 불가	한정면허이므로 학생으로만 업무 범위(여객)한정하여 통학환경 개선

파주시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를 설득하여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31개 시·군 통학순환버스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수차례 협의 끝에 저렴한 파주시 마을버스 요금(950원) 적용 및 통학버스 최초 환승체계 도입으로 학생 교통비 부담을 절감하였다. 파주형 학생 전용 통학순환버스는 '파프리카(Far free car)'라고 이름 붙여졌는데 파프리카는 기존 통학버스와 차별화를 위한 통학버스 브랜드로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버스'를 의미한다. 2024년 1월에는 파프리카가 경기도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에 가입 완료하며 통학버스 최초로 기존 대중교통체계에 편입되었다.

결과 및 기대효과 — 기존 통학버스와의 차별화를 통한 학생 교통복지 확대

파프리카는 오로지 학생만 탈 수 있는 노선버스로 파주시의 18개 모든 중고등학교를 순환 운행한다. 직장인들과 함께 타던 만원버스와 달리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지방정부가 직접 제공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통학 부담을 크게 경감하였다. 2자녀 학부모의 경우 한 달 교통비 부담이 무려 73.2%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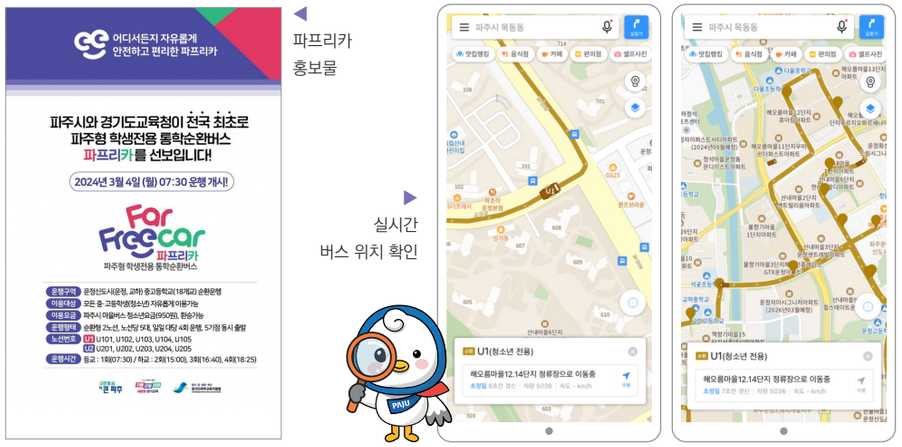
자체 셔틀버스와 파프리카의 교통비 비교

자체 셔틀버스 이용 시	파프리카 이용 시
1인당 15만 원(최소) 기준 2인 한 달 30만 원 이상 소요(등교만)	1인당 950원, 1일 2회(등·하교) 한 달 2인 83,600원 소요

1개월(22일 기준) 교통비 부담

예산에서도 파프리카는 10억 원이 소요되어 기존의 1학교당 1억 원 지원, 18개 학교 18억 원을 지원할 때보다 8억 원의 예산이 절감되었다.

또한, 파프리카는 통학버스 최초로 환승이 가능해지면서 학생 이동권 확대 및 교통 편의 증진뿐만 아니라 카카오 초정밀버스 서비스를 도입하여 주행 중·신호 대기 중 등 실시간 버스 위치를 지도 위에 표시하여 직관적으로 확인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처럼 파프리카는 학생들에게 사랑받는 교통수단으로 이용 학생 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파프리카 운행 실적 (※기준 2024.3.4.~4.5. 운행 25일차)

이용 건수	운행 1일차	운행 21일차	운행 초기 대비 증가율	향후 계획
총 14,984명 (일평균 599명)	287명 (최저)	1,112명 (최고)	▲387.46%	학원가 경유, 야간자율학습 등 수요 검토하여 지속적인 개선 방안 마련

파주시의 파프리카는 정책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지속 가능성이 있는 정책이자 지자체 주도의 통학환경 개선 모델로 평가받는다. 파주시는 모두가 누리는 교통복지로서 파프리카 모델의 전국 확산 가능성을 매우 밝게 전망하였다. 현행 법령과 제도 안에서 조례 개정만으로 가능하므로 전국 어느 지자체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의정부, 김포, 남양주, 광주, 포항, 제주 등 다수 지자체에서 파주의 파프리카를 벤치마킹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파프리카 탑승 현장 사진 및 학생 인터뷰



경진대회 우수사례
장 려 상

폐기물 배출 방법 개선으로 환경오염은 낮추고 주민 편의와 행정 효율을 높이다

Brief Report

→ 현 황

대형 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규제가 현실 여건에 부합하지 않아 주민 불편을 유발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 개 선

대형 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의 조례 개정으로 주민 생활 편의를 도모하고 재고량 관리 및 홍보 등 행정 비용을 절감함

규제개선 배경

대형 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의 개선 필요성

대구광역시 중구에서는 대형 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관련하여 잦은 민원이 발생하였다. 대형 폐기물의 경우에는 품목이 다양해지고 배출량이 늘어나는데 적용할 수 있는 품목이 없고 규격 및 수수료 기준이 모호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전용 봉투(2L) 사용이 문제시되었다. 특히 배출자가 배출 시간을 미준수하는 등 임의로 배출된 음식물류 폐기물이 방치되면서 악취 등 주민들에게 피해를 유발하였다. 도시 미관의 저해와 환경오염 문제도 지적되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및 대형 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 자체의 문제로 배출 시 도난 등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였다. 물량 관리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관련 법규에서 규격과 모형을 규제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였다.



규제개선 과정

폐기물 배출 편의성 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 자원화 및 환경보호와 도시 미관 향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전용 봉투(2L)의 삭제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전용 용기의 신설을 추진하였다. 전용 봉투(2L) 사용 금지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용기(3L)의 사용 안내와 더불어 전용 용기(10L)를 추가 신설하였고, 원룸 등 다가구·다세대 주택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전용 선반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대형 폐기물의 경우에도 배출 기준을 명확화하여 품목에 맞는 수수료 납부 및 품목 부재에 따른 민원을 예방하고자 조례를 개정하였다. 대행업체의 협조를 받아 품목 데이터를 수집하고 다른 지자체와의 공통 품목, 동성로 등 특화된 상권 구역의 다량 배출 품목까지 전수조사하여 대구광역시 중구에 필요한 목록으로 재정비하였다.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은 꼭 필요한 내용을 제외하고 규격과 모형 등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바코드와 QR코드, 재사용 방지 기능을 추가한 새로운 방식의 납부필증을 제작하였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



대형 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



결과 및 기대효과

환경보호·주민 편의·행정 효율, 일석삼조의 성과

대구광역시 중구는 2023년 12월, 대형 폐기물 품목을 최종 정비하고 이전에 규정되지 않았던 골프채, 전동킥보드, 안마의자 등 대형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게 하였다. 이처럼 기준이 세분화되고 명확해지면서 주민들의 납부액 혼선을 방지하고 대형 폐기물 대행업체의 업무 효율성이 증대하였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전용 봉투 폐지로 환경보호와 더불어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 추진에 기여하였다.

특히 중구는 납부필증에 바코드를 삽입하여 매출 및 재고량 파악을 전산화하여 물량 관리를 수월하게 하였고, 재사용 방지 기능을 추가하여 도난 방지 등 주민들의 폐기물 배출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QR코드까지 삽입하여 배출법 등 폐기물 관련하여 다양한 홍보가 가능하게 하였다. 타구에서도 바코드와 재사용 방지 기능을 도입한 경우가 있었으나 QR코드까지 삽입하여 홍보하는 사례는 중구가 최초였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시민 불편 및 교통 흐름 개선을 위한 물류 차량 '시간제 속도제한'

Brief Report

→ 현 황

물류 차량의 이동이 많은 야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40km/h 속도 제한으로 운영

→ 개 선

야간에 물류 차량과 이동 차량이 많은 특성을 고려해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으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 흐름을 개선함

규제개선 배경 경상북도 최초 어린이 보호구역의 속도제한 규제

구미시 왕산초등학교 앞처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40km/h로 속도가 제한된 도로이나 야간에 물류 차량과 이동 차량이 많은 경우,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어린이 주요 통행 시간이 아닌 야간 시간까지 낮은 속도제한으로 교통 흐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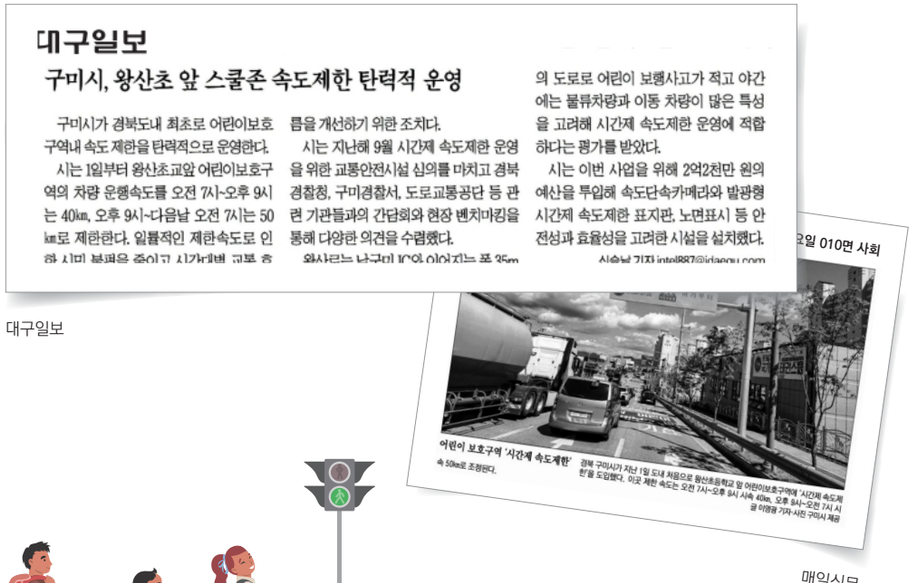
규제개선 과정 충분한 의견수렴과 반영

구미시는 2023년 9월에 교통안전시설심의회 심의 후 10월에 경상북도와 도로교통공단, 경찰서 등과의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경상북도 경찰청 시설물 의견을 수렴하여 8월에 공사가 준공되었고 9월부터 3개월간 시범 운영을 하였다.

결과 및 기대효과 어린이 보호구역에 '시간제 속도제한'의 탄력적 운영

구미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간선도로의 제한 속도를 어린이 통행이 적은 21시부터 7시까지 50km/h로 상향을 결정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통합표지판 정비 및 차선 도색 등 부대공사를 진행하였다. 구미시는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후 시민 불편 해소 및 야간 교통 흐름이 개선되었다고 밝혔다.

언론 보도 사례



대구일보

구미시, 왕산초 앞 스쿨존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

구미시가 경북도내 최초로 어린이보호구역내 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시는 1일부터 왕산초교앞 어린이보호구역의 차량 운행속도를 오전 7시~오후 9시는 40㎞, 오후 9시~다음날 오전 7시는 50㎞로 제한한다. 일률적인 제한속도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고 시간대별 교통 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지난해 9월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마치고 경북경찰청, 구미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등 관련 기관들과의 간담회와 현장 벤치마킹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왕산로는 남구미 IC와 이어지는 폭 35m의 도로로 어린이 보행사고가 적고 야간에는 물류차량과 이동 차량이 많은 특성을 고려해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는 이번 사업을 위해 2억2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속도단속카메라와 발광형 시간제 속도제한 표지판, 노면표시 등 안전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시설을 설치했다.

매일신문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경북 구미시가 지난 1일 도내 처음으로 왕산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시간제 속도제한'을 도입했다. 이곳 제한 속도는 오전 7시~오후 9시 시속 40km, 오후 9시~오전 7시 시속 50km로 조정된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하수도 유형자산 전수조사를 통한 원가 절감 및 하수도 요금 부담 완화

Brief Report

→ 현 황

하수도 요금은 총괄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서 원가 상승에 따라 시민들의 요금 부담도 상승하기 때문에 자체적인 유형자산 분류의 기준 마련 필요

→ 개 선

자산의 정확하고 체계적인 분류를 통해 불필요한 유형자산을 제거하여 유형자산의 비용을 줄이고 유형자산 전수조사로 원가를 절감하였음

규제개선 배경 — 하수도 요금 상승에 따른 시민들의 부담 완화 필요성

하수도 요금은 총괄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므로 원가가 높아지면 시민들의 요금 부담이 높아지는 구조이다. 특히 부산광역시의 경우, 하수도 사업의 총괄 원가 중 유형자산 관련 원가인 감가상각비[1]와 자기자본보수[2]가 전체의 60%를 차지하며, 분류식하수관로 신설 사업의 지속 추진에 따라 비용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다.

규제개선 과정 — 유형자산으로 분류하지 않아야 할 대상에 대한 분류 기준 마련

2022년 8월부터 12월까지 부산광역시는 2021년 말 기준 유형자산 정비를 위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유형자산대장 내 조정해야 할 자산을 4가지 유형으로 정리하고, 유형자산이 아닌데도 유형자산으로 분류되어 유형자산 비용을 발생시키는 요소들을 찾아내어 유형자산대장에서 제거 및 재분류하였다. 이 결과를 다음 해,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2022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결산 반영하였다. 2022년까지 취득한 2021년도 말 기준 유형자산 정비 내역은 전기오류수정손익과 타 회계건설보조금에, 2022년도에 취득한 유형자산은 동일 기준을 적용하여 회계 처리 후 재무제표에 반영하였다.

1) 토지, 입목을 제외한 유형자산이 사용 및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점차 감소하는 것을 내용기간 중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경비

2) 보유하고 있는 자기자본에 대한 기회비용으로 사업의 계속성 유지를 위하여 인정하는 비용

유형자산 정비 대상

(단위 : 백만 원)

구 분		자 산 명	취득 원가	감가상각 누계액	장부가액 (미상각잔액)
자산 제거	전출 처리	중점 관리 지역 하수도 정비사업 외 17	64,268	2,294	61,974
	비용 처리	1단계 최초침전지슬러지수집기수선 외 35	3,537	995	2,542
자산 조정	자산 재분류	냉난방기 구매(환)정관 외 8	295	79	216
	내용연수 조정	수처리동최초침전지구조물보강(환)남부 외 3	1,859	111	1,748

하수도 유형자산 제외 대상

구 분	사 유	예 시
합류식 하수관로 관련 자산	합류식하수관로는 구청장의 관리 대상이므로 이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자본 보조의 성격임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구군 재배정), 긴급 하수관로 정비사업(구군 재배정), 하수관로 유지 관리(개·보수등) 사업 보조, 중점 관리 지역 하수도 정비사업, 스마트게이트 설치사업, 하수도 악취 방지 덮개사업, 맨홀 관련 각종 주민 제안사업, 기타 합류식하수관로 정비사업
단순 수선 공사	주요 부품을 교체하여 내용연수를 증가하지 않는 이상 비용과 상관없이 수익적 지출로 간주해야 함	각종 기계장치 오버홀, 수선공사
단순 용역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공사의 전 단계인 기본 및 설계 용역을 제외한 각종 용역은 시설비로 지급하였더라도 수익적 지출로 간주해야 함	하수관로 기술 진단 용역 등

결과 및 기대효과 — 자산의 정확하고 체계적인 분류로 원가 절감

유형자산 비용은 유형자산의 취득과 동시에 자동으로 발생하므로 강제로 줄일 수는 없다. 그래서 부산광역시는 하수도 사업의 유형자산 관련 원가인 감가상각비와 자기자본보수를 줄이기 위해 유형자산의 전수조사를 추진하였다. 자산의 정확하고 체계적인 분류를 통해 불필요한 유형자산을 제거하여 유형자산의 비용을 줄이고 원가를 절감하였다. 이 결과, 총괄원가가 약 35억 원 감소하였고 평균 원가(원/㎥)가 9.29원 감소하였다. 요금 현실화율이 0.67%p 상승하여 시민들의 하수도 요금 부담이 수용가당 약 5,901원으로 감소하였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상가임대차인 간 분쟁으로부터 범죄 예방과 심리적 불안 해소를 위한 알선조정제도 도입

Brief Report

→ 현 황

상가임대차인 간 분쟁 조정 과정에서 대면 조정은 욕설 및 폭력 등 위협이 상존하고 공포감 등 심리적 부담이 상당하여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대면 조정 외에 비대면 조정을 진행하는 안심조정제도의 도입 및 시행 필요

→ 개 선

상가임차인의 방문 없는 조정으로 민원 불편을 해소하여 조정 참여율을 높이고 상가임대차 분쟁 심화로 인한 범죄의 사전 차단 환경 조성

규제개선 배경 — 상가임대차인 간 분쟁 조정 신청의 부담 완화 필요

2018년 10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 설치 근거가 규정되면서 서울특별시는 법에 따라 조정위원회를 운영하였다. 그러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1조의 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 규정상 대면 조정이 원칙인 점이 문제시되었다. 극심한 갈등을 겪는 상가임대차인 간 대면 조정은 서로 감정이 격해져 욕설이나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실례로 2018년 서촌 궁중족발 폭행 사건, 2023년 인천 계양구 임대료 갈등 폭행·방화 사건이 있었다. 따라서 많은 경우 상대방의 위협을 우려하여 신분 노출을 부담스러워하며 조정 신청을 망설이게 되었고, 서류 작성과 참석의 형식적 절차 이행, 교통비 및 영업 시간 포기가 부담 요소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이에 당사자 간 범죄 발생을 차단하여 안전하고 부담 없이 편하게 조정받을 수 있는 간이한 조정 신청 절차의 도입 및 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규제개선 과정 — 간이한 조정제도(알선조정) 시범 운영

서울특별시는 2023년 3월 당사자 간 범죄 발생 차단과 편안하게 시간 구애 없이 받을 수 있는 간이한 조정제도, 즉 알선조정의 신규 도입 및 시범 운영을 결정하였고, 상가임대차 분쟁 조정 활성화 및 제도개선계획을 수립하였다. 알선조정이란 전문가 1인이 비대면(유선)으로 조언과 타협 권유를 통해 당사자 간 화해를 유도하는 간편하고 신속한 분쟁 해결 제도이다. 서울특별시는 2023년 시범 운영 종료 후 2024년 알선조정 반영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홍보에 나섰다.

결과 및 기대효과 — 당사자가 분리된 조정으로 조정의 안전성과 경제성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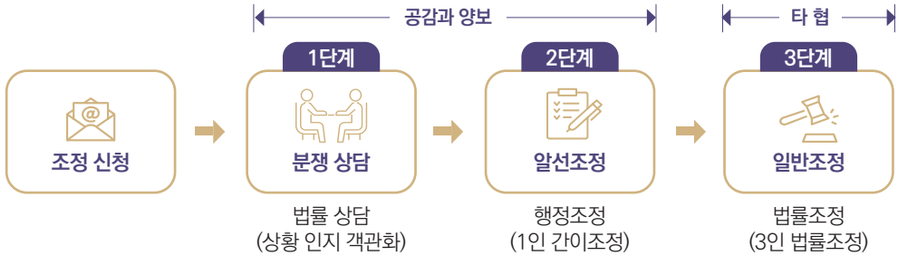
서울특별시는 편하고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는 알선조정을 도입하여 상가임대차 분쟁 심화에 따른 범죄 발생 요소를 사전 차단한 환경을 조성하였다.

알선조정 도입 후 범죄 차단 효과

2023년 시범 6건
2024년 5월 7건
→ 조정 신청자의 불안 및 공포 심리 제거

또한, 당사자들의 방문 시간 및 비용의 부담을 해소하였다. 방문 없는 조정으로 교통비가 발생하지 않는 데다 임차인은 영업에 집중할 수 있고 임대인은 개인 일정을 보장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기존의 일반조정(3인)보다 알선조정(1인)의 경우, 조정위원이 2/3 감원되는 만큼 참석 수당도 900,000원에서 300,000원으로 줄어드는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었다. 이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임대인과 영업 손실을 우려하는 임차인이 한결 부담 없이 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요인이 되었다.

조정 신청의 단계



알선조정 성립률 비교

알선조정 각하율		조정 성립률(개최 기준)	
2023년	2024년 5월	2023년	2024년
37.6%	29.6%	일반조정 73.8% 알선조정 33.3%	일반조정 53.8% 알선조정 85.7%
8% 감소		알선 성립률 25.4% 증가	

※일반 대면 조정보다 알선조정 성립률 높음

서울특별시의 알선조정은 전국 최초 법률 규정의 조정 절차와 간이한 조정 절차를 혼용한 제도 운영으로 민사조정법의 조정전치주의와 유사한 행정형 조정 이론(알선전치주의)을 개발 및 구축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나아가 서울특별시는 알선조정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서울특별시 행정형 조정체계 모델로의 확산 기대를 밝혔다.

Part •

지역경제 활력 제고 우수사례

변화한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는 낡은 제도와
지역경제의 발목을 잡는 족쇄 규제,
행정안전부는 지역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자체와 밀접히 협력하며 합리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지역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합니다.

경진대회 우수사례

대　　상 ___ 강원특별자치도
우 수 상 ___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충청북도 괴산군
장 려 상 ___ 경상북도 포항시, 인천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우수사례

인천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규제혁신위원회 개선사례

충청북도 단양군

경진대회 우수사례
대 상

22년간 묶인, 석탄 경석의 폐기물 규제 해소

Brief Report

→ 현 황

석탄 경석의 폐기물 규제로 자원산업화 및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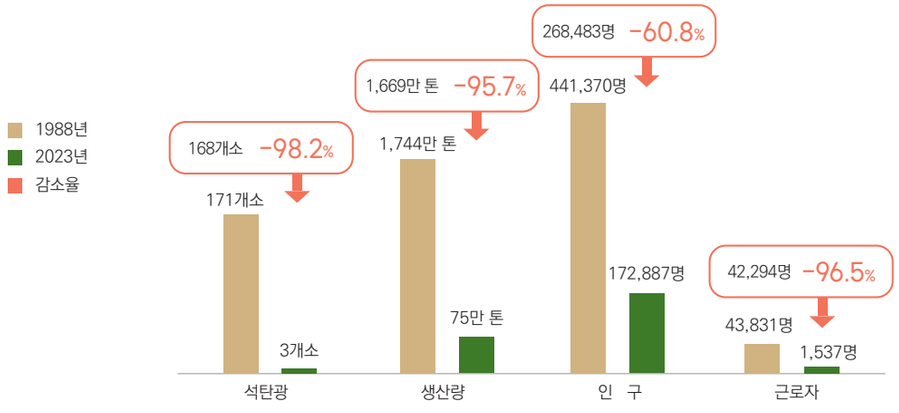
→ 개 선

폐광지역의 애물단지로 취급받던 석탄 경석이 폐기물 규제에서 벗어나 지역재생 자원으로 활용

규제개선 배경 석탄 경석의 폐기물 규제에 따른 문제점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1989)에 따라 경제성이 낮은 석탄광이 폐광되면서 도내 폐광지역은 경기 침체 및 대체 산업 미흡, 인구 소멸 등의 문제로 지역재생이 시급해졌다.

도내 폐광지역(태백, 삼척, 영월, 정선) 석탄산업 현황



특히 광산의 갱도 굴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암석 및 저급탄 등을 통칭하는 석탄 경석은 강제적인 광업권 소멸 등으로 관리 주체가 없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으로는 관리가 어려우며 폐광지역에 산재한 경석의 처리 비용 등의 문제로 지역개발사업에 걸림돌이 되었다.

최근에는 세라믹 등 신소재산업에 적용이 가능한 제품군으로 활용되면서 경제적 가치가 재조명받는데도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여 여전히 폐기물 규제에 묶이는 바람에 산업적 이용이 제한되었다. 이에 경석의 산업화 및 기업 유치·투자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규제개선이 필요하였다.



규제개선 과정 문제점 인지 및 규제개선의 공감대 형성

석탄 경석은 그간 경제성이 낮아 유해 성분 함유와 관계없이 사업장 폐기물로 취급해 환경 보존 및 광해 방지 차원에서 단순 복구·관리하고 있었다. 특히 현행법상 명확한 분류를 위한 정의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관례적으로 해석하여 석탄 경석을 폐기물로 취급(폐기물 종류에 광재류로 분류), 반출과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석탄 경석에 대한 부처 간 해석 차이

폐기물관리법 (환경부)	☑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 석탄 경석은 폐기물임 ☑ 다만, 광산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 내의 경석은 폐기물이 아니나 사업장 밖으로 이송 시에는 폐기물로 간주
광산안전법 (산업통상자원부)	☑ 채굴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석의 유실은 광산과 그 주변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광해의 일종으로 폐석 유실 방지를 위한 배수로나 옹벽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
산지관리법 (산림청)	☑ 경석을 토석이라 정의하고 임산물의 일종(석재)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자원으로 취급

강원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안건 상정 등을 통하여 폐기물 제외를 건의하였고, 환경부가 석탄 경석을 폐기물(재활용)로만 한정하면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음을 인지하고 관계 기관이 협의하여 폐기물 규제개선의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그리고 폐기물 제외 내용이 담긴 환경부 훈령(안)을 마련하였고, 석탄 경석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활용될 수 있게 지속 협력을 담은 규제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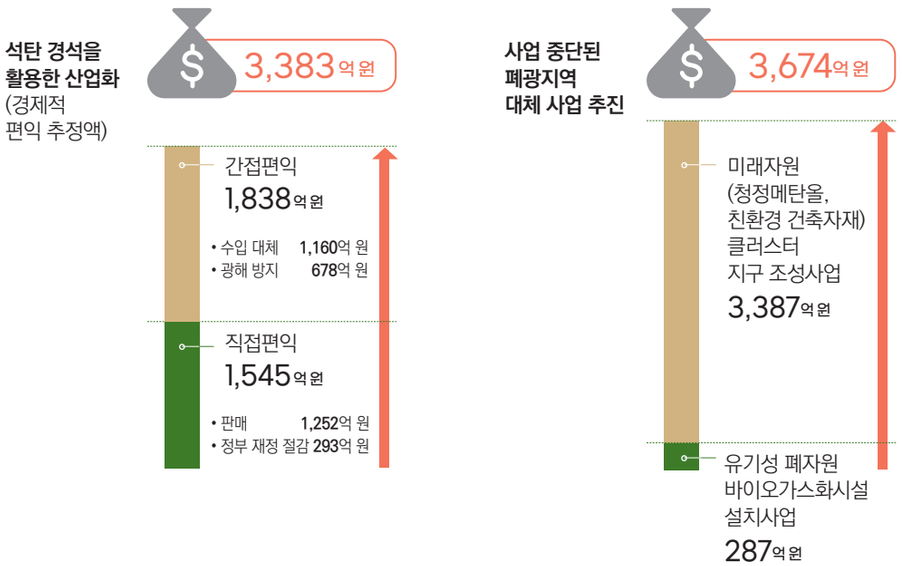
결과 및 기대효과

훈령 제정을 통한 석탄 경석의 폐기물 규제 해소

환경부 훈령 제정을 통해 석탄 경석이 폐기물이라는 유권해석을 변경하였다. 석탄 경석을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로 보지 아니함을 명시한 것이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환경부 훈령 제정에 따라 조례 제정을 완료하였고, 마침내 석탄 경석이 폐기물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는 환경부에서 법령이 아닌 훈령을 통해 규제개선을 한 최초 사례이자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한 모범사례였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드디어 석탄 경석의 자원산업 활성화를 통한 관련 기업 유치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폐기물 처리 비용 미발생으로 폐광지역의 지역개발사업과 경석 적치장 부지를 활용한 대체 사업의 추진이 가능해졌다. 특히 건축자재 활용, 수입 대체 등 자원산업 활성화 및 석탄 경석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환경오염 발생 최소화, 광해 방지용 정부 재정 절감 등 경제적 편익 증대 효과가 있었다. 석탄 경석의 폐기물 제외 시에는 도내 최소 7,057억 원 이상 경제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석탄 경석의 폐기물 제외 시 기대효과



경진대회 우수사례
우 수 상

세계인, 전남人이 되다!
외국인 비자제도 개선 등을 통한 인력난 해소!

Brief Report

→ 현 황

농어업 및 조선업 분야의 인력난을 가중하는 규제의 개선 필요

→ 개 선

농어업 및 조선업 분야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비자(VISA)제도 및 근로 조건 개선으로 숙련근로자 양성과 원활한 인력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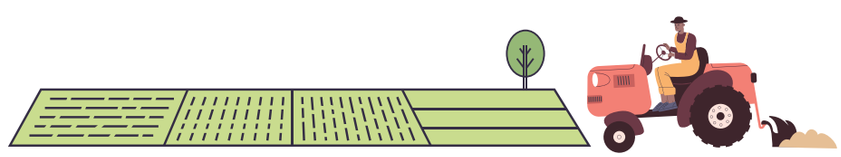
규제개선 배경

외국인 계절근로제 확대 운영 및 외국인 비자 전환 요건 완화

농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제 확대 운영 필요성

파종·수확기 계절적 농어업 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제를 2017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현재 농촌에서는 계절근로자가 없으면 정상적인 농작업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이 상한 5개월이라는 제한이 있어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로 지적되었다. 시설 농가의 경우 작기가 8~9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5개월이라는 짧은 체류 기간 제한으로 인력 공백이 발생하고 교체 도입 시 적응 기간(2주~4주) 동안 농작업 능률이 저하되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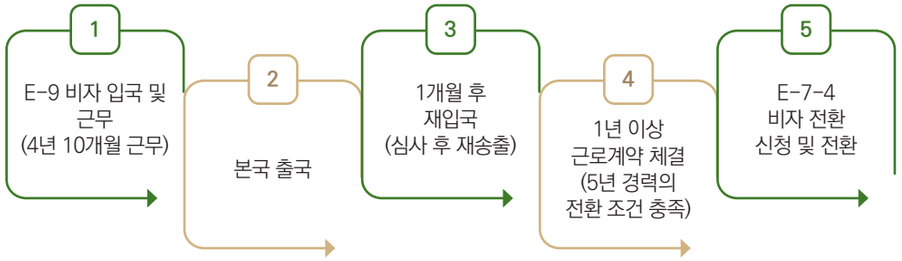
또한,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해당 시·군의 직접 유치로 운영되고 운영 범위가 관내로 국한되어 있다 보니 농번기 이후 날씨 등의 영향으로 일을 하지 못해 유휴 인력이 발생하거나 불법 중개업체 개입 및 단기근로·인권 문제 등에 따른 현장 무단이탈이 증가하는 등 효율적 인력 운영이 어려웠다. 따라서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 기간 연장 및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였다.



조선업 분야 외국인 비자 전환 요건 완화 필요성

조선업 분야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 대부분이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하여 근로 활동을 하다가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 전환하려면 국내 근무 경력을 5년 이상 필요로 한다. 그러나 비전문취업 비자의 체류 기간은 최대 4년 10개월로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전환하기 위한 5년의 경력 기간에 2개월이 부족하여 본국으로 출국했다가 재입국을 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이에 따른 불필요한 인력 공백 및 사회적 비용이 문제시되었고, 특히 체류 기간 만료 후 본국 출국에 따른 비용과 시간, 재입국 시 본국 비자 심사 통과에 대한 불확실성 등을 우려하여 불법 체류자로 근무를 지속하는 부작용도 발생하였다.

현행 비자 전환 절차



조선업 분야에서는 내국인 근로자 확보가 어렵고 외국인 기능인력 고용 요건이 엄격하여 인력난이 가중되는 실정이었다. 인력난 해소를 위해 부득이 불법 체류 외국인 인력을 고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게다가 2021년 하반기 이후 수주 물량 증가에 따라 인력난을 겪는데도 외국인 고용비율(내국인의 20%) 제한, 외국인 근로자 임금 요건(전년도 국민 1인당 GNI의 80% 이상 지급), 고용업체 요건 충족의 어려움이 인력난 해소를 요원하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규제개선 과정

체류 기간 연장 및 사증발급인증서 발급

농어업 분야 체류 기간 연장 및 운영 범위 확대

2023년 4월~5월에 전라남도는 법무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 기간 연장 제도개선을 건의하였다. 이후 법무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입국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체류 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하였다. 농림식품부는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 범위를 시·군 관내에서 타 시·군 포함으로 확대 승인하였다. 2024년 1월에는 법무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을 개정하며 농번기 지역별 인력 수요 가동률 향상을 위해 타 시·군에서도 계절근로자 활용을 신설하였다.

조선업 분야 사증발급인증서 발급 및 체류 관리 지침 개정

2023년 1월, 행안부-전라남도 규제혁신 현장 토론회를 통하여 제도개선이 건의되었다. 뒤이어 조선업-전라남도 인력난 해소를 위한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6월부터 법무부는 특정활동(E-7) 자격 사증발급인증서 발급 및 체류 관리 지침을 순차적으로 개정하여 외국인 고용비율·임금 요건·고용업체 요건이 완화되었고 외국인 고용비율 산정 기준이 변경되었다.

법무부 지침 개정 내용

항 목	개정 전	개정 후
외국인 고용비율	국민 고용자의 20% 범위 내	조선업 관련 인력에 대하여 국민 고용자의 30% 범위 내
임금 요건	전년도 GNI의 80% 이상 임금 지급	조선용접공, 선박도장공 등에 대해 전년도 GNI의 70% 이상 임금 지급
고용업체 요건	3년간 연평균 매출액 10억 원 이상,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전년도 매출액 10억 원 이상,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외국인 고용비율 산정 기준	거주(F-2) 등 취업 가능 체류 자격은 외국인 고용 인원에 포함하여 비율 산정	숙련기능인력(E-7-4) 및 거주(F-2)로 체류 자격 변경·취득자는 업체별 외국인 고용 인원에서 제외하여 비율 산정

결과 및 기대효과

합법적 외국인 고용 촉진 및 안정적인 고용 유지

농어업 분야 합법적 외국인 고용 촉진 및 농어촌 구인난 해소

전라남도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이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되면서 배정 인원이 급증하였다. 2023년 12월 기준, 체류 기간 연장 인원은 1,399명으로 농가형 1,351명과 공공형 48명이었다. 연장률은 무려 37.6%에 달하였다.

전남 외국인 계절근로자 추진 현황

(단위:명)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상반기
배정 인원	1,763	4,679	5,818
입국 인원	1,001	3,712	4,048
도 입 률	56.8%	79.3%	70%
이탈 현황	79	89	40
이 탈 률	7.9%	2.4%	0.9%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 내역

구 분	참여 시·군	인원(명)		지원 실적	
		배정	입국	농가 수	지원 인력(명)
2023년	2개소(2개 시·군)	70	71	1,670	7,999
2024년 상반기	10개소(8개 시·군)	322	267	2,974	10,972

전라남도는 앞으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이탈 방지 및 안정적인 적응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조선업 분야 외국인 숙련공들의 안정적인 고용 유지

외국인 비자 전환 요건이 완화되면서 외국인 숙련공들이 단절 없는 취업 상태를 유지하고 고용업체는 안정적인 고용 및 관리가 가능해졌다. 이러한 인력 관리의 효율성 증대는 조선업 분야의 인력난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라남도 조선업 외국인 근로자 현황

(단위 : 명)

2022년				2023년				증감
계	현대삼호	대한조선	대불산단	계	현대삼호	대한조선	대불산단	3,555
3,666	1,766	777	1,123	7,221	3,283	952	2,986	

체류 자격별(비자) 현황(2023년 12월 기준)

	계	E-7 (특정활동)	E-9 (비전문취업)	F-2-R (지역특화형)	기타
계	7,221	1,168	3,506	163	2,384
현대삼호중공업	3,283	929	1,415	82	857
대한조선	952	47	186	40	679
대불산단	2,986	192	1,905	41	848

전라남도는 향후 외국인의 비자 전환을 통한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지방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경진대회 우수사례
우 수 상

규제혁신으로 전국 최초 블루오션을 찾은 우분(소똥) 고체연료화

Brief Report

→ 현 황

우분 100%로 품질 기준에 적합한 고체연료 생산 불가로 우분 고체연료화 사업 추진 난항

→ 개 선

전국 최초로 골칫덩이 소똥을 재생에너지(REC 1.0) 품질 기준(발열량, 수분)에 적합한 고체연료로 생산 및 이용 활성화에 기여

규제개선 배경

가축분뇨 고체연료화 사업 추진의 어려움

가축분뇨법 시행규칙·환경부 고시(제2018-114호)에 따르면 가축분뇨 고체연료는 가축분뇨 100% 성분으로 제한된다. 이 규제에 따라 발열량·수분 등 품질 기준에 적합한 생산시설이 없어 대부분 퇴비화를 통해 자가 처리(97%)하고 나머지는 민간 위탁 처리(3%)하는 실정이다.

기업·환경·축산 분야의 애로 사항

기업

- 수질오염 규제 적용을 받아(수질오염 총량제) 시·군의 기업체 유치가 어려움, 신재생에너지원 확보 필요, 기업 대상 탄소 배출 규제 강화
- 도내 열병합발전소 3개소(SGC 에너지(주), OCI SE(주), 한화에너지(주))가 2025년 수입산 목재 펠릿(국내 91%)의 일몰에 합의함에 따라 국내 연료 대체 시급

환경

-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증가(부영양화), 새만금 유역 주요 환경오염물질, 가축분뇨 퇴비 과다 살포(토양 양분 과다)
- 가축분뇨 퇴비화 시, 긴 처리 시간 동안 시설 악취 발생으로 민원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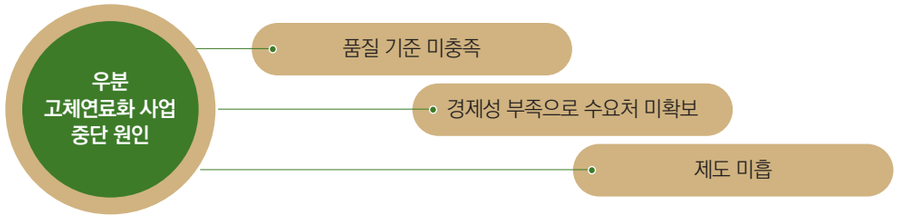
축산

- 우분 발생량 매년 증가, 경작지 감소(기존 퇴비화 자가 처리 한계), 퇴비화된 우분의 수요처 감소(퇴비가 남음), 가축분뇨 퇴비의 부숙도 측정 의무화(개별 농가 가축분뇨 퇴비화 어려움)
- 공동자원화시설 악취 저감을 위한 규제(대기환경보전법 강화안 적용, 2025년)

규제개선 과정

전국 최초 우분 연료화 사업의 설치 기반 마련

전북특별자치도는 앞서 우분 고체연료화 사업이 중단되었던 정읍시와 완주군의 사례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또한, 과다 발생하는 우분 대비 부족한 공공 처리시설도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협의체를 운영하며 업무협약 체결로 우분 연료 생태계 구축 및 고체연료 생산·수요처 사업모델 구축에 나섰다. 그리고 현장 간담회 등 30회의 실무 협의회를 거쳐 우분 고체연료화 사업을 재추진하였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우분 고체연료 사업화 노력

공급처 확보	김제자원화센터(실증·생산·시험연소)
수요처 확보	열병합발전소 3개소(SGC에너지(주), OCI SE(주), 한화에너지(주))
예산 절감·품질개선	☑ 고속발효(건조)+혼합 공법 도입 ☑ 보조원료 50% 혼합비율 도출로 발열량 증가·경제성 향상 ☑ 신규 공법 도입으로 사업비 절감(공정 단축)

환경부와 전북특별자치도의 공법 비교

환경부 건조 공법

우분저장조 → 전처리(파쇄, 선별) → 저장조 → 건조기 → 후처리(선별, 파쇄) → 건조물저장조 → 펠렛 성형 → 펠렛저장조

사업비 1,833억 원

(건조, 고체연료 톤당 표준사업비 산출)

도 신규 공법(발효·건조)

우분저장조 → 파쇄 → 발효(건조) → 선별 → 혼합 → 혼합물저장조 → 펠렛 성형 → 펠렛저장조

사업비 1,623억 원

(발효+건조)

※ 환경부 신규 공법 승인 (톤당 표준사업비 산출) ①시설 용량(Q) × 톤당 표준사업비, ②{시설 용량(Q)×55%} × (톤당 표준사업비 × 40%)

전북특별자치도는 환경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여 제조 공정 중 50% 미만 혼합비율, 톱밥 등 보조원료 혼합 허용 가축분뇨법 시행규칙·고시 개정안을 협의 완료하고 전국 최초 우분 연료화 사업 정부 신기술 승인을 받았다. 다만, 축산농가의 불법 처리를 우려한 환경부가 규제 샌드박스 활용하여 전북 4개 시·군(정읍, 김제, 완주, 부안)만 제조원료 혼합·신규 공법(발효+건조)개발 적용할 수 있게 하였고,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른 전국 최초 규제특례 승인·테스트베드를 가동하였다.

결과 및 기대효과

국정과제 에너지 新산업·新시장 창출 및 2050 탄소중립

전북특별자치도는 가축분뇨법 시행규칙·환경부 고시 개정안에 제조 시 우분 100%를 우분 50% 및 50% 미만 미활용 바이오매스(톱밥·왕겨 등) 혼합 허용 품질개선 방안을 마련한 끝에 전국 최초로 소똥을 새로운 에너지인 고체연료로 전환하여 열병합발전소 보조원료 공급에 기여하였다. 재생에너지(REC 1.0)로서 국내 우분 고체연료는 1톤당 10만 원으로 수입 목재 펠릿 1톤당 25만 원에 비해 절반 이상 저렴하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025년 1월 수입 목재 펠릿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기업에게 지속적 공급이 가능하고 가격 경쟁력이 있는 재생에너지로서 국내 우분 고체연료가 활발히 이용될 것으로 전망한다.

국내 우분 고체연료 이용 효과

환경보호

- ☑ 새만금 수질 개선(BOD 3,865㎏/일 및 T-P 204㎏/일 삭감)
- ☑ 680톤/일 우분 처리
- ☑ 163톤/일 우분 연료 생산(REC 1.0) → 244톤/일 온실가스 감축효과
  (1ha 축구장 약 8,250개 면적에 30년생 소나무 59,000그루 식재 또는 자동차 37,100대를 1년간 미운행하는 효과)

지역경제 활성화

- ☑ 우분 고체연료 원료 및 혼합비율 규제 완화
- ☑ 수질오염 총량 규제로 시·군 개발사업 재추진
- ☑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직접 60명, 산업단지 조성 가능)

경진대회 우수사례
우 수 상

농민 즉석판매 제조가공 탄소중립시대 로컬 판매 포문 열다

Brief Report

→ 현 황

농외소득을 올리기 위한 농업인의 소규모 가공 생산 판매 행위는 식품위생법 특히 HACCP 의무 사항 등으로 농가에 막대한 경제적 부담

→ 개 선

농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로 만든 즉석판매 제조가공품을 지역 로컬푸드 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며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에 기반한 농가공품 판매 허용

규제개선 배경 — 농민 생산 즉석판매 제조가공품의 로컬푸드 판매장 입점 요건 완화 요구

2024년 5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작황 불황과 농자재값 인상 등으로 2023년 농가의 소득 중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21.9%인 반면 농외소득의 비중은 39.3%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농외소득 중 주요 분야는 농산물 가공이다. 현재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성 지원에 관한 법률 등으로 전국 시·군 농산물가공센터가 110개 이상 건립되고 로컬푸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농민 가공식품이 대기업 가공제품에 비해 원료의 신선도(탄소마일리지)와 첨가물의 최소화 등으로 국민건강에 기여도가 큰 반면, 활성화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대규모 식품공장의 제조 과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가공의 주체나 규모를 구분하지 않는 까닭에 농외소득을 위한 농업인들의 소규모 가공 생산 판매 행위의 경우, 식품위생법 특히 HACCP 의무 사항 등의 준수에 따른 높은 경제적 부담으로 실질적인 소득 향상이 어려웠다. 따라서 식품 가공의 주체나 규모, 원재료 조달 방식을 구분한 식품위생법 규제 완화 및 개정이 필요하였다.

규제개선 과정 — 「식품위생법」 규제 완화 및 개정 필요

괴산군은 2024년 1월, 규제개혁신문고에 즉석판매 제조가공 지역농산물 가공품의 직거래 판매 허용을 건의하였다. 비록 불수용되었으나 4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 회의 결과,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신고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 가공품을 직거래 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거쳐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식약처에 권고하였다. 그리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에서 괴산군 현장을 방문하여 식약처의 시범사업계획을 설명하였고, 괴산로컬푸드 직매장 현황을 점검하였다. 이어서 농민 생산 즉판제품 유통·판매 허용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매장 선정 기준, 시범사업 매장 선정,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 등이 마련되었다.

결과 및 기대효과 — 농업인이 농산물을 직접 가공하고 판매할 수 있는 권리 보장

괴산군의 끈질긴 노력 끝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3) 「농산물직거래법」상 농산물직거래 사업장(로컬푸드 직매장) 회원이 사업장에 공급하는 경우가 추가되었다. 그리하여 미국의 농가부엌법처럼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된장, 고추장 등 우리나라 한식의 맛을 좌우하는 발효 음식은 물론 과수 농가들이 당일 수확한 과실을 바로 가공하여 로컬푸드 매장이나 농가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실질적인 농외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미국의 주별 농가 가공 활성화 제도 — 사례

- 소규모 로컬푸드 가공 활성화를 위해 미국 다수의 주에서는 농가부엌법(Cottage Food Law)을 시행하여 냉동을 요하지 않고 잠재적으로 위험하지 않은 식품(pH 4.5 미만의 피클, 잼, 말린 것, 구운 것 등)을 직거래 또는 농민장터나 농장에서 판매 금액의 상한가와 등록제와 안전 인증제, 기본 라벨 부착 등의 표시를 기본으로 판매 허용
-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에 기반한 농산물 가공 판매를 허용하는 가공자유법(Food Freedom Law)은 대부분 가공식품에 '검사되지 않았음'을 표시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를 통해서 규모에 대한 제약 없이 판매 허용

괴산군은 농가에서 직접 생산 가공한 제품을 지역 로컬푸드 판매장 또는 축제장에서 상시 판매함으로써 신선하고 건강한 먹을거리를 통한 도시 소비자 유입 효과가 크다고 밝혔다.

가공식품을 공급하는 생산자(농업인)와 소비자(지역민)가 신뢰를 바탕으로 대면적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 생산물을 활용하는 가공식품의 판매 활성화는 농가의 경영 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역순환경제의 활성화라는 정부의 지역먹거리계획 활성화 취지에도 부합한다.

특히 꾸준하고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창출하여 귀농·귀촌인, 청년 후계자들이 농업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소멸 위기에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괴산군은 지역의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판매되는 농민의 즉석판매 제조가공품이 지역을 홍보하는 특색 있는 '탄소중립시대의 건강 먹을거리'의 마중물이 될 것을 전망하였다.



경진대회 우수사례
장 려 상

선제적 규제개선으로 지속 가능한 이차전지 산업 성장 기반 마련

Brief Report

→ 현 황

배터리 재활용 업체의 산업단지 입주 불가 제약과 지하관로의 산업단지 산업 기반시설 미포함으로 국비 지원이 불가능한 문제를 조속히 해결 필요

→ 개 선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업체가 원료재생업으로 분류되어 산업단지 입주가 가능해졌으며, 신산업 분야 지역기업 규제 애로 개선 건의를 통해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 방안을 이끌어냄

규제개선 배경 — 규제개선을 통해 이차전지 산업 성장 기반 마련 필요

포항시는 2023년 7월에 이차전지특화단지, 이어서 12월에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녹색융합 클러스터로 지정되면서 영일만 일반산단, 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 포항철강 산단 등에 이차전지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이 가능한 유치 업종을 확대할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그러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업체는 지정폐기물처리업으로 분류되어 산업단지 입주가 불가능하였다. 또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등에 이차전지 소재 기업의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염 처리수를 연안 해역에 배수할 때 꼭 필요한 지하관로가 산업단지 산업기반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비 지원이 불가능하였다.

규제개선 과정 —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산업집적법」의 규제개선

이차전지 산업 활동은 지정폐기물을 재생하는 활동에 해당한다. 포항시는 2023년 한국표준산업분류 규제개선을 건의하였고 2024년 1월 한국표준산업분류 전면 개정 고시를 통하여 지정외폐기물만 해당되던 원료재생업 범위가 지정폐기물과 지정외폐기물 모두 포함으로 확장되었다. 따라서 사용 후 배터리 재생 활동이 원료재생업으로 분류되며 산업단지 입주가 가능해졌다.

한편, 지하관로를 이차전지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에 포함하려는 노력도 더해졌다. 산업단지 입주 이차전지 소재 기업의 생산 공정 특성상 많은 공업용수가 필요하고, 고농도 염 함유 폐수가 다량 발생한다. 그러나 전국 대부분 지자체에서 생물학적 공법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공공폐수·하수처리장에서는 다량의 고농도 염 함유 폐수를 처리할 수 없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에게 수질오염물질 57개 항목 중 생태독성(TU) 배출 허용 기준 초과의 원인이 오직 염 성분 때문이라고 증명된 경우에는 지하관로를 이용하여 연안 해역으로 방류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2024년 1월 「산업집적법」 규제개선을 건의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다. 지하관로 구축에 국비 지원 근거 법령 개정을 통하여 지하관로를 이차전지특화단지 육성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 또는 공공시설에 포함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국비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24.6., 산업부 고시)되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별 맞춤형 지원 전략이 마련되었다.

결과 및 기대효과 — 급변하는 신산업 구조에 맞춘 규제개선의 성과

「산업입지법」 및 「산업집적법」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 유치 가능 업종 및 공장 설립 승인 업무 추진할 때 가장 기본이 한국표준산업분류이다. 포항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개정을 이끌어내어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기업체의 산업단지 입주 가능이라는 성과를 이루었다. 그리하여 영일만산업단지 등 지역 산업단지에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업체의 입주 가능 범위가 확대되며 인근 배터리 소재 및 제조업체와 밸류체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였다. 이는 배터리 전후방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극대화하는 효과가 있었다.

또한, 사용 후 배터리의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등 순환이용 생태계 조성으로 신산업 분야 활성화 및 니켈·코발트·망간 등 국내 배터리 핵심 광물 공급망을 강화하여 국가 자원 안보에 기여하였다.

지하관로가 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산업기반시설에 포함되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역시 큰 성과였다. 지하관로의 국비 지원으로 지방 재정 건전성 확보와 조기 공사 추진으로 이차전지 기업의 차질 없는 입주와 제품 생산이 가능해졌다. 또한, 첨단전략산업법에 이차전지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또는 공공시설에 포함됨에 따라 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 기반시설(지하관로) 구축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등 행정 절차에 당위성을 확보하였다. 포항시는 지하관로에 국비 및 지방비 지원 근거 규정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이차전지특화단지 활성화 및 신속 조성의 기대를 밝혔다.



경진대회 우수사례
장 려 상

외국인 요리사 고용 요건 완화로 쇠퇴해가던 국내 최대 차이나타운의 명성을 되찾다

Brief Report

→ 현 황

화교 1세대들의 고령화로 정통 중화요리 구현이 어려워지면서 차이나타운만의 차별화된 특색이 없어져 상권이 점점 쇠퇴하는데도 현지 외국인 요리사 고용이 과도한 규제에 가로막혀 큰 어려움을 겪는 실정

→ 개 선

현지 요리사 초빙을 통한 정통 중화요리 구현으로 K-관광컨텐츠 활성화 및 차이나타운 내 영세 중식당의 외국인 요리사 고용 부담 완화

규제개선 배경 1세대 화교들의 고령화에 따른 차이나타운의 쇠락

인천광역시의 차이나타운은 19세기 말 개항기 후 인천에 정착한 화교들이 그들만의 생활문화를 형성한 곳으로 인천광역시 중구는 2007년에 이 일대를 차이나타운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하여 국내에서 손꼽히는 대표적인 관광지로 육성하였다.

그러나 연간 약 30만 명이 찾는 국내 최대 차이나타운 활성화를 이끌었던 화교 1세대들의 고령화로 정통 중화요리 구현이 어려워지면서 차이나타운만의 특색과 본토의 맛이 사라져 일반 중식당과 차별점이 없어지는 등 경쟁력이 약화되었다. 그리하여 2021년 외국인 채용 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현지 요리사 인력 수급을 위해 특구 내 음식점주들의 규제 완화 요청이 대두되었다.

이는 차이나타운 내 중식당이라는 특성에 맞게 특화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단순 아르바이트나 한국인 요리사가 아닌 직능 수준이 높은 E7(특정활동) 비자를 가진 현지 고급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었다. 기존 사증발급 안내 매뉴얼에 따른 외국인 요리사(E7 비자) 고용 최소 요건은 일반 식당보다 중식당에 엄격한 기준이 적용하는데, 차이나타운의 경우 특구인데도 중식당 기준을 적용하는 과도한 규제로 E7 비자를 가진 현지 요리사를 고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규제개선 과정 차이나타운 특구 사증발급특례 적용 요청

인천광역시 중구는 2022년 12월 차이나타운 상인들 의견을 수렴하여 2023년 3월 지역특구 규제특례 수요 조사서를 중소기업벤처부에 제출하였다. 이후 차이나타운 중식당 및 사증발급 현황 조사가 이루어졌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서 차이나타운 특구 사증발급특례 적용을 요청하는 지역특구 제도개선 건의가 제출되었다. 그리하여 사증발급 안내 매뉴얼 개정이 검토되었고, 2024년 5월에 마침내 법무부를 통하여 특화사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요리사에게 사증(E-7)발급특례 적용과 함께 특구 관할 지자체장이 추천서를 발급하여 초청할 수 있도록 사증발급 안내 매뉴얼이 개정 및 시행되었다.

사증발급 안내 매뉴얼 개정 내용

고용업체별 사업장 면적 등 최소 요건

기 존

구분	중식당	일반 식당	안산 다문화특구
사업장 면적	200㎡ 이상	60㎡ 이상	30㎡ 이상
연간 부가세	50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상
내국인 고용 인원	3명	2명 (상동)	-

➡ **개 정**

구분	중식당	일반 식당	규제특구지역 내 식당*
사업장 면적	좌동	좌동	30㎡ 이상
연간 부가세			200만 원 이상
내국인 고용 인원			-

* 안산 다문화마을특구 내 식당, 인천 중구 차이나타운 특구 내 중식당

결과 및 기대효과 차이나타운 특구 중식당 외국인 요리사 사증발급 기준 완화

인천광역시 중구의 차이나타운은 문화융합의 장이자 개항장만의 독특한 유산이고 한국식 중화요리의 대명사인 짜장면이 탄생한 의미 있는 곳이다. 인천광역시 중구는 차이나타운 특구 외국인 요리사 사증발급특례를 통하여 차이나타운 내 소규모 영세 중식당의 외국인 요리사의 고용 부담을 완화하고 중식당 활성화를 통한 중화권 외국인 유치 확대로 한중문화교류 극대화의 기대효과를 밝혔다. 앞으로도 인천광역시 중구는 현지 요리사를 초빙하여 정통 중화요리를 구현하는 관광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인천 차이나타운만의 특색 있는 중국요리 개발을 통하여 지역 특화발전특구의 경쟁력 증대 및 국내외 차별화된 관광지로서 한 단계 도약을 지원할 계획이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전국 최초 2년 연속 여의도 면적의 61배(177.2㎢) 조업어장 확장!

Brief Report

→ 현 황

NLL과 조업한계선 사이에 설정된 접경 해역의 어장은 협소하고 군부대가 수시로 통제하는 등 조업환경이 열악하여 개선이 필요하였음

→ 개 선

2년 연속 법령 개정을 통해 접경 해역의 조업여건 개선 성과

규제개선 배경 60년 동안 묶여 있던 조업한계선 조정 요구

강화 6개의 항포구 어선은 60년간 내 집 앞 항포구에서 입출항만 해도 조업한계선 위반으로 행정, 사법처분의 대상이 되었다. 조업한계선이란 1964년 6월 24일 당시 농림부(현 해수부)가 설정한 민간 선박 출입 통제선이다. 조업한계선을 위반할 경우, 받게 되는 행정처분은 어업정지(30~90일), 사법처분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접경 해역(강화, 서해5도)은 NLL과 조업한계선 사이에 설정되어 어장이 협소하고 군부대의 수시 통제 등으로 조업환경이 열악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였다. 그래서 조업여건의 개선을 2018년부터 2022년에 걸쳐 관계 기관에 수십 차례 건의하였으나 접경지역으로 국가안보·작전·경비 문제로 미반영되었다.



규제개선 과정 협업체계 구축 및 전략적 해결

인천광역시는 국방부·해경 등을 설득하기 위하여 실무 책임자 중심으로 소통체계를 편성하였고 중앙부처와 소통할 수 있는 국회의원 등 채널에 중점 건의하였다. 특히 주민 간담회, 어업인 회의, 관계 기관 회의, 민·관·군 합동 현지 실사 등을 통하여 조업여건 개선 건의의 미반영 사유를 파악하였고, 안보·해상 작전·경계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수시 의견 조율 등을 대안 제시하였다. 또한, 관계 부처 장관, 국회의원 등 면담 노력을 하는 한편 해수부·국방부·합참·해경청·해병대 등 유관 기관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조업여건 개선을 국가적 현안 사항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언론 보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이처럼 조업여건 개선 관련 협의가 40회 이루어진 결과, 합의안 도출에 이르렀다.

결과 및 기대효과 전국 최초 2년 연속 어장 확장을 통한 접경지역 정주여건 개선

2023년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60년 만에 강화 해역의 조업한계선을 조정하여 여의도 면적의 3배(8.2㎢)로 조업어장을 확장하였다. 이처럼 내 집 앞 어장을 확보함으로써 조업한계선 위반 행위의 미발생 및 조업 시간 단축이 가능해졌다.

2024년에는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도 개정되어 대청도 E어장을 신설(144㎢)하였고, 연평도 어장을 25㎢ 확장하였다. 2023년에 이어 2024년까지 전국 최초로 2년 연속 어장을 확장하여 총 177.2㎢에 달하는 조업어장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서울특별시 여의도 면적의 61배에 달하는 면적이었다.

인천광역시는 조업어장의 확대에 따라 어획량(젓새우, 꽃게, 잡어 등)이 연간 약 250톤 증가하고 어가경비(유류비)가 절감됨으로써 어가소득 증대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조업한계선 조정

적극행정 우수사례

수소충전소 입지 규제개선에 따른 수소 충전 인프라 확대

Brief Report

→ 현 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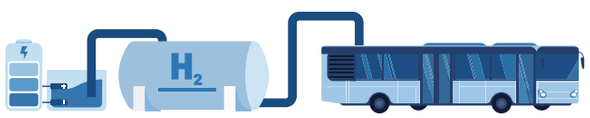
수소충전소는 현행 법규상 주거지역·사업지역·취락지구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m 이내에는 설치 불가로 수소 충전 인프라 확대에 어려움을 겪음

→ 개 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수소충전소)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200m 이격거리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선

규제개선 배경 수소충전소 입지 규제개선의 필요성

제주특별자치도는 미활용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을 위해 그린수소 실증사업을 추진하는 등 수소산업 성장 발판 마련에 힘쓰고 있다. 그리하여 수소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하여 버스 회차지에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주거지역에서 200m 이상 이격해야 한다'는 입지 규제로 수소충전소 입지 선정에 난항을 겪었다. 그 이유는 현행 법규상 수소충전소는 별도 규정이 없어 고압가스 충전·저장소의 하나로 해석되어 주거지역·사업지역·취락지구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m 이내에는 설치할 수 없다는 제약이 걸려 있기 때문이었다.



규제개선 과정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 수소충전소 입지 규제개선

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련 TF 회의를 거쳐 「도시계획 조례」 의견수렴 도민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그리하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계획을 수립하였고 11월에 마침내 개정하였다.

「도시계획 조례」 개정된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등의 지역에서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는 주거지역·사업지역·취락지구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설치 가능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수소충전소)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200m 이격거리 규제 대상에서 제외

결과 및 기대효과 수소 충전 인프라 부족 해소 → 수소산업 성장 발판 마련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시계획 조례」의 일부개정을 이끌어내어 수소충전소 입지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수소 충전 인프라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고 전국 최초로 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그린수소버스 운행의 길을 열었다.

현재 제주시 동부 지역에 그린수소충전소가 설치되어 그린수소버스가 시범적으로 운행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충전소를 지속적으로 추가 설치하여 수소 충전 인프라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제주에 첫 도입된 수소버스


수소충전소

개선사례
지방규제혁신위원회

농·어촌민박
연면적 제한 완화

Brief Report

→ 현 황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민박업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연면적이 230㎡ 미만이어야 한다는 제한 존재

→ 개 선

농어촌민박의 주택 연면적 산정 시 부속건축물의 연면적 별도 산정 또는 관광진흥법상의 한옥체험업의 기준(주거 면적 제외) 준용

규제개선 배경 실질적인 연면적 제한 완화의 필요성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은 부업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어촌민박사업 영위가 가능하다. 다만 농어촌민박업 신고 조건 중에 주택의 연면적이 230㎡ 미만이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고, 이는 경제와 관광이 발전하는 속도와 현 시대 트렌드에 맞지 않는 규제로 지적되었다. 실제로 바비큐장이나 세탁실 등 부대시설이 없으면 이용하는 손님이 아예 없을 정도였고 과도한 규제로 불법 증축하거나 농어촌민박업 신고 없이 불법으로 영업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화재를 비롯한 여러 위험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었다.

단양군은 농어촌의 특성상 부속건축물 등을 합하면 230㎡를 넘어가고 숙박 수요의 증가에 따라 비대면 독채 객실이 필요하기에 기준 면적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관광·숙박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하여 타 숙박업 대비 경쟁력 상실을 우려하였다. 따라서 「농어촌정비법」 제정 취지 및 농어촌민박사업 허용 취지 중 하나가 농어촌 소득 증대임을 감안하여 현행 규제가 농어촌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완화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규제개선 과정 적극적인 규제 조정 활동으로 마련한 규제개선 방안

단양군은 2023년 6월 충북 규제개혁 현장 토론회 논의를 거쳐 2024년 2월 제9차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안건 상정 등 규제개선 건의를 지속하였다. 당초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민박의 과도한 규모화 및 악용을 우려하여 규모 기준 확대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중장기 검토 입장이었다. 그러나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안건 상정 등 적극적인 규제 조정 활동으로 규모 기준을 포함한 전반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변경하였다. 그리하여 지속적인 관련 규정 완화 요구 및 농어촌민박 운영을 위한 제도 정비 방안 연구 용역 완료에 따라 규모 및 시설 기준의 제한 완화 등 현 제도의 전반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다만, 법률안 마련 및 입법 절차 추진이 2025년 시행을 목표로 예정되어 행정안전부에서는 법률 제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개정 병행을 통하여 조속한 규제개선 의견을 제시하였다.

결과 및 기대효과 연면적 제한 완화를 위한 2가지 개선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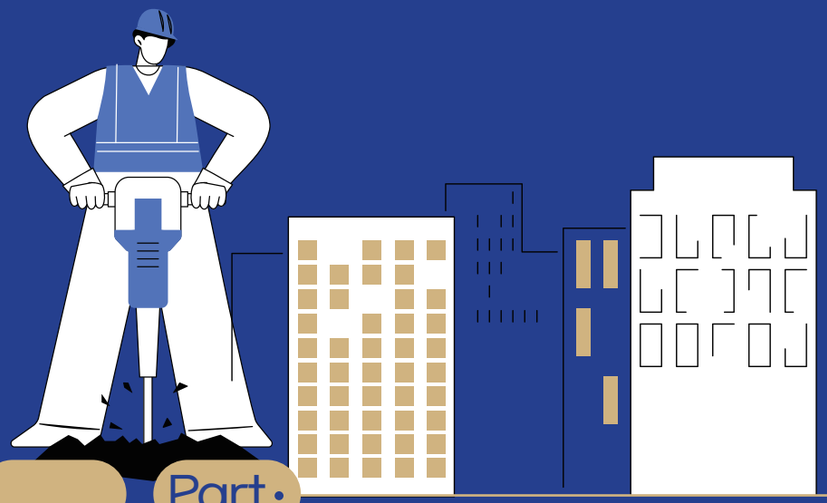
2가지 개선 방안이 도출되었다. 1안은 주택 연면적 산정 시 부속건축물에 대한 연면적을 별도 산정, 2안은 관광진흥법상의 한옥체험업의 기준[3]을 준용하여 농어촌민박 연면적에서 주거 면적을 제외하는 것이었다.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 기준 개선 1안

현 행	→	개 선
주택 연면적 230㎡ 미만		주택(객실) 연면적 230㎡ 미만 + 부속건축물 230㎡ 미만

단양군은 이와 같은 규제개선으로 농어촌민박을 영위하는 농어민의 불필요한 불법 증축 등 불법 행위 감소 및 최근 관광 트렌드 반영으로 농어촌 소득 증대 등의 기대효과를 전망하였다.

3) 관광진흥법상의 한옥체험업에는 주거 면적을 제외한 객실 및 편의시설 등 숙박 체험에 이용되는 공간의 연면적으로 정함



Part • IV

기업 애로 해소 우수사례

행정안전부는 생생한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통하여
현장의 현실과 맞지 않은 제약,
원활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애로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규제개선으로 적극 해소하며
기업하기 좋은 지역환경을 만들어갑니다.

경진대회 우수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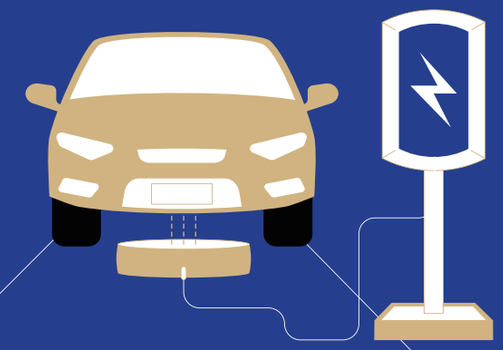
최우수상 ___ 경기도 안양시
우 수 상 ___ 경기도 양주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장 려 상 ___ 울산광역시, 충청남도 서산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상북도 경주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수원특례시, 충청북도 청주시

지방규제혁신위원회 개선사례

대한전문건설협회 ___ 국토교통부(1), (2), 고용노동부, 법무부



경진대회 우수사례
최우수상

카페인 등 식품 기피 성분 표기 규제개선

Brief Report

→ 현 황

식품에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하는 「無○○」 표시 금지는 기업에는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소비자의 선택은 어렵게 함

→ 개 선

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 시행으로 소비자의 판단을 도와주는 '無카페인', '無땅콩', '無우유' 등 표시가 가능해짐

규제개선 배경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규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하는 「無○○」 표시를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부당한 광고로 간주하여 금지하였다. 이를테면 캐모마일, 페퍼민트, 루이보스 등 천연적으로 카페인이 없는 차 제품에 「無카페인」 표기가 불가한 방식이다. 소비자가 「無카페인」표시가 없는 제품에는 카페인이 있다고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였다.

문제는 기업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소비자에게 선택을 어렵게 하는 규제의 부작용이었다. 선진국을 비롯한 대부분 국가에서는 표기를 허용하기 때문에 국내 기업이 수입 판매할 때에는 「○○ Free」의 표기 가림 작업을 해야 했다. 소비자에게는 똑같은 해외 제품이라도 직접 구매할 때와 국내 수입 제품을 구매할 때의 기피 성분의 정보 확인 여부가 달라져서 혼란을 유발하였다.

해외와 국내 수입 제품의 기피 성분의 표기 차이



130여 국가 중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표기 불가

해외의 카페인 Free 제품 통관 시 「카페인 Free」 표시 가림 작업



해외 제품 「카페인 Free」 표시 가림 작업 통관 제품

기피 성분 표시 가림 작업에 따르는 기업 부담

비용 부담	☑ 수작업으로 스티커를 붙여 표시를 일일이 가리거나 제품 용기 교체 사례 안양시 S기업의 경우, 표시 가림 작업으로 매년 4천만 원 소요 → 1,587개 다류업계 전체 연 600억 원 추산
시간 등 부담	☑ 통관 지체 및 작업 폐기물 발생
마케팅 부담	☑ 소비자 신뢰도 하락으로 타격

이와 같은 기피 성분 표시 가림 작업은 국민의 건강권과 선택권도 저해하였다. 카페인 등 각종 성분에 민감한 질환자, 임산부·소아, 땅콩·갑각류·새우·복숭아 등 국내 200만 명 이상의 다양한 음식물 알레르기 보유자, 식육·우유·알 등을 기피하는 채식지향자 등 기피 성분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과 카페인 등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므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규제개선 과정

4년 동안 이루어진 소통과 설득의 과정

안양시는 2020년부터 2023년에 이르기까지 4년 동안 300여 회 끊임없는 실시간 기업 소통, 총 14회 중앙 건의 및 44회 소통, 설문 조사, 전문가 자문, 해외 사례 및 논문 조사, 건의 방향 2회 수정을 통한 건의 대상의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그 결과, 마침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용 의견을 밝히며 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 시행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 내용

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 별표

7. (중략) 다른 영업자의 식품 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나. (중략)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 또는 성분을 강조하는 표시·광고
   신설 다만, 소비자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중략) 표시·광고는 제외한다.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고시 제2조제5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에서 제외 신설
가.「식품표시법 시행규칙」[별표2] Ⅰ.1.가. 에서 규정하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
나. 대체 식품의 특성을 표현하는 원재료: 식육(Meat), 우유(Milk), 알(Egg) 등
다. 카페인, 다류 제품 고유의 공통적 특성으로 카페인이 없고, 최종 제품에도 카페인이 전혀 함유되지 않은 경우 "천연적으로 카페인 미함유"

결과 및 기대효과

기업의 불필요한 부담 해소 및 소비자의 건강권 강화

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 시행으로 소비자의 판단을 도와주는 「無카페인」, 「無땅콩」, 「無우유」 등 표시가 가능해졌다. 소비자는 쉽게 안전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고, 특히 임산부·유아·각종 질환자·알레르기 보유자·채식주의자·채식지향자 등의 건강권 보장이 강화되었다. 기업에게는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 소요 문제를 해결해주었다. 통관 지체와 폐기물 발생 문제가 해소되었고, 표시 가림 작업으로 매년 4천만 원이 소요되던 안양시 S기업의 경우에는 무려 70%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었다. 또한, 기업의 자율 표시를 통한 책임성 있는 제품 관리와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식품 개발이 기대된다. 세계알레르기기구에 따르면 음식물 알레르기는 세계적으로 급증 추세이며 발전된 국가들에서 더욱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므로 향후 알레르기 유발 물질 및 기피 성분이 없는 제품을 찾는 수요가 늘어날 예정이다. 규제 개선의 효과는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며 연 19경 4,760조의 세계 음료·식품 시장 속 K-음료 및 K-식품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기피 성분의 표시 사례

차(茶) 제품에 카페인

천연 無카페인

알레르기 유발 물질

無땅콩, 無새우, 無복숭아, 無메밀

채식지향자 기피 성분

無식육, 無우유, 無알(Egg)

경진대회 우수사례
우 수 상

산업단지 입주협약 권한 확대로 기업 수요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

Brief Report

→ 현 황

산업단지 입주협약 권한이 산업단지 지정 권자(광역시·도지사)에게 한정되어 기초 → 광역 입주협약 요청 시 체결 거부·지연 되는 사례 다수 발생

→ 개 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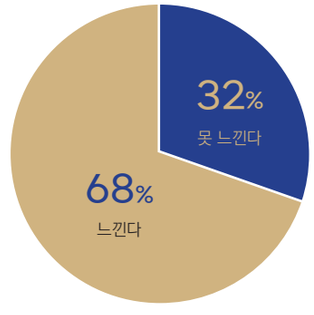
산업단지 입주협약 행정 소요 기간 단축 및 낙후지역의 산업단지 기업 유치 활성화

규제개선 배경

산업단지 입주협약 권한 규제라는 장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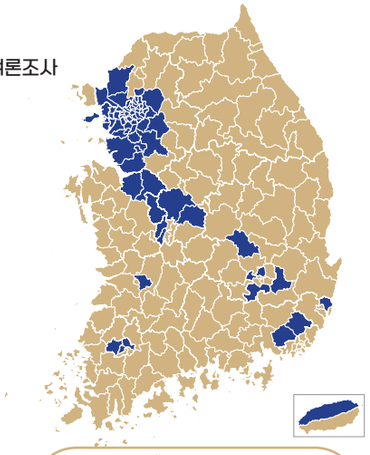
인구 감소와 수도권에 편중된 인구로 낙후지역의 기업 투자 위축 및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는 실정이다. 수도권의 인구 집중화와 지방 소멸의 악순환을 끊는 유일한 해결책은 기업 규제 해소를 통한 지방의 기업 유치 확대이다.

지방 소멸에 대한 여론조사



지방 기업 중 약 68%
기업 운영 위기 체감

자료 : 대한상공회의소



2047년, 전국 229개 지자체 중
90% 소멸 위험 진입

자료 : 감사원

그러므로 경기 북부와 지방에서 낙후지역의 지방 소멸을 막고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지만 산업단지 입주협약 권한 규제로 기초지자체의 기업 유치 좌절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양주시 은남일반산업단지 역시 다이소·로지스밸리 등 앵커기업 유치가 장기간 지연되었다. 30만㎡ 이상 산업단지는 지정권자가 광역시·도지사(광역지자체)로 한정되어 있다.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인 시장·군수는 기업을 유치하여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광역시·도지사에게 입주 수요 검증을 받아 산업단지 업종배치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산업단지 조성 절차



그러나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인 시장·군수가 산업단지 지정권자에게 입주협약 요청 시 체결 거부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면서 문제시되었다.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의 입장 차이

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
국토교통부, 광역지자체 입주 수요 검증을 득한 기업 입주협약 요청	업무 가중 등의 사유로 입주협약 거부, 지연 사례 다수 발생

따라서 양주시는 산업단지 지정권자에게만 있는 입주협약 체결 권한을 시장·군수까지 확대하여 경기 북부, 지방 등 낙후지역의 산업단지에 양질의 우수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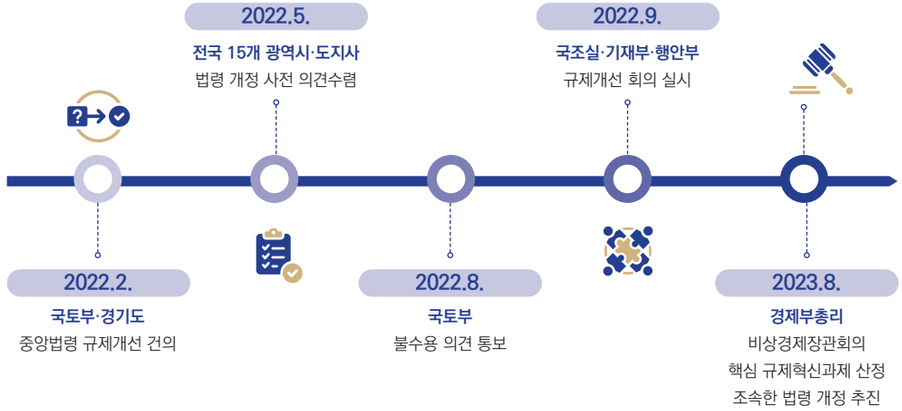
규제개선 과정

불수용을 수용으로 바꾸어내는 노력

양주시는 2022년 산업단지 입주협약 권한을 기초지자체(시장·군수)까지 확대하기 위한 중앙법령 규제개선을 건의하였고, 이후 공용개발 산업단지의 경우 입주협약 권한을 기초지자체까지 허용을 두고 행정안전부-양주시 공동 전국 15개 광역시·도지사에 법령 개정을 위한 사전 의견사항을 수렴하였다.

당시 결과는 수용 13, 수용 곤란 2였고 국토교통부는 불수용 통보를 하였다. 그러나 양주시는 포기하지 않고 중앙법령 규제개선을 위한 중앙부처 확대 협의를 추진하였다. 2개 부처(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에서 5개 부처(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하였고,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 핵심 규제개선과제로 선정되었다.

규제개혁 추진 과정



그리하여 국토교통부 규제개선 최종 검토 결과 수용 통보가 되었다. 이후 2023년 12월 산업단지 입주협약 권한을 시장·군수까지 확대하기로 법령 개정이 이루어졌다.

2023.12. 법령 개정

개정 내용

- 신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4제4항제1의2호
- 기획재정부 2023년 핵심 규제 성과 정책 브리핑 보도
- 대한경제 등 13개 언론사 보도

결과 및 기대효과

지방 소멸의 해답, 규제혁신에서 찾다

산업단지 입주협약 권한이 기초 시장·군수까지 확대되면서 산업단지 입주협약 행정 소요 기간이 8개월~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었고 신속한 기업 유치 추진이 가능해졌다.

대표적으로 양주시는 다이소와 로지스밸리 등 7개 대기업·유망 중소기업을 유치하면서 약 1조 3천억 원의 기업 투자가 가시화되었다. 연천군과 원주시도 법령 개정 후 입주협약이 이루어졌고, 그 밖에 동해시, 양산시 등 전국 지자체에서 입주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양주시는 이와 같은 전국 확산 추세에 힘입어 경기 북부와 지방 등 낙후지역의 기업 투자 활성화 기대를 밝혔다.

경진대회 우수사례
우 수 상

대덕특구 토지 이용 효율화(고밀도 개발)를 위한 규제개선 업무 추진

Brief Report

→ 현 황

대덕특구 1지구(대덕연구단지)는 약 840만 평 규모이나 신기술·신산업을 위한 공간 확장의 어려움,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한계, 교류·융합 저조 등

→ 개 선

2024년 5월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으로 특구 내 공간 부족 어려움을 해결하고 기관·기업의 주도적 개발 촉진

규제개선 배경 대덕특구의 낮은 토지 활용도 문제

대덕특구 1지구(대덕연구단지)는 약 840만 평 규모이나 84%(710만 평)가 토지 활용도가 낮은(저밀도 개발만 가능) 녹지지역이다.

녹지지역 상세 내용

녹지지역 710만 평	316만 평	394만 평
	건폐율 20%, 용적률 80%, 4층 이하	건폐율 30%, 용적률 150%, 7층 이하
	녹지지역 – 녹지구역	녹지지역 – 교육·연구·사업화구역

그러다 보니 신기술·신산업 위한 공간 확장에 어려움을 겪을 뿐더러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혁신 창출을 위한 교류·융합 저조 문제도 지적되었다.
2005년 연구단지에서 연구개발특구로 전환하면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하였으나 저밀도 구조로 연구원 분원 설립 및 기업 이탈 등 비효율적인 문제가 발생하였다.



규제개선 과정 고밀도 도심형 과학클러스터로의 전환 노력

대전광역시는 연구 중심의 대덕특구를 연구와 산업이 연계된 고밀도의 도심형 과학클러스터로 전환하여 미래전략기술·산업을 집중 육성하고자 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획재정부 등에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건의하였다. 개정의 핵심은 대덕특구 내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에 적용되는 층수 제한 완화 및 건폐율·용적률 최대한도 상향이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전광역시는 특구 현황과 문제점, 해결 방안 분석 자료를 제시하였다. 대전광역시의 노력에 힘입어 2024년 5월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었고 8월부터 시행되었다.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개정('24. 5. 14. 개정 공포) ('24. 8. 15. 시행)
7층 이하	높 이	7층 이하
30%	건폐율	40%
150%	용적률	200%
건폐율·용적률 150% 특례, 높이 완화(4층→7층)	특례 사항	건폐율·용적률 200% 특례, 높이 완화 유지

다만, 이번 개정에는 층수 제한 완화가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대전광역시는 2024년 6월부터 중앙부처 등과 층수 제한 완화를 위한 특구법령 개정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결과 및 기대효과 법령 개정으로 연구개발특구 내 건폐율·용적률 상향

대전광역시의 노력으로 2024년 5월 연구개발특구 내 건폐율·용적률 상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건축 면적은 39만 평(1,300천㎡), 연면적은 197만 평(6,504천㎡)을 추가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특구 내 공간 부족 어려움을 해결하고 기관·기업의 주도적 개발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전광역시는 구역 내 200동 이상의 건축물과 600개 이상의 기업, 대학 및 연구시설에서의 연구 인프라 확충 및 투자 확대를 예상하였다. 특히 50년간 축적된 대덕특구의 우수 역량을 기반으로 우주, 나노·반도체, 바이오·헬스케어, 국방, 양자 등 미래전략산업 분야의 기술패권 주도를 전망하였다.

언론 보도 사례



MBC 뉴스 보도
'24.6.16.~6.17.



충청투데이

충청투데이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연구 공간 확보 가능해졌다

충청투데이
대덕특구 새 변화 기대…고도제한 규제 해제는 '숙제'

경진대회 우수사례
우 수 상

운행 중지 철도 부지를 활용한 공장용지 공급

Brief Report

→ 현 황

노후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공장 리모델링 및 업종 변화를 위해서는 부족한 공장용지 확보 필요

→ 개 선

장생포선 철도 노선 폐지에 따라 14여 개 기업체는 투자 규모 약 2,443억 원으로 공장용지를 확장할 수 있게 됨

규제개선 배경

운행 중지된 장생포선 철도 부지의 활용 요구



실제 장생포선 모습



장생포선 노선도

장생포선 철도는 1952년부터 울산 태화강역에서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 내 장생포역까지 유류 화물을 운송하는 전체 연장 3.6km의 화물 전용 철도 노선이다. A업체가 유류 화물 수송을 중단하면서 2018년부로 운행을 중지하였다. 당시 A업체의 공장용지 내 노선 1.4km는 바로 철거 완료되었으나 철도 노선과 접한 입주기업체들은 잔여 노선 면적 18,607㎡의 철도 부지를 공장용지로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며 2022년부터 건의하였다. 그러나 유선 및 방문 설명, 현장 확인 등 20여 차례의 지속적인 건의에도 불구하고 철도 관리기관인 국가 철도공단과 국토교통부는 신규 화물 노선을 발굴하고 있는 국가정책에 반하여 노선 폐지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경진대회 우수사례
장 려 상

미활용 산업용지 주차장·야적장 임시 사용을 위한 법령 개정

Brief Report

→ 현 황

산업단지 내 다른 기업에 분양된 인근 미활용 용지가 있으나 현행법상 공장 완공 전 임차 불가능하여 곤란을 겪음

→ 개 선

법령을 개정하여 산업단지 내 미활용 용지를 예외적으로 임대할 법적 근거를 마련함

규제개선 과정 장생포선 노선 폐지 및 공장용지 활용을 위한 노력

울산광역시는 2024년 1월부터 기획재정부에 기업·지자체 투자 프로젝트 애로 사항을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의 '시·도 경제협의회'와 '비상 경제장관회의', 행정안전부의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등 장생포선 철도 노선 폐지의 당위와 기업체 공장용지 확장의 필요성을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였다. 제13차 민생토론회에서도 본 안건을 건의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토교통부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는 2024년 6월까지 장생포선 노선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으며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다.

결과 및 기대효과 철도 폐선 부지의 활용에 대한 새로운 방안 제시

장생포선 철도 노선 폐지에 따라 14여 개 기업체가 각각 울산광역시에 국가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하고 용도폐지 협의 등을 거쳐 용지를 매입하여 공장용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투자 규모는 약 2,443억 원으로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추는 공장 리모델링 및 업종 변화 등이 가능해지면서 기업경쟁력을 크게 강화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특히 대부분 관광 목적이던 철도 폐선 부지의 기존 활용 방식이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장용지의 확장으로 전환됨으로써 타 지자체의 폐선 철도 활용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였다.

언론 보도 사례



울산제일일보

울산매일

울산제일일보

울산광역시의 철도 폐선 부지 활용 방안 발표

市, 다음주 국가철도공단에 폐선신청 예정
국토부 6월까지 폐선 철도위원회 열어 의결
철도부지 해제땐 9개사 2천억대 투자 계획

울산매일

'장생포선 부지' 공장용지 활용 급물살

(울산-미포국가산단 내 운행 중단 철도 부지)

윤석열 대통령, 울산 민생토론회서
"공장부지로 쓰도록 조속 추진을"

시, 인근 11개 기업 의향서 토대로
활용계획 수립 철도공단 제출키로
상반기 중 폐선 절차 마무리될 듯

공장 증설·확장 걸림돌 해소
기업 투자유치·경제 활성화 기대

규제개선 배경 온산국가산단의 극심한 주차난

산업단지 내 추진되는 대규모 투자사업의 경우, 대규모 인력 투입에 따른 교통체증 방지를 위한 주차장 확보 및 자재·기계·장비 등의 적재를 위한 야적장 공간 확보가 필수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산업단지 내 유휴부지(공장 미건축 부지)가 있어도 임대할 수 없다.
1960년대 조성된 울산광역시의 온산국가산단도 다른 기업에 분양된 인근 미활용 용지가 있으나 현행법상 공장 완공 전 임차가 불가능하고 공장 및 부지 동시 임차만 가능하였다. 그래서 9조 2,580억 원이 투입되는 단일 규모 최대 투자사업으로 2023년 3월 착공한 S-OIL 샤힌 프로젝트도 본격적인 플랜트 공사 전 주차장 및 야적장 등으로 활용할 부지 약 7.2만 평을 확보하지 못하는 난관에 부딪혔다.

샤힌 프로젝트 주차장과 야적장 예상 수요

주차장 예상 수요(1일 최대)		야적장 예상 수요	
근로자	13,000명	철골	90,000톤
차 량	승용차 1,500대 버스 200대	기계	132,000톤
		배관	4,123km
		전기케이블	4,177km 등



산단 내 불법 주차

온산국가산단은 주차 공간이 협소하고 대부분 도로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데다 기업 내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불법 주차가 만연한 문제가 있었다.

과거 S-OIL RUC/ODC 프로젝트 추진 시에도 주차장 부족으로 현장 인근 주차에 따른 온산공단 내 교통혼잡 사례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S-OIL의 샤힌 프로젝트가 본격화되어 대규모 근로자가 투입되면 주차대란 발생 및 교통혼잡, 사고 위험 증가에 대한 우려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이에 공장 완공 전 미활용 용지를 임차할 수 있도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시급하였다.

규제개선 과정

협의와 건의로 이끌어낸 산집법 개정

산업시설용지의 임대를 위해서는 입주 계약 및 공장 등록을 완료해야 하였다. 예외 규정은 해당 사항이 없었다. 이에 따라 울산광역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을 받아 산업시설용지 임시 주차장·야적장 확보를 위한 중앙정부·유관 기관의 협의 및 건의를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 안건 상정으로 2023년 11월에는 샤힌 프로젝트 주차장·야적장 확보 관련 산집법 개정이, 2024년 3월에는 산업시설용지 주차장·야적장 임시 사용을 위한 산집법 개정이 추진되었다.

결과 및 기대효과

산단 내 교통체증 해소 및 물류 비용 절감

산업통상자원부 정부 입법으로 산집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서 산업단지 내 미활용 부지를 예외적으로 임대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산집법 개정 내용

신설 **제38조의3(연접한 입주기업체에 대한 임대)**

2.입주기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산업시설구역 등의 산업용지를 해당 산업단지에 공장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려는 자(건설공사를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건의 적치, 건설공사 관련 차량의 주차 등을 목적으로 임대하려는 경우로서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한, 법률 개정 후 산단 조성 목적, 경제적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사 기간 동안 산단 산업시설용지 내 공장 건축을 위한 건설업체의 한시적 입주가 허용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승인을 통한 입주 자격 부여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⑦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조성 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할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법률 개정으로 산단 내 사업장 인근 주차장·야적장 확보로 교통체증 해소 및 물류 비용 절감 등 효과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S-OIL 샤힌 프로젝트의 경우 30억 원 정도 물류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울산광역시가 적극적인 규제개선의 노력으로 중앙부처(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하여 이루어낸 성과이다. 울산광역시는 규제 해소를 통하여 S-OIL 샤힌 프로젝트, SK 지오센트릭 ARC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전국 산단 내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공통된 기업 애로 사항 해소와 향후 투자사업의 활성화 촉진을 기대하였다.



경진대회 우수사례
장 려 상

산업단지 내 주차장 임대, 기업 애로 사항 해결을 넘어 법률 개정까지 1+1

Brief Report

→ 현 황

산업단지 내 유휴부지를 임대하여 주차장으로 이용하려 하였으나 산업시설용지는 주차장 목적으로 임대 불가

→ 개 선

법령 개정으로 유휴 상태인 산업시설용지의 활용도 제고 및 산단 내 주차 문제 해결

규제개선 배경 — 공사 근로자 차량 주차장 및 야적장 확보 필요성

충청남도 서산시에서는 SK온 공장 증설(2023.7.~2025.12.)에 따른 도로변 공사 근로자 차량 주차 문제로 민원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인근에 있는 유후부지, 즉 산업시설용지를 분양받고 입주를 하지 않은 미활용 부지를 임대하여 공사 근로자 차량 주차장으로 이용하려 하였으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는 주차장 목적으로 임대 불가하였다. 야적장 목적으로도 임대가 불가하여 산업단지 외에서 건설자재를 보관함으로써 공사 기간 연장, 투자 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교통 관련 부서만의 문제가 아닌 공사 근로자 차량 주차장 및 야적장 확보라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규제개선 과정 — 유휴부지 소유 기업 설득 및 규제개선의 노력

서산시는 우선 공사 근로자의 차량 주차 문제를 해결해줄 주차장 확보를 위해 유휴부지 소유 기업을 설득하여 무상 사용 승낙을 받았고, SK온에 공사 근로자 차량 주차 목적으로 무상 사용 승인을 하였다. 유후부지 소유 기업들의 협조가 소극적이어서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서산시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동의해준 기업에게 「지방세법」에 따라 무상 사용 기간 동안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설득의 노력을 하였다.

현대위아의 재산세 감면 — 사례

현대위아의 소유 토지 89,300㎡ 무상 사용 합의
→ 무상 사용 기간(2024.3.20.~2025.6.30.) 동안 재산세 감면 혜택

동시에 투자 관련 규제개선의 노력도 하였다. 2024년 1월, 산집법 개정을 위하여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에 미입주기업의 유휴부지를 야적장·주차장 목적으로 임대 불가에 따른 기업 애로 사항을 건의하였다. 3월에는 기획재정부 비상경제장관회의 「기업·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 방안」으로 산단 내 공사 대상지역 인근 미활용 부지를 주차장·야적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4월에는 기획재정부 관계자 및 산업통상자원부 현장 방문이 있었다. 이와 같은 노력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로 이어졌다.

제안 이유

산업단지 내 대규모 공장의 신·증설 공사 시 입주기업체 등이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건의 적치, 건설공사 관련 차량의 주차 등을 위해 필요한 유휴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산업용지의 한시적 임대를 허용하고, 실수요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산업용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제9항의 단서에 따라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의 임대제도를 정비

결과 및 기대효과 — 도로변 주차 문제 해결 및 기업의 투자 활동 촉진

서산시는 법령 개정을 통하여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사 근로자 차량 주차장 조성 후 산업단지 내 주요 도로변 주차 대수 0대가 되었다고 밝혔다. 하루 평균 산업단지 내 주요 도로변에 주차하는 근로자 차량 수가 약 1,050대였던 이전과 비교하면 놀라운 결과였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4건의 민원 평가는 '매우 만족'이었고, 공사 근로자 주차장부터 SK온 공사 현장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한 SK온의 적극적인 공사 근로자 수송 대책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처럼 법령 개정으로 유휴 상태인 산업용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공장 신·증축 시 야적장 및 주차장 확보 부담을 감소한 서산시의 노력에 힘입어 향후 기업의 활발한 투자 활동이 기대된다.

공사 근로자 차량 주차장 조성 전후 비교

주차장 조성 전 → 주차장 조성 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주 강동일반산업단지 구역별 부분 준공

Brief Report

→ 현 황

장기간 미준공 산업단지 입주기업체들이 토지 등기 미정리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구역별 부분 준공을 추진

→ 개 선

적극적인 규제개선으로 준공이 가능한 구역별 부분 준공을 통해 기업 애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규제개선 배경 — 입주기업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 문제

강동일반산업단지는 민간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민간개발 산업단지로 2010년 4월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고 13년 동안 장기 미준공 상태였다.

입주기업별로 구 지번에 지분 등기가 된 상황으로 산단 전체 부지의 준공을 위해 모든 토지의 소유명의인을 동일하게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입주기업의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 꾸준한 민원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구역별 부분 준공을 추진하게 되었다.

규제개선 과정 — 구역별 부분 준공으로 해법 모색

경주시는 장기 미준공 산업단지의 준공을 위한 방향 및 행정 절차를 검토하였다. 그러나 산업단지 시행자의 자금 마련이 어려워 산업단지 확장계획 승인 시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어 산업단지 확장으로 인한 준공은 어려웠다. 이에 경주시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30조에 의거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이 곤란하고 공장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공구 분할을 통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절차를 거친 후 조성 완료된 구역에 한하여 부분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시장 직소민원 개최에 따른 강동일반산업단지 부분 준공을 검토하였고, 강동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협의회 임직원 만남을 통하여 행정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부분 준공을 위한 행정 절차

시행자 — 입주기업 수요 조사
- ☑ 구역(블럭)별 입주기업들의 일부 준공 의향서 접수

시행자 — 구역별 확정측량
- ☑ 산업단지 구역별 지구계 분할 및 확정측량
- ☑ 구구역별 모든 토지의 소유명의인 동일화(1인등기)

시행자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 ☑ 확정측량 결과 및 공구 분할을 반영한 계획 변경
- ☑ 산업입지법 제19조의2에 의거 고시

경주시 — 부분 준공
- ☑ 공공시설별 준공인가 검토(도로시설물은 전체 준공 원칙)
- ☑ 산업입지법 제37조에 의거 준공인가

시행자 — 가격 정산
-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26조의15
- ☑ 준공인가 후 1개월 이내에 실시

경주시 — 지적공부 정리(경주시)
- ☑ 구역별 구 지번 폐쇄 후 신 지번 부여

법 원 — 소유권 등기(법원등기소)
- ☑ 지적공부 정리 결과에 따른 구역별 등기 확정



결과 및 기대효과

적극적인 규제개선으로 기업 애로 해소

경주시에는 10년 이상 미준공 산업단지가 8개소가 있다. 경주시는 경주 강동일반산업단지의 부분 준공 사례를 시작으로 유사한 장기 미준공 산업단지의 부분 준공을 검토 후 적용할 예정이다. 이처럼 준공이 가능한 구역별 부분 준공을 통해 입주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성과가 기대된다.

또한, 경주시는 강동일반산업단지 부분 준공 사례의 전국 유사 사례에 적용 확산을 전망하였다. 실례로 인근 지자체가 해당 지자체 내 장기 미준공 산업단지 준공 검토 중에 언론 보도를 통해 경주의 일반산업단지 부분 준공 사례를 접하고는 참고하여 적용하고자 경주시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언론 보도 사례

경주 강동산단 13년째 미준공… 부분 준공으로 '돌파구'

1인 명의로 산단 필지 등기 이뤄지지 못하며 장기 미준공 사태
경주시, 부분 준공 검토해 입주업체 재산권 행사 지원
10년 이상 장기 미준공 산단 경주만 8곳…경주시 부분 준공 확대 검토



경북 경주시는 민간시행사 5곳이 조성 중인 강동일반산업단지의 장기간 미준공 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구역별 부분 준공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산단이 오랜 기간 준공되지 않으면서 입주 기업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자 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강동일반산단은 2010년 4월 경주 강동면 왕신리 일원에 99만 1631㎡ 규모로 산업단지계획을 승인받은 후 13년 동안 미준공 상태로 남아있다.
현행 규정 상 산업단지 준공을 위해서는 지분 정리 등을 통해 대표 1인 명의로 산업단지 내 모든 필지를 등기해야 한다.

그러나 강동산단의 경우 소유자가 저마다 다른데다 토지를 이용한 대출까지 이뤄지면서 13년째 준공을 못하고 있다.
미준공 상태에서는 입주기업들이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해 금융권 대출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

반면, 산업단지 특성상 준공 전이라도 입주가 가능해 현재 강동산단 입주율은 99%에 달한다.
이에 경주시는 산업단지 미준공으로 인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강동일반산단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 협의회와 지속적인 만남을 갖고 행정절차 이행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경주시는 강동 일반산업단지 구역별 부분 준공을 시작으로 다른 산업단지도 부분준공 가능여부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경주지역에는 10년 이상 미준공 산업단지가 강동일반산단을 포함해 8곳에 달한다.

사업시행사인 강동산단(주) 측은 부분준공에 필요한 행정 절차 이행을 통해 입주기업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밝힌 상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앞으로 장기 미준공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적극 행정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규제 개선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노컷뉴스

적극행정 우수사례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른 이차전지 소재 제조업 투자 애로 해소

Brief Report

→ 현 황

한국표준산업분류 전면 개정에 따라 이차전지 소재(양극활물질·음극활물질) 제조업의 상위분류가 변경 예정(C28→C20)되어 해당 제조업체의 산업단지 입주 가능 여부에 혼란 발생

→ 개 선

해당 업종이 입주하는 산업단지에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할 수 있게 하고, 업종 세세목을 지정하여 산업단지 입주 허용 업종으로 지정

규제개선 배경

이차전지 소재 제조업의 업종분류 변경

대구광역시는 이차전지 소재 분야에서 초격차 기술을 보유한 ㈜엘앤에프와 지역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5,500억 원 투자 유치를 성사하였다. 그러나 한국표준산업분류 전면 개정으로 이차전지 소재인 양극활물질·음극활물질의 제조업 코드가 기존 C28(전기장비 제조업)에서 제외되고 C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으로 변경되면서 ㈜엘앤에프의 투자 진행 및 산업단지 내 적기 입주에 애로가 발생하였다. 일반적으로 C20은 산단 입주 허용이 되지 않고 대구광역시의 국가산단 2단계 구역도 C28 업종은 허용, C20 업종은 입주 불가였기 때문이다.

제조업 코드 변경 내용

기 존	→	변 경
미래형자동차(C30), 차세대 전자·통신(C26, C29)		신재생에너지(C28, C23, C29)

특히 ㈜엘앤에프는 음극재 분야 기술 이전 등을 위해 일본 기업과 합작사 설립으로 투자 진행을 준비하던 차라 업종분류 변경 시 적기 투자 난항이 우려되었다. C20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으로 변경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이었다.

규제개선 과정

지속적인 건의와 협의를 통한 규제개선의 노력

2024년 1월부터 3월에 걸쳐 이차전지 소재 제조업의 업종분류 변경에 따른 애로 해결을 위한 시·도 경제협의회·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를 하였고, 국토교통부·LH 등 관계 부서와도 협의하였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구역에 양극활물질·음극활물질 생산에 한해 입주 업종 추가 방식을 논의하였고, 기업과 대책 회의 및 합동 대응도 추진되었다. 그리하여 관련 건의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등 소관 정부 부처의 적극적인 검토 및 해결 방안 도출이 이루어졌다.

결과 및 기대효과

국토교통부 지침으로 기업의 투자 장애 해소

2024년 4월, 국토교통부 지침을 통하여 이차전지 소재 양극활물질·음극활물질 제조 업종이 입주하는 산업단지에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할 수 있게 하고, C20이 산업단지 입주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업종 세세목(양극활물질 제조 20129, 음극활물질 제조 20499)을 지정하여 산업단지 입주 허용 업종으로 지정하였다. 그 결과, 복잡한 절차 없이 지침에 따른 변경 절차 진행으로 기존 C28 코드를 통해 양극활·음극활물질을 생산하던 기업이 투자 일정에 차질 없이 산단 입주 및 추가 투자 진행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언론 보도 사례



대구일보

2024년 02월 06일 화요일 002면 종합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 대구 소통마당

5일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회의실에서 열린 '지역 경제정책 대구 소통마당' 행사에 참석

자부, 투자기업 건의사항 모색

행사 개최

션 등 참석

공유·토의

한국일보

2023년 11월 28일 화요일 Y11면 지방

'양극재' 명가 엘앤에프, 대구에 2조5500억 신규투자

국가산단에 소재 클러스터 조성

어제 달성 구지3공장서 MOU

LFP배터리 양극재 라인 확충

차세대 배터리 음극재 제조설비도

한국일보

대구일보

적극행정 우수사례

전국 최초! 휴·폐업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업무 처리 개선

Brief Report

→ 현 황

허가관청의 휴·폐업 신고제도가 없는 다중이용업주의 경우, 영업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보수교육 이수(2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를 해야 해서 업주들의 불만이 제기됨

→ 개 선

휴·폐업 유무를 확인하여 소방관서장 직권으로 보수교육 유예를 결정할 수 있게 개선하여 영업주와 실무자의 업무 부담 경감

규제개선 배경

허가관청의 휴·폐업 신고제도 부재 업종

소방청 업무 지침상 허가관청의 휴·폐업 신고 시 보수교육을 유예·면제하고 있으나 허가관청에 휴·폐업 신고제도가 없는 다중이용업주는 영업하지 않는 상황일 때에도 계속해서 보수교육 이수 안내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다중이용업종 총 27종 가운데 무려 22종이나 휴업 신고제도가 없는데 보수교육 미이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기 때문에 영업주의 부담이 컸다.

허가관청의 휴업 신고제도 유무

다중이용업종: 총 27종(12,473개소, 2023년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 통계, 부산 기준)

1) 허가관청 있는 업종 : 20종 12,158개(97.5%)
→ 휴업 신고 있음 : 5종* 665개(5.3%)
→ 휴업 신고 없음 : 15종 11,493개(92.2%)
* 산후조리원, 안마시술소, 스크린골프 연습장, 학원, 실내 사격장

2) 허가관청 없는 자유업종 : 7종 315개(2.5%)

소방은 휴·폐업 정보 확인이 가능한 연계 시스템이 없고 허가관청의 공문 통보에 따라 정보를 확인하기에 세무서에만 휴·폐업 신고를 하고 허가관청에 미신고하는 경우, 영업하지 않는데도 소방 보수교육 이행 안내를 받고 항의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 세무서 폐업 후 업주 잠적 시에는 보수교육 관련 업무 추진이 아예 불가하였다. 다중이용업소 업무 지침 내 예외 규정이 없기 때문이었다. 또한, 세무서 휴업 신고 시 유예가 신설된 식품·공중위생법과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규제개선 과정

법령·개정 건의 및 자체 방침의 선제적 시행

부산광역시(부산소방재난본부)는 2024년 2월, 세무서 휴·폐업 시 소방에 통보되지 않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부산지방국세청에 공문을 발송하였고 5월에는 소방청에 법령·지침 미비점 개선을 건의하였다. 법령·지침 개정까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민원인의 편의 및 타 법령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부산광역시 자체 방침을 결재 후 시행을 하였다. 6월에는 부산광역시(부산소방재난본부)의 법령·지침 미비점 개선 건의에 대하여 소방청이 휴·폐업 시 유예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훈령 개정 수용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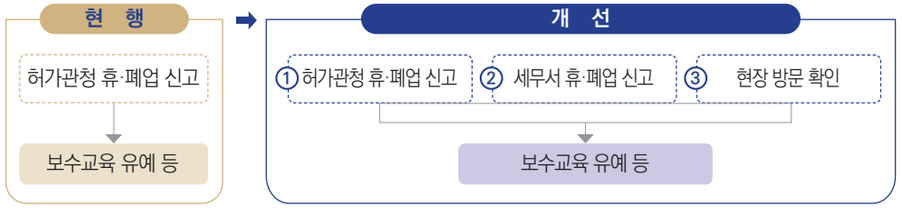
결과 및 기대효과

영업주의 의무와 실무자의 업무 부담 경감

휴·폐업 다중이용업주의 의무 및 실무자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종 구분 없이 동일 처리 기준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휴·폐업 유무를 확인하여 소방관서장의 직권으로 유예 결정이 가능하게 하였다.

개선 내용

휴업	☑ 허가관청 휴업제도 부재를 고려치 않은 불합리한 의무 부과 개선 ☑ 위생교육(타 법령)과 형평성 고려, 세무서 휴업 신고 시 교육 유예 반영 → 세무서에 휴업 신고 확인 시 보수교육 유예 처리로 적극행정 추진
잠적	☑ 다중이용업주 연락 불가인 경우 현장 확인 직권처리 예외 규정 마련 ☑ (장기)부처 간 휴·폐업 정보 공유체계 마련 등 대책 필요 → 현장 방문을 통한 휴·폐업 유무 확인, 소방관서장 직권으로 교육 유예 등 결정



부산광역시(부산소방재난본부)는 다중이용업주의 교육 이수(2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으로 영업주의 의무와 실무자의 업무 부담을 효과적으로 경감하였다. 타 법령과의 형평성에 맞는 개선으로 해당 민원 발생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시민 편익과 행정 만족도를 제고하였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유재산 납부의 관행 행태 규제개선으로 전기차 급속 충전시설 설치 걸림돌 해소

Brief Report

→ 현 황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에 따른 한전 변압기 설치 공유재산 사용료에 대하여 충전 사업자의 공유재산 사용료 대납 또는 무상 사용 협약 조건 등의 관행적인 행태 지속

→ 개 선

한전의 협약 변경 및 민간 충전 사업자의 납부 의무에서 벗어난 관행적인 대납 행태 개선

규제개선 배경

변압기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에 대한 논란

2022년부터 주차면 50면 이상인 공공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총 주차면의 5%를 전기차 충전시설 부지로 제공하여야 했다. 이에 공공기관은 충전 사업자에게 토지 사용 허가(평균 5년)를 하여 충전기 설치 운영을 하되 충전 사업자의 급속충전기 변압기 설치 부지 대행 납부 방식을 추진하였다. 전력 공급 증가를 위한 변압기 설치가 필수적이나 한전 측에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시, 전력 공급 거부로 급속충전기 설치가 어렵기 때문이었다. 반면 완속형 전기충전기를 설치하면 이용 효율성 저하 등 이용자의 불편 민원이 발생하였다.

충전기별 완충 시간



그러나 공공청사 내 변압기 설치의 경우 민간 충전 사업자가 공유재산 사용료 대납을 일반화하는 한전 내 관리 규약은 엄연한 불공정 행태였다. 또한 한전의 공유재산 사용료 납부 거부로 기관별 변압기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가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었다.

자치단체별 한전의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상이

공공기관 \ 부과 물건	전기차 충전기	변압기 설치 부지	비 고
환경부 사업	면 제	면 제	행정안전부 질의 결과('15.8.7.) ※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
경기도 내 53%	충전 사업자 납부	면 제	한전의 무상 계약 내부 규정 요구에 따름
경기도 내 수원특례시 등 33%	충전 사업자 납부	한전 납부	공유재산 관리법의 면제 규정 없음 (행정안전부 질의 결과 근거)

이와 같은 변압기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혼선은 행정기관의 신뢰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커 불합리한 관행적 행태의 규제개선이 필요하였다.

변압기 공유재산 사용료를 두고 상이한 입장

한국전력공사
전기차 충전사업은 국가사업으로 공유재산 납부 대상 아님

전기차 충전 사업자
변압기 소유자인 한전에서 공유재산 사용료 납부 주장

공유재산 관리부서(행안부)
한전은 공유재산 면제 대상 아님

규제개선 과정

관행적 규제 행태의 개선을 위한 노력

2022년 공공청사 내 급속충전기 민간사업자 업무협약을 통하여 급속충전기 설치사업을 추진하였다.

단계별 진행

1. 한전 변압기 설치 요청
2. 한전관리규약에 따라 변압기 설치 무상 제공 요청
3. 행정안전부에 공유재산 사용료 납부 주체 질의
4. 한전의 전력 공급 중단 (한전에게 변압기 공유재산 사용료 납부 요구 시 전력 공급 불가 입장 고수)
5.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사용료 납부 의무 대상
6. 급속충전기 설치 민원 발생 (충전 사업자, 전기택시 동호회 등)
7. 한전 업무 협의
8. 민·관 합동 간담회
9. 한전의 공유재산 사용료 납부 의무 이행 개선
10. 공공청사 내 충전기 설치 완료 (2023.12.)

결과 및 기대효과

관행적인 규제 행태의 개선으로 시민 편의성 제고

2023년 12월부터 변압기 설치 부지 공유재산 사용료의 한전 납부 원칙이 시행되었다. 이로써 한전의 전력 공급시설 설치 시 공공부지 무상 제공 협약란 삭제 후 협약 체결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수원특례시는 충전기 설치사업의 행정 절차 논란 회피를 위한 충전 사업자의 공유재산 사용료 대납 행태를 근절하여 앞으로 전기차 급속충전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사업자, 즉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시민의 충전 편의성을 증대함으로써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촉진하여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마중물 역할을 기대하였다.



공공기관 급속충전기 설치 환경 조성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장의 창고용 가설건축물 이격거리 삭제를 통한 기업활동 보장

Brief Report

→ 현 황

연면적 200㎡ 이하의 공장의 창고용 가설건축물을 건축할 시 인접 건축물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이상 띄워 건축이 필요한 규제로 기업 운영에 애로 사항이 있었음

→ 개 선

조례 개정으로 공장의 가설건축물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건폐율에 따른 창고시설의 증설이 어려운 개별입지 공장들에 대한 창고시설 면적 확대로 기업활동 보장

규제개선 배경 — 기업 운영에 애로 사항이 되는 규제

「청주시 건축 조례」 제22조제3항의9(가설건축물)에 따라 공장의 생산제품 및 자재 보관을 위하여 건축하는 연면적 200㎡ 이하의 창고용 경량철골조 건축물의 경우, 인접 건축물 및 대지경계선에서 3m 이상을 띄우도록 이격거리가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 개별입지 공장이 한정된 건폐율로 공장 증설에 어려움을 겪으며, 특히 해당 규정으로 창고 등 자재 보관용 가설건축물을 건축할 때 공간 확보가 여의치 않은 불편이 컸다. 이처럼 기업 운영에 애로 사항으로 건축물 면적을 축소하고 생산성이 감소하는 등 부작용이 지적되어왔다.

규제개선 과정 — 기업 규제 애로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

2022년 9월, 기업 규제 애로 개선 건의 접수에 따라 관련 부서 검토가 요청되었다. 11월에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활동으로 ㈜유경케미칼 현장 방문하여 기업인을 면담하고 규제 애로를 청취함으로써 개선 필요성을 공감하였다. 12월에는 규제입증책임제 상정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 개선을 권고하였고 2024년 4월에 조례 개정을 위한 업무 협의를 하였다. 6월에 조례 개정 등을 위한 건축 간담회를 통하여 건축공무원, 관련 부서 공무원, 건축사, 기업의 의견 공유 및 개선 방안 모색을 협의하였다. 그리하여 7월에 「청주시 건축 조례」 개정이 추진되었고, 마침내 11월에 개정된 조례가 공포 및 시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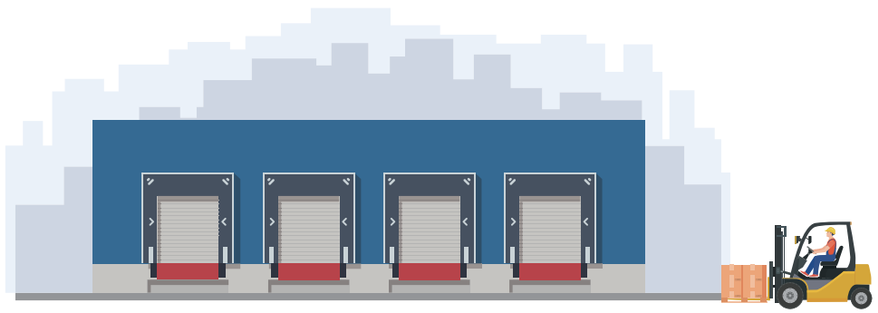
결과 및 기대효과 — 조례 개정을 통한 적극행정으로 기업활동 보장

청주시는 「청주시 건축 조례」 개정을 통하여 공장 가설건축물 이격거리 조항을 삭제하였다.

「청주시 건축 조례」 개정 내용

	개정 내용
제22조 (가설건축물) 제3항의9	법 제2조제2항제17호의 공장으로서 생산제품 및 자재보관을 위하여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용 경량철골조 건축물. (“다만, 별동으로서 인접건축물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띄어야 한다.”삭제)

공장 내 가설건축물에 대한 이격거리 의무 부과를 삭제하여 공장 자재 보관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건축할 때 공간 확보 및 자재 보관을 용이하게 하여 기업 애로를 해소하였다. 그 결과, 중·소규모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인의 대지 활용도를 높이고 이격거리 삭제로 건축물 면적의 증가에 따른 생산성 향상 및 기업인 부담 완화의 효과가 있었다. 이와 같은 기업인 및 중·소규모 제조업자의 창고시설 확충 및 건축에 힘입어 향후 기업인의 원활한 경제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개선사례

지방규제혁신위원회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 현실화

Brief Report

→ 현 황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의 금액이 1993년 기준으로 현재 건설산업의 실정과 맞지 않고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은 건설자재를 사용 중인 건설 현장에도 20㎡ 이상의 시험실을 설치해야 하는 등 지역건설사의 어려움 호소

→ 개 선

품질시험계획 대상 ①공사 금액에 KS인증 자재비는 제외하고 공사비 상향 검토 ②시험실 규모 완화(20㎡ → 18㎡)

규제개선 배경 — 건설 현장의 시공 품질관리를 위한 의무 규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 현장의 시공 품질관리를 위해 토목공사 5억 원, 전문공사 2억 원, 연면적 660㎡(건축) 이상 건설공사에는 ①품질시험계획 수립 ②품질관리기술자 배치 ③시험실 설치(20㎡ 이상) 등이 의무이다.

그러나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의 금액은 30여 전 1993년 기준으로 그동안 건설산업 성장 규모나 타 법령의 유사 사례를 대비하여 과도하였다.

또한,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은 건설자재를 사용하는 건설 현장에 품질관리기술자의 인건비와 시험실 설치비 부담도 불합리한 애로 사항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지역건설사는 품질관리기술자의 고령화, 건설업의 3D 이미지, 품질관리 업무 비선호 등 이유로 품질관리기술자를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과 국내에서 사용하는 컨테이너는 대부분 18㎡ 규모가 유통되므로 시험실(20㎡ 이상)은 별도 컨테이너 제작이 필요한 문제를 호소하였다.

규제개선 과정 — 지역건설사 규제혁신 현장 토론회에서 논의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업종협회를 통해 「지역건설사가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 190건을 발굴하였다. 그 가운데 20개 중점과제 선정 및 「맞춤형 지역건설사 규제 애로 해소 지원 방안」 수립을 하였다. 이후 부처 협의를 거쳐 지역건설사 규제혁신 현장 토론회에서 논의하였고, 제14차 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 개선 방안에 대해 원안 접수가 되었다.

결과 및 기대효과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국토교통부에서는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공사의 시험실 규모 현실화(18㎡)를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였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별표 5]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 기준(제50조제4항 관련)

대상 공사 구분	공사 규모	시험·검사 장비	시험실 규모	건설기술인
중급 품질 관리 대상 공사	총 공사비가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특급 및 고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검사 장비	현 행 20㎡ 이상 개정안 18㎡ 이상	가. 품질관리 경력 1년 이상인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초급 품질 관리 대상 공사	영 제89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검사 장비	현 행 20㎡ 이상 개정안 18㎡ 이상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현장 여건 및 실제 컨테이너 면적을 고려하여 배치 기준을 조정한 결과, 시험실 설치·해체 비용의 절감이 예상되었다.

시험실 해체·절감 기대효과

* 대한건설협회 추정치
– (5억 원~500억 원 공사 건수) × (20㎡ → 18㎡ 면적 축소 시 절감 비용) = 33,473개(2022년 기준 종합건설업조사 기준(대한건설협회)) × 126,823/㎡(표준품셈 기준(가설건축물 설치 해체)으로 산정한 공사비) × 2



국토교통부는 향후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 기준 금액의 상향 조정 및 총 공사비에서 한국산업표준(KS) 인증 자재비 제외를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품질시험이 불필요한 건설공사가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공사로 분류되지 않도록 검토하여 불필요한 시설 및 기술인 배치를 예방할 예정이다.

개선사례
지방규제혁신위원회

도로굴착사업
불가 사유 규제 완화

Brief Report

→ 현 황

신설도로의 노면 굴착제한으로 수도·송전 등과는 다르게 배전·통신은 소규모 굴착공사만 허용되어 전기·통신 공급을 위한 굴착공사의 경우, 도로굴착 허가에 어려움이 있음

→ 개 선

굴착제한 예외에 '전기·통신 공급용 주배관시설' 추가하여 전기·통신 공급을 위한 굴착공사의 경우에도 굴착공사가 가능하게 법 조항을 개정

규제개선 배경 — 전기·통신 공급을 위한 도로굴착 허가 제한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신설도로(차도 3년, 보도 2년)의 노면 굴착제한이 수도·송전 등의 주배관시설과 배전시설은 적용되지 않지만, 배전·통신시설은 길이 10m 이하 등의 소규모 굴착공사만 허용되어 있었다. 게다가 전기·통신 공급을 위한 굴착공사의 경우, 주관로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는 예외 조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도로굴착 허가에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규제개선 과정 —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 필요성 공감

2024년 5월, 중앙규제책임관이 현장 방문하여 애로 사항을 청취하였다. 6월에 제13차 위원회에서 논의하였고 8월 제15차 위원회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심층 검토를 통하게 되었다.

국토교통부 법령 개정 (2025.6.)

부처 의견

신설도로(차도 3년, 보도 2년)의 노면 굴착제한 예외에 "전기·통신 공급용 주배관시설" 포함토록 「도로법 시행령」 개정

→ 전기배전·통신시설이 주배관시설(가스관은 본관·공급관, 열수송관은 주배관·분배관, 전기는 송전선로 등) 규모로 판단 가능한 경우 적용

결과 및 기대효과 — 법 조항 개정으로 시민 편의성 제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전기·통신 공급을 위한 굴착공사의 경우에도 굴착공사가 가능토록 법 조항을 개정하여 굴착제한 예외에 '전기·통신 공급용 주배관시설'을 추가하기로 하였다.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전기 공급, 현대사회에서 통신의 역할 등을 고려할 때 굴착제한 예외 사유 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단, 무분별한 굴착으로 인한 도로 손상 방지를 위해 전기배전 및 통신시설 또한 주배관시설 규모로 판단 가능한 경우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처럼 굴착제한 완화를 통하여 시민들이 적기에 전기·통신을 공급받지 못하는 불편 및 손해를 방지하고 편의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개선사례
지방규제혁신위원회

Brief Report

→ 현 황

건설공사 연간 단가계약도 전기·통신공사처럼 총 계약 금액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필요

→ 개 선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반영되어 중소·지역건설사의 재해 예방 및 안전 확보에 사용 가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적용 범위 확대

규제개선 배경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범위 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 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되게 건설공사 발주자가 공사 금액에 계상하여 시공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이다.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안전시설비, 보호구,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비 등에 사용 가능하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적용범위)에 따라 총 공사 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계상한다. 다만 연간 단가공사의 경우, 작업 건별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서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이 가능하지만 전기·정보통신공사에 한하여 총 계약 금액 기준으로 2천만 원 이상이면 공사원가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전기·정보통신공사가 아닌 일반 단가공사의 경우에는 총 계약 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이더라도 개별 작업이 2천만 원 미만이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더라도 정산받지 못하는 애로가 있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에 따라 사업주의 안전 관리에 대한 법적 의무와 처벌이 강화되고 안전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 증가하면서 영세 업체의 경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건설공사 연간 단가계약도 전기·통신공사처럼 총 계약 금액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규제개선 과정 고용노동부의 고시 개정 시행

2024년 6월, 지역건설사 규제혁신 현장 토론회 논의를 거쳐 7월에 제14차 위원회에서 고용노동부 개선 방안에 대해 원안 접수가 되었다. 고용노동부는 모든 연간 단가공사에 대해서도 총 공사 금액 기준을 적용하도록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을 개정하였다.

결과 및 기대효과 건설공사 단가계약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활용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추정치에 따르면 2023년 계약 실적 기준 시 214억 원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반영되어 중소·지역건설사의 재해 예방 및 안전 확보에 사용이 가능해졌다. 특히 건설공사 단가계약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활용으로 상수도 긴급 누수 복구 공사나 도로 포장·유지보수 공사 등 5인 미만 건설 현장 재해자 수 5% 감소 시 총 2,030억 원의 경제적 손실액이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건설공사 단가계약 적용 확대로 재해 예방 시 절감되는 경제적 손실액 추정

건설업 재해자 수 (a)	5인 미만 현장 재해자 수 (b)	건설업 산재보상비 (c)	재해자 1인당 산재보상비 (d)=(c/a)	5인 미만 현장 재해자 수 5% 감소 (e)=b×0.05	산재보상비 감소액 (직접비) (f)=(d)×(e)	경제적 손실액 (g)=5×(f)
27,432명	10,541명	21,149억 원	0.77억 원	527명	406억 원	2,030억 원

주 : 하인리히의 경제적 손실액은 직접비(산재보상비)와 간접비(공사 중지로 인한 손해 등)로 구성되며 1:4의 비율로 발생



개선사례
지방규제혁신위원회

건설업 외국인력(E7) 활용 규제개선

Brief Report

→ 현 황

인구 감소에 따른 생산연령인구의 감소, 건설업 입직 정체 현상의 지속 등으로 인력난을 겪는 중소·영세 전문건설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외국인 전문인력 도입

→ 개 선

특정활동 사증(E-7)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하여 건설업 인력난 해소 기대

규제개선 배경 — 건설 인력난의 심화 문제

최근 건설업은 내국인 근로자의 고령화, 고강도·고위험 작업 기피, 청년층 유입 부진 등으로 인력난이 심해지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건설업 외국인 근로자 적정규모 산정 연구」(2022)에 따르면 내국인 인력 부족분은 2022년 165,700명에서 2024년 173,500명으로 증가하였다. 인력난을 겪는 중소·영세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내국인 인력을 구하려고 노력해도 쉽게 구할 수 없고 어렵사리 인력을 구한다 하더라도 원청사나 더 큰 기업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빈번하였다. 그래서 외국인 전문인력을 도입하려 해도 비자 발급 조건이 까다롭고 오래 걸려서 어려움을 겪어야만 하였다. 특히 숙련기능인력은 전환 요건에 관한 규제가 현장과 맞지 않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핵심은 비전문취업(E-9) 비자에서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의 신속·대규모 전환을 통해 숙련자 유입 및 건설업 인력난 해소였다.

규제개선 과정 — 법무부의 수용 의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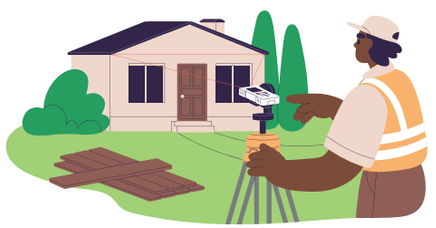
2024년 6월 지역건설사 규제혁신 현장 토론회 논의를 거쳐 7월 제14차 위원회에서 법무부 개선 방안에 대해 수용 의결을 하였다. 법무부 측은 숙련기능인력제도가 건설업에 일부 불리한 요건이 있다는 것에 공감하고, 전환 요건을 재검토하여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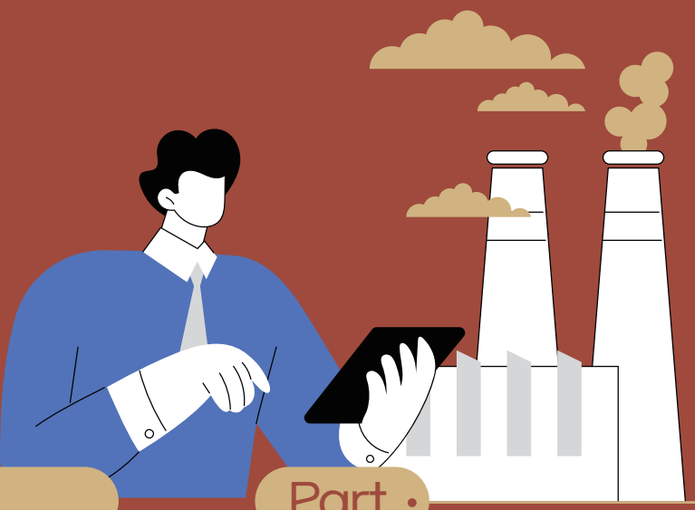
개선 방안

전문인력 (E-7-1)	☑ 전문인력 비자 발급 신속 추진(발급 소요 기간 단축 및 제출 서류 간소화)
숙련기능인력 (E-7-4)	☑ 전환·대상 인원 산정 시, 상용·일용직 모두 전환 대상으로 산정 ※ 일용직 고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대체 서류(건설일용직 근로내용확인서 등) 활용 ☑ 숙련기능인력 '근무처' 해석 요건을 '현장단위'에서 '사업자' 기준으로 개선 ☑ 고용기업(사업장)의 외국인 허용 가능 인원의 한도 상향 조정 ☑ 숙련기능인력 전환 한국어 능력시험(TOPIK) 요건 완화(2→1급)

결과 및 기대효과 — 규제개선을 통하여 건설업 인력난 해소 기대

특정활동 사증(E-7)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하여 건설업 노동력 수급 불균형 심화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건설업 종사 숙련자는 입국 후 적응 기간 단축과 재해 감소에도 긍정적으로 판단되므로 안정적 노동 공급과 관리, 생산성 제고 측면에서 확대 필요성이 강조된다.





Part • V

지역환경 개선 우수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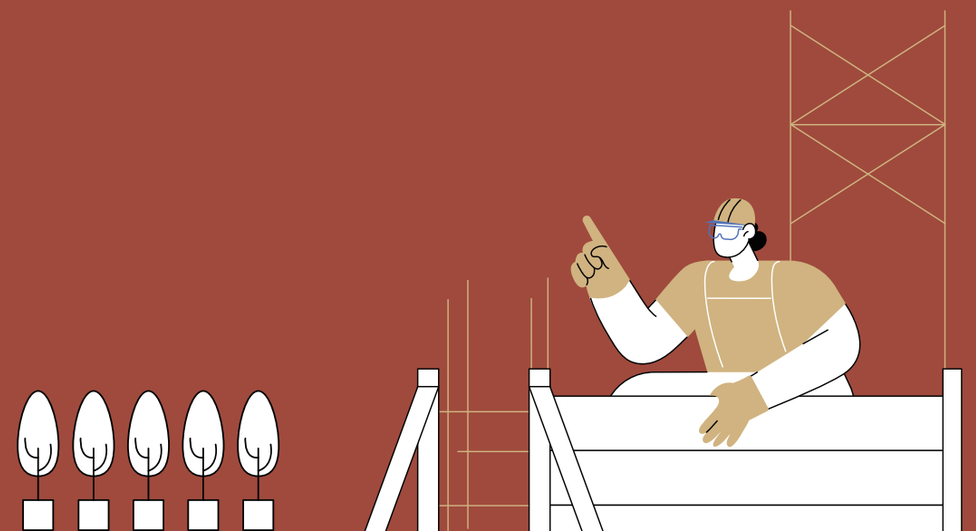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의 슬럼화를 해소하고
환경친화적인 정비와 개발을 통해
더욱 쾌적한 도시 미관과 살기 좋은 지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속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해 나갑니다.

경진대회 우수사례

우 수 상 ___ 세종특별자치시
장 려 상 ___ 대전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기도, 경상북도 의성군, 서울특별시, 전라북도 김제시



경진대회 우수사례
우 수 상

전국 최초!
빈집 규제 협업으로 불합리한 규제개선

Brief Report

→ 현 황

저출산으로 가파른 인구 감소와 수도권 인구 집중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 심화 등 농촌 소멸 극대화 및 빈집 증가 추세

→ 개 선

농촌 빈집 정비 철거 보상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해체 비용 감면 추진 및 조례 개정으로 재산세 감면 혜택 등 규제개선 노력

규제개선 배경 세금 증가 및 과다한 철거 비용 발생으로 빈집 방치 확산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로 방치되는 빈집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세종특별자치시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집 철거 시, 동당 최대 300만 원 범위의 철거 보상금을 지원하였지만 빈집 소유자의 정비사업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었다. 그 이유는 빈집 소유자가 정비사업에 참여할 경우 철거 보상금을 받는다고 해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 세금의 2배 이상 증가와 과다한 철거 비용 발생으로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이었다. 특히 소규모 농촌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에도 「건축물관리법」상 전문가(건축사 등)의 해체계획서 검토에 수반되는 약 300만 원 정도의 검토 비용이 철거 비용 부담을 가중하며 빈집 방치 확산의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전국 빈집의 수 증가(지자체 행정 조사)



규제개선 과정 빈집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

세종특별자치시 4개(세정과, 주택과, 건축과, 지역균형발전과) 부서가 협업하여 2023년 10월에 전국 최초로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제10조의2 신설로 세제 혜택을 추진하였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건축사회 협약을 통해 빈집 해체계획서 검토 비용을 감경 지원하였다. 농촌 빈집 정비 정책 제도개선을 위해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및 규제혁신추진 간담회 등을 통해 행안부, 국토부, 농림부 등에 법령 개정을 요청하여 2024년 1월 1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냈다.

규제개선의 전후 비교

개선 전		개선 후
「지방세법 시행령」 제118조제1호라목	법 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118조제1호라목 제2호 신설(2024.1.1.)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빈집의 정비에 관한 사업만 해당한다)의 경우
빈집 철거 시 재산세 2~12배 증가	재산세	조례 개정으로 50~100% 재산세 경감(주택 멸실 후 재산세 3년 동안 50% 감면, 공용 또는 공공용 활용 동의 경우 5년 동안 재산세 면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철거의 경우 세 부담 상한 미적용	세 부담 상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철거의 경우 세 부담 상한 적용 대상 추가(적용 기간 3년 → 5년, 상한 30% → 5%)
300만 원	건축물 해체 비용	50 ~ 100만 원

결과 및 기대효과

빈집 소유자의 정비사업 참여 증대 효과

세종특별자치시는 전국 최초로 조례 개정을 통해 선도적으로 재산세 감면·면제를 시행하고 해체 비용의 감면을 추진함으로써, 빈집 철거 시 빈집 소유자의 세금 및 철거 비용의 부담을 경감하였다. 그 결과, 빈집 소유자가 정비사업에 참여하여 자발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 세종미래마을 조성사업에서도 빈집 철거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빈집 철거 후 기반시설을 조성하였다. 이러한 세종특별자치시의 농촌 빈집 정비 규제개선은 지자체 선진 모범사례로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농·어촌지역 세 부담 현황(토지 1억 2천만 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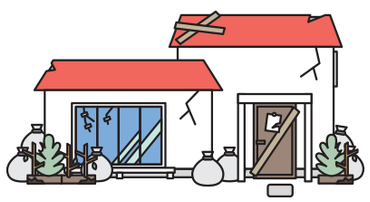
(단위: 원, 공시지가 연 5% 상승 적용)

구분	'24년(토지)	'25년(토지)	'26년(토지)	'27년(토지)	'28년(토지)
개정 전	176,400	227,830	241,722	260,513	286,038
시행령 개정	90,000	94,500	99,225	104,186	109,396
시세 감면(철거)	45,000	47,250	49,612	104,186	109,396
시세 감면 (공용·공공용 활용 동의)	0	0	0	0	0

정비 전 ➡ 정비 후







경진대회 우수사례
장 려 상

빈집 방치를 초래하는 불합리한 재산세 제도 개혁

Brief Report

→ 현 황

빈집 철거 시 재산세가 주택분에서 높은 세율과 누진이 심한 토지분(종합합산)으로 과세되는 불합리한 재산세 과세제도로 소유주의 민원 발생 또는 빈집을 방치하는 문제 증가

→ 개 선

행정안전부, 대전광역시, 서구가 함께 협의한 끝에 법령 개정안을 통해 빈집 철거를 독려하는 재산세 특례제도를 마련하였음

규제개선 배경

기하급수적인 빈집 증가가 사회 문제로 대두

급격한 인구 감소로 방치된 빈집 증가 문제는 대전광역시 서구도 예외는 아니었다. 특히 빈집의 붕괴 위험, 인근 지역의 슬럼화 등 안전상 문제와 더불어 쓰레기 투기 및 적재 등 도시 미관 저해로 각종 민원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현실적인 지원 혜택이 없고 오히려 주택분으로 부과되던 재산세가 토지분(나대지)으로 부과되어 3~4배 이상 급격하게 상승하기 때문에 빈집 소유주의 적극적인 빈집 철거를 유도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게다가 중앙부처 내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 부서 및 소통 창구의 부재로 전국적으로 빈집 파악·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 빈집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였다.

규제개선 과정

빈집 문제의 심각성 인식, 해결 방안 모색

대전광역시 서구는 2023년 6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재산세 세율 및 감면 개선 방안 검토 보고 후 대전광역시 세정과 등 관련 부서와 재산세 제도개선 관련 내부 협의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대전광역시, 서구의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재산세 제도개선 협의 및 간담회 개최,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건의 등을 거쳐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를 하였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재산세 중과세 및 빈집세 신설 방안 등 장기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결과 및 기대효과

법령 개정으로 마련한 재산세 특례제도

대전광역시 서구는 행정안전부에 요청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시행으로 빈집을 철거하면 재산세 특례를 받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이는 빈집 소유주가 빈집 정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대전광역시 서구는 앞으로 빈집을 철거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 제도를 신설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2024. 1. 1. 개정 법령 시행

개선 내용

- ☑ 빈집 철거 시 별도 합산 적용 기간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
- ☑ 빈집 철거 시 재산세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는 토지세 부담 상한 특례를 5년간 적용

➡ **효 과**

연간 재산세 부담 증가율이 5%로 인하

2024. 5. 28. 개정 법령 시행

개선 내용

- ☑ 빈집 철거 후 국가, 지자체와 협약하여 1년 이상 주차장·쉼터 등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토지세액 산정 특례 적용 범위 확대

언론 보도 사례

연합뉴스

대전 서구, 빈집 문제 개선 정부에 요구 …특례제도 마련

김준범 기자 송고시간 | 2023-11-28 11:18



대전 서구청[대전 서구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대전 서구는 인구 감소로 인한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을 행정안전부에 요구해 재산세 특례제도를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구는 지난 6월부터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재산세 특례 혜택을 주지만 철거하지 않으면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등의 방안을 행안부에 요청했다.

그 결과 행안부는 빈집 철거 시 별도 합산과세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빈집 정비사업으로 인한 토지 세 부담 상한 특례를 5년간 주는 재산세 특례제도를 마련했다.

구는 이 특례제도가 현재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안부와 대전시, 서구 관계자들은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주민들의 애로사항도 듣는다.

이번 달 대전 지역 전체 빈집 3천867호 가운데 서구에는 442호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은 "빈집을 철거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주는 제도가 신설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sykim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3/11/28 11:18 송고

대전투데이

서구, 빈집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행정 펼쳐

김태선 입력 2023.11.28 15:38 댓글 0



김태선 입력 2023.11.28 15:38 댓글 0

서구(구청장 서철모)는 인구감소로 인해 날로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빈집 문제해결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하여 빈집 관련 재산세 특례제도 신설을 이끌어내 현재 법령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라 28일 밝혔다.

현재 대전시 전체 빈집 수는 3,867호이며, 비교적 타구에서 비해 도심지역이 많은 서구에서도 442호(2023년 기준)로 빈집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서구에서는 지난 6월부터 그 해결 방안으로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는 재산세 특례 혜택을, 빈집을 철거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으로 재산세 중과와 빈집세 신설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하였다.

그 후 행정안전부와 대전시·서구가 여러 차례 협의 끝에, 빈집 철거 시 별도합산과세 기간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빈집 정비사업으로 인한 토지 세부담상한 특례를 5년간 주는 법령 개정안이 마련되었다.

아울러, 제시된 재산세 중과나 빈집세 신설은 장기적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서구에서는 28일 구청에서 행정안전부 및 대전시 관련 관계자가 참여하는 '빈집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빈집 현장을 함께 둘러보며 주민들의 애로사항도 직접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 참여한 서철모 청장은 "서구에서 먼저 나서서 빈집 해결 방안을 마련한 것에 자랑스럽다"며, "앞으로 빈집을 철거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주는 제도가 신설되어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제도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대전투데이

적극행정 우수사례

전국 최초, 공유재산(행정재산) 용도폐지 운영 기준(대상, 절차) 자치법규 반영

Brief Report

→ 현 황

공유재산(행정재산) 용도폐지 지침 부재로 무분별한 용도폐지에 따른 유휴재산 발생 및 부서 간 업무 갈등 증가

→ 개 선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공유재산 용도폐지 운영 기준(대상,절차 등)의 자치법규화

규제개선 배경

공유재산 용도폐지 지침 제정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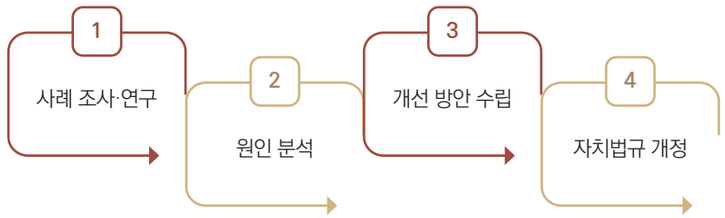
2021년 12월에 제정된 「국유재산 용도폐지 지침」에는 국유재산의 용도폐지 대상 및 절차 등 운영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국유재산과 달리 공유재산(행정재산)은 용도폐지 지침의 부재로 단순 행정 목적 미사용 사유로 용도폐지되는 미활용 유휴재산이 증가하고, 용도폐지 가능 여부와 용도폐지 후 재산 이관 관련하여 총괄재산관리관과 행정재산관리관 사이의 이견 발생으로 업무적 갈등이 심각하였다. 그리하여 공유재산 용도폐지 지침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규제개선 과정

용도폐지 지침 제정을 건의

경기도는 국유재산의 행정재산 용도폐지 지침 전반을 심층 연구 분석하고, 도유 일반재산 전수조사를 통해 용도폐지 일반재산 중 미대부 재산 현황과 주요 원인을 분석하였다. 경기도 내 모든 시·군 공유재산 용도폐지 지침 제정 필요성을 설문 조사한 결과, 100%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에 공유재산(행정재산) 용도폐지 지침 제정을 건의하였다. 그리하여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내 행정재산 용도폐지 대상 및 절차를 반영하여 개정 후 2023년 11월에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하였다.

규제개선 과정



경기도 일반재산 현황(2023년 4월 말)

구 분	대부(56.8%)	미대부 재산(43.2%)			
		소계	도시계획시설 지정	법령상 행위 제한	기타
832필지	472필지	360필지	112필지	108필지	140필지
979,924㎡	741,711㎡	238,213㎡	62,601㎡	88,242㎡	87,369㎡

※ 대부, 매각 등 관리·처분 자체가 불가한 필지(220필지)가 미대부 재산의 61% 수준

결과 및 기대효과

자치법규(조례 시행규칙) 개정

경기도는 용도폐지 신청 관련 서식만 규정되었던 기존의 자치법규를 개선하여 용도폐지 대상과 사전 행정 절차 등에 대한 근거와 기준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수립하였다. 자치법규 개정 전 국유재산 용도폐지 지침을 중·장기간 심층 연구하고 검토 반영하여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간 일관된 행정 기조를 유지하였고 국민들에게 법령 해석의 혼선 발생을 사전 예방하였다.
특히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용도폐지 운영 기준 제정 전까지 자치법규를 운용하여 일관된 용도폐지 업무 처리를 유지하였다. 그리하여 부서 간 업무 해석에 대한 이견과 갈등의 발생을 해소하고 제도상 행정 공백을 예방하여 유휴재산 발생을 원천 차단하였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공유재산 관리가 가능하게 하였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지속적인 개선 방안 모색과 논의를 통해 이루어낸 건축물 해체 절차 완화

Brief Report

→ 현 황

소규모 건축물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해체계획서 날인 의무로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에 걸림돌로 작용

→ 개 선

해체계획서 절차 완화로 빈집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안전 문제 해소와 도시 미관 개선 효과

규제개선 배경

빈집 정비사업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 신설

전국에 빈집은 약 13만 채이며 그중 농·어촌지역에 약 8만 9천 채가 있다. 이처럼 오랜 기간 방치된 빈집은 열악한 환경으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며 인근이 우범지역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의성군은 최근 10년간 841개소에 약 7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빈집 정비사업을 해오고 있으나 2022년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건축사 또는 기술사의 해체계획서 날인 의무 규제가 신설되면서 사업에 차질을 빚었다. 농·어촌지역의 건축물은 대부분 1층짜리 소규모 건축물인데도 해체계획서에 날인을 받아야 하여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또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수가 적은 농·어촌지역에서는 타 지역보다 해체계획서 검토 및 날인 비용이 높게 형성되어 보조금 대부분이 해체계획서 검토 및 날인 비용으로 들어가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지역별 해체계획서 검토 및 날인 비용



규제개선 과정

지속적인 건의 및 각종 위원회 안건 상정

의성군에서 10년간 소규모 건축물 빈집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데 소규모 건축물에도 예외 없는 해체계획서 전문가 검토 및 날인 의무는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가중하여 빈집 정비사업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의성군은 규제혁신추진단 논의, 시·군 합동 경상북도 규제혁신 TF 논의, 지방규제혁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현실 타당한 규제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시·군 합동 경상북도 규제혁신 TF 참석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참석

건의 내용의 변화

수용 곤란	중장기 검토	수 용
① 해체계획서 날인 절차 생략	① 해체계획서 날인 절차 유지 ② 해체계획서 날인 비용 기준 정립	① 해체계획서 날인 절차 유지 ② 해체계획서 날인 비용 기준 정립 ③ 지자체 직접 해체 시 공무원이 날인 절차 갈음 ④ 전문가가 작성할 분량 축소로 추가 비용 절감

결과 및 기대효과

소규모 건축물 해체 시 해체계획서 절차 완화

오랜 건의 및 논의 끝에 지방규제혁신위원회에서 수용 의결을 하였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지자체 의견 및 행정안전부의 의견을 수용하여 규제개선 방향 수립 및 법령 개정을 통하여 해체계획서 절차를 완화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향후 소규모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전문가 검토를 생략하고 해체계획서의 작성 분량이 축소되는 등 행정적 절차가 개선될 예정이다. 또한, 그간 규제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때문에 보조금 증가 사례가 많았으나 규제개선으로 추가 비용이 감소하여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더불어 빈집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도시 미관 개선, 우범지역 예방, 안전사고 예방 등의 효과 역시 예상된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국내 최초 공공하수의 적법한 재이용 개선으로 냉각탑 없는 주민 친화적 열병합발전소 건립

Brief Report

→ 현 황

하수도법상 2차 처리수(중간처리수) 재이용 불가 해석으로 서남열병합발전소 사업 경제성 감소 및 환경오염(백연)에 따른 민원 증가 우려

→ 개 선

하수처리시설 처리 공정을 거치지 않아도 2차 처리수 재이용을 환경부로부터 조건부 승인받음으로써 서남열병합발전소 사업 경제성 및 민원 문제 해소에 기여

규제개선 배경

하수도법에 가로막힌 서울특별시의 공공하수 재이용 문제

서울특별시는 서남열병합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며 증기터빈 냉각탑을 설치하는 대신 인근에 있는 서남물재생센터의 공공하수를 재이용하고자 하였다. 서남열병합발전소의 협소한 부지에 냉각탑을 설치하는 경우 공사비 및 운영비 증가, 추가 부지(약 6,000㎡) 확보, 백연 발생에 따른 민원 증가 문제가 우려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경부의 하수도법 해석에 따라 공공하수 재이용이 불가되면서 서울특별시의 냉각탑 없는 주민 친화적인 열병합발전소 건설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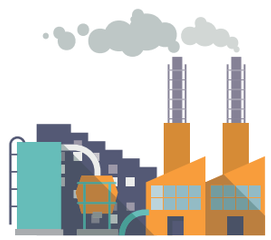
서남열병합발전소 조감도



발전소 냉각탑과 백연 발생



서남물재생센터 2차 처리수



규제개선 과정

유연한 법 해석으로 적극행정 실천

서울특별시는 2023년 3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남열병합발전소의 냉각수로 서남물재생센터 2차 처리수 사용에 관한 질의를 접수하였다. 하수도법에 따른 2차 처리수 재이용 가능 여부가 쟁점 사항이었다. 이에 서울특별시는 유연한 법 해석을 통한 적극행정으로 규제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

서울특별시의 단계별 쟁점 해결

2023.03.13. — **국민신문고로 질의 접수**
- ☑ 서남열병합발전소의 냉각수로 서남물재생센터 2차 처리수 사용 가능 유무

2023.03.29. — **환경부(생활하수과) 유권해석(1차)**
- ☑ 부적정 답변. 하수도법 제19조제2항제3호에 의한 배출 행위에 해당하므로 최종 방류구를 거친 방류수 이용 권장

2023.05.10. — **법률자문 의뢰 결과 협의 및 해석 요청**
- ☑ 해당 시설은 2차 처리수의 직접 사용이 아닌 배관 내에 밀폐된 상태로 순환하는 간접 열교환 방식으로 하수도법의 배출 행위에 미해당

2023.07.20. — **환경부(생활하수과) 해석 결과(2차)**
- ☑ 적정(조건부) 답변. 외부 유출 없는 폐쇄관로를 통해 재이용하는 경우에 한함

2023.09.07. — **한강유역환경청의 현장 확인**
- ☑ 2차 처리수 이용 협의 및 부지 경계 등 현장 확인

2023.11.17. — **2차 처리수 재이용 승인 요청**
- ☑ 서울특별시가 하수(2차 처리수) 재이용 관련 이행계획 수립(안)을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

2023.11.22. — **2차 처리수 재이용 협의 결과 회신**(한강유역환경청→서울특별시)
- ☑ 하수(2차 처리수) 재이용 승인(조건 이행부)

결과 및 기대효과

국내 최초로 공공하수를 이용한 열병합발전소 냉각 방식 적용

서울특별시는 하수도법에 따른 규제를 유연한 법 해석으로 개선하는 적극행정을 통해 공공하수를 이용한 열병합발전소 냉각 방식을 국내 최초로 적용하는 데 성공하였고, 공공하수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규제개선 전후 비교

개선 전	개선 후
하수도법에 따라 최종 방류구를 거친 방류수만을 재이용하면 사업 경제성 저하 및 민원 발생 증가 우려 등으로 사업 추진에 지장 발생	유연한 법 해석으로 하수처리시설 처리 공정을 거치지 않아도 재이용 공급이 가능해지면서 사업 경제성 확보 및 민원 발생(백연) 해소에 기여

특히 공공하수 재이용 시, 열병합발전소에 냉각탑을 설치하는 경우보다 예산을 대폭 절감하는 효과와 탄소 배출량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나아가 물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물 부족 문제에 선제적 대응까지 가능하다.

냉각탑 설치 대비 공공하수 재이용 효과

경제적 효과(30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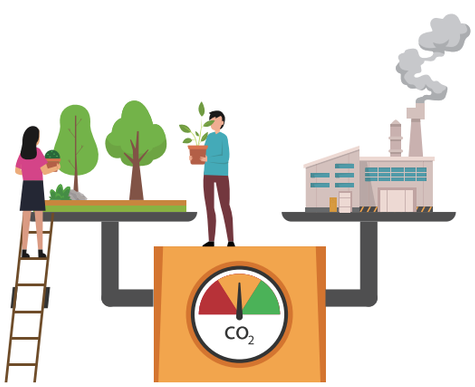
공사비 및 운영비 **616억 원** 절감

친환경 효과

CO_2

냉각탑 적용 대비 탄소 배출량 **약 1,800t CO^2/년** 저감

(배출계수 0.4747tCO^2/MWh)



적극행정 우수사례

건축물 관리자 확대 인정을 통한 빈집 정비사업 추진 가속화

Brief Report

→ 현 황

기존의 빈집 정비사업은 건축물 관리자의 인정 범위가 좁아 사업 진행에 애로 사항이 있었음

→ 개 선

건축물 관리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빈집 정비에 어려움이 있던 관리자들에게 기회 제공하고 빈집 정비사업 추진을 가속화

규제개선 배경 관리자를 증빙할 수 없어 철거 불가능한 건축물 문제

2020년 5월,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면서 모든 건축물은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건축물 해체 허가를 득하고 철거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철거가 필요한 건축물인데도 관리자, 즉 소유자를 증빙할 수 없어 철거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특히 건축물대장 및 등기가 없는 대다수 농촌 빈집의 경우는 절차상 필요한 건축물 관리자, 즉 소유자의 증빙 불가로 민원인의 불만이 증가하고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따라서 관리자가 빈집 정비사업 참여를 희망하고 정비가 필요한 건축물의 경우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개선책이 필요했다.



규제개선 과정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관리자의 범위 확대

김제시는 국토부에 건축물 해체 신고 관련하여 소유자 사망 시 관리자의 인정 범위를 질의하였다. 그 결과, 담당 허가권자의 판단 사항이라는 회신을 받았고, 2023년 3월 6일에 건축물 관리자 인정 관련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다음 날에는 각 읍면동 건축물관리자 인정 범위의 확대를 알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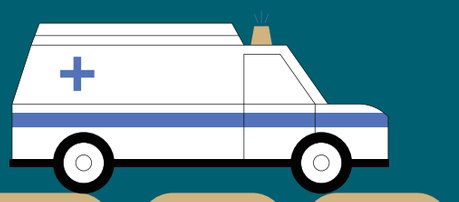
결과 및 기대효과 소유사실확인서를 받은 토지주를 건축물 관리자로 인정

김제시는 건축물 과세대장상 소유자와 건축물 과세대장이 없는 건축물의 경우, 마을 주민들에게 소유사실확인서를 받은 토지주를 「건축물관리법」상 건축물 관리자로 인정하여 해체 신고를 신청할 수 있게 관리자의 인정 범위를 확대 적용하였다.

관리자 인정 범위

기존 관리자 인정 범위	관리자 인정 범위 확대
건물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사망 시 상속권자)	**건물등기, 건축물대장, 건축물 과세대장 중 하나만 있는 경우** 각각의 소유자(명의자)를 관리자로 인정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사망 시 상속권자)	**토지소유자(위임자)가 관리자의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 ① 건물등기, 건축물대장, 재산세 과세 내역이 전부 없는 경우 ② 건축물에 대한 소유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건축물 과세대장상 소유자 ※ 토지 소유자는 인정 불가	

김제시의 2023년 상반기 해체 신고 처리 204건 중 건축물대장이 있어 건축물 관리자를 인정받은 사례는 불과 82건으로 40%였다. 그러나 김제시가 빈집 정비 신청제도를 개선하면서 관리자의 인정 범위를 넓힌 뒤로 노후 건축물 및 방치된 건물들을 철거할 수 있도록 허가한 사례가 122건에 달하였다. 이에 건축물의 실제 소유자이지만 서류상 건축물 관리자로 증빙할 수 없는 건들의 지원사업 추진이 가속화되었다. 김제시는 관리자의 인정 범위 확대를 통해 민원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주민 편의를 제공하는 동시에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였다. 더불어 그동안 소유자 및 관리자 파악이 불가하여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철거를 진행하며 도시 미관 및 농촌 주거환경을 크게 개선하였다.



Part.

VI

공공서비스 강화 우수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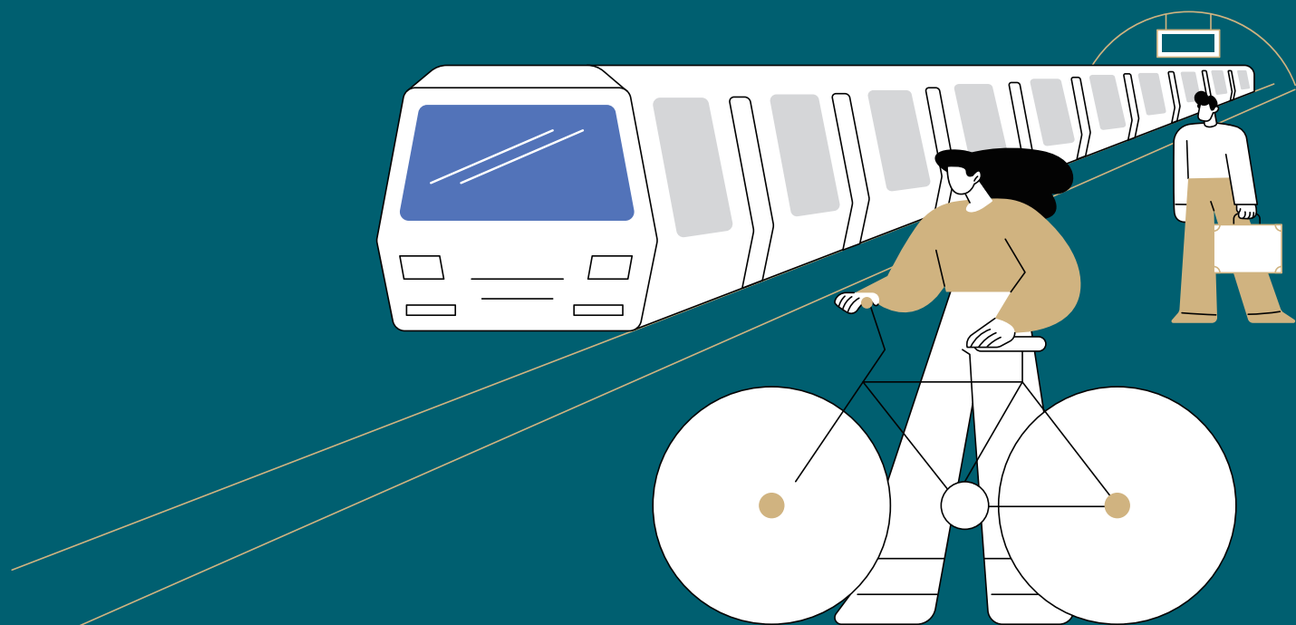




적극행정 우수사례

강원특별자치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북구, 충청북도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행정과 복지 사각지대를 유발하는 비효율적 제도를 개선하고
수요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복지 형평성을 제고합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전국 최초 저소득 유·청소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제도개선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Brief Report

→ 현 황

현행 스포츠강좌 지침상 강사의 방문 수업이 불가, 사회복지시설 거주·이용자의 이용 불편에 따라 신청 실적 저조

→ 개 선

복지시설 아동 등 이용자 편의에 맞춘 방문 강습 허용과 수요 맞춤형 강좌 개설, 저렴한 수강료 적용에 따라 이용자 수 확대 및 실수혜자 만족도 제고

규제개선 배경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의 부진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은 저소득층 유·청소년에게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으로 생활체육 참여 확대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문화체육부 국비사업이다.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

대 상	만 5~18세 유·청소년(출생연도 2006~2019년)
자 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가구,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등
지 원	매월 10만 원 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연중 지원
2024년 예산	48억 원(국 34, 도 7, 시·군 7) ※ 도내 대상자 : 20,113명(목표 4,059명)
신 청	스포츠이용권 홈페이지 개별 온라인 신청 및 시·군 서면 신청

그러나 관 주도의 일방적인 홍보로 대부분 복지시설에서 사업 자체를 몰라 신청 실적이 저조하고, 시설 아동의 경우 학원 차량 및 인솔자 부재, 낙인효과 우려 등으로 사실상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체육 가맹시설의 부족과 복지시설 방문 강습이 불가하여 실수요자인 복지시설의 고려 부족으로 현실적 이용이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따라서 저소득 유·청소년 대상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스포츠복지 대표 사업인데도 매년 20~30% 미집행액(최대 10억 원)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용자의 신청에 의존하는 기존 업무 처리 관행의 결과 연례적 불용이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예산액과 불용액

구분	합계 (2021~2023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예산액(백만 원)	7,247	1,464	2,289	3,494	4,870
불용액(비율)	1,812(25%)	252(17%)	565(25%)	995(28%)	추진 중

* ('24년 2월 기준) 목표(4,059명) 대비 신청(2,985명) → 17개 시도 중 꼴찌(신청률 74%), 광역시의 경우 목표 인원 초과 달성(대구·광주 101%, 울산·부산 98% 등)

규제개선 과정 스포츠강좌 수혜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의 노력

강원특별자치도는 2024년 3월, 기관·단체 협업 및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시설 간담회와 지역 내 공공스포츠클럽 회의를 개최하였다. 문화체육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는 복지시설 대상 강사의 방문 강습을 허용하는 제도개선을 건의하였고, 4월에서 6월 사이에는 시·군 담당과장, 시·군 부단체장, 시·군 실무자 회의를 릴레이 개최하였다. 5월에는 강원도의 끈질긴 설득으로 문화체육부 사업 지침 개정 및 전국 지자체 안내가 이루어졌다.

결과 및 기대효과 전국 최초 수요자 맞춤형 방문 강좌 개설·시행

복지시설에 한하여 강사의 방문 강습 허용으로 지침이 개정되는 동시에 강원특별자치도는 복지시설에 강좌 공간을 확보하고 스포츠클럽 강사를 파견하여 연령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대표적으로 춘천 애민보육원 축구 강습과 강릉 지역아동센터 드론축구 시범 실시가 있다.



축구 강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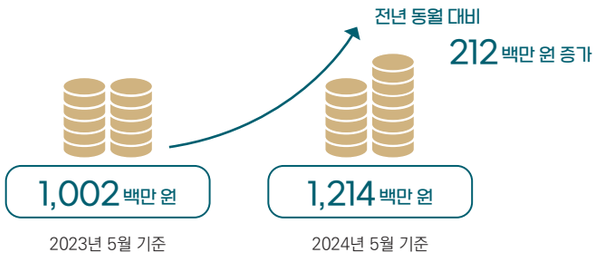
찾아가는 드론축구

문화체육부 사업 지침 개정 전후 비교

변경 전		변경 후
이용자가 스포츠학원 개별 직접 방문	강좌 운영	스포츠 강사가 복지시설 직접 방문 강습
학원 개설 종목 이외 선택 불가	종목 선택	희망 종목 선택, 연령별 맞춤 프로그램 개설, 1박 2일 단기강좌 진행 가능
지원금 외 추가 자부담 부담	수강료	10만 원 내 수강료 책정(무상보육 효과)

강원특별자치도가 적극행정으로 이끌어낸 스포츠강좌 이용권 제도개선은 평소 스포츠강좌 수강이 곤란한 시설 아동들에게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학부모 사교육비를 경감하여 교육비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였다. 실제로 강원특별자치도는 방문 강습 수혜자 확대에 따라 예산 집행률 제고 및 연말 불용 최소화를 예상하였다.

2023년과 2024년 집행액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국 최초로 복지시설 방문 강습 등 사업을 추진하며 스포츠복지의 전국 확산 계기를 마련하였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과를 기반으로 향후 전국의 복지시설 아동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불형 동백패스 도입으로 교통 분야의 복지 시책에 대한 형평성 제고

Brief Report

→ 현 황

2023년 8월부터 대중교통 통합 할인제 동백패스를 시행하였으나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되는 저신용자와 외국인은 혜택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교통복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

→ 개 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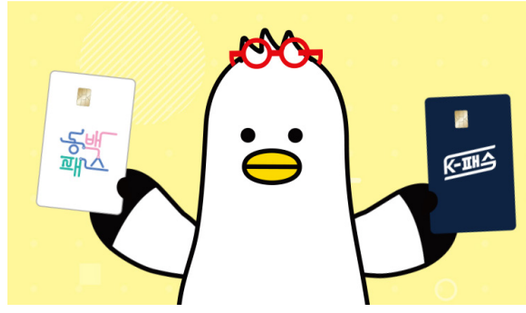
선불형 교통카드 방식을 도입한 동백패스로 저신용자와 외국인까지 교통복지 혜택 확대

규제개선 배경

동백패스를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하는 저신용자와 외국인 문제

동백패스는 2023년 8월부터 시행된 전국 최초 대중교통 통합 할인제로 2024년 3월 기준 가입자가 40만 명에 달할 만큼 인기 있는 교통 분야의 복지 시책이다. 그러나 교통카드 이용대금을 은행별 카드 결제일에 후불 결제하는 신용카드 방식의 후불 교통카드로 운영되는 까닭에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되는 저신용자나 외국인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는 채무 불이행자 등 신용 등급이 낮은 시민과 외국인 등 교통복지 소외 대상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동백패스 개선 방안의 모색에 나섰다.

대중교통 통합 할인제 동백패스(후불 교통카드)



후불형 동백패스

도입 방식	지역화폐 동백전 후불 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45,000원/월 이상 이용하면 초과 이용금액 동백전 포인트로 환급(정책지원금)
도입 범위	부산 등록 시내·마을버스, 도시철도, 동해선, 경전철 이용자
기준 금액	45,000원/월(최대 환급액 45,000원/월)

규제개선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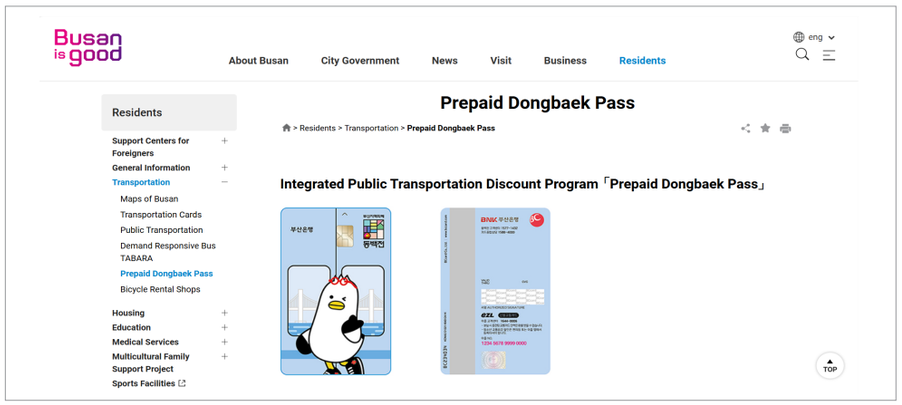
후불형 교통카드에 이어 선불형 교통카드 도입

후불형 교통카드인 동백패스 시행 후 저신용자·외국인 등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부산광역시는 2024년 2월에 선불형 동백패스 시행 및 홍보계획을 수립하였다. 3월에 외국인 이용자를 위한 선불형 동백패스 안내 및 FAQ 영문 메뉴를 구축한 다음 선불형 교통카드 동백패스를 출시하였다.

선불형 동백패스

발급 대상	만 18세 시민이면 누구나
발급 장소	동백전 앱 또는 부산은행 전 지점에 방문하여 발급 가능
충전 장소	도시철도역, 편의점, 앱(이즐충전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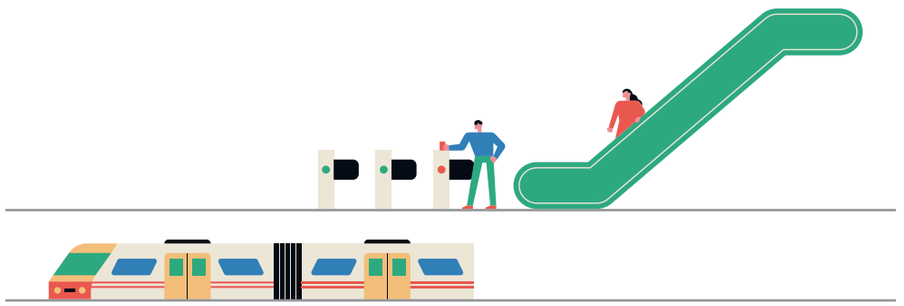
외국 이용자를 위한 선불형 동백패스 영문 메뉴



결과 및 기대효과

문턱을 낮추고 더 많은 이용자에게 복지 혜택 제공

은행 계좌를 개설할 필요 없이 카드 발급만으로 이용 가능한 선불형 동백패스 도입으로 기존 동백전 후불형 교통카드 발급이 어려웠던 저신용자·외국인도 혜택을 누릴 수 있게 개선되었다. 부산광역시는 2024년 하반기에 선불형 동백패스 발급 대상을 청소년까지 확대하고 앞으로도 교통 분야의 복지 시책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가며 형평성을 제고할 것이라 밝혔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전국 최초, GIS 기반 CCTV 영상 정보 스마트검색 서비스 운영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Brief Report

→ 현 황

전체 CCTV 통합검색으로 검색 효율 및 속도 저하, 특정 지역 선택 등의 지정검색 불가 등으로 시스템 이용 효율 낮음

→ 개 선

지리정보시스템과 스마트선별관제 시스템의 장점 융합, 지정검색(지역, 시간) 설정, 조건 설정된 영상검색을 신속·가능하게 하는 통합플랫폼 고도화 개발

규제개선 배경 기존 CCTV 선별관제 방식의 단점과 한계

5대 강력 범죄는 물론이고 교통사고, 안전 대응, 실종자 찾기, 재난 대응 등 주민 생활 전반에 CCTV 자료가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전체 CCTV를 대상으로 통합검색하는 기존 선별관제 방식은 특정 지역을 지정검색을 할 수 없어서 검색 시간이 오래 걸리고 검색 결과의 양이 방대한 까닭에 대상자를 골든타임 내 찾을 수 없다는 단점으로 시스템 이용 효율이 낮았다. 특히 해당 영상 정보를 확보할 때까지 시간이 소요되어 신속한 범죄 및 재난 상황 대응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관제센터 근무자의 피로도 상승뿐만 아니라 주민 안전과 관련한 지자체 및 경찰, 소방 인력의 대응력 저하로 이어졌다.



규제개선 과정 서비스와 플랫폼 기능의 융합을 통해 해법 모색

2011년 행정안전부 지자체 통합관제센터 설치 추진 사업에 이어 2012년 울산광역시 북구 CCTV 통합관제센터를 개소하였다. 2021년에는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을 구축하였고 2024년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 중인 스마트선별관제(CS 버전) 서비스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Web 버전) 기능을 융합하여 만든 통합플랫폼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 CCTV 영상 정보 스마트검색 서비스의 시범 운용을 하였다.

스마트선별관제 서비스

- **특징** CCTV 영상을 딥러닝으로 분석하여 사람 또는 차량을 판별하고 신속한 영상검색을 지원
- **단점** 전체 CCTV를 대상으로 통합검색하여 검색 효율이 저하되고 특정 지역 선택을 위한 지정검색은 불가능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 **특징** 지리정보시스템 기반의 서비스로 사건이 발생하면 관계 기관에 영상정보를 전송하여 실시간 상황을 전파해줄 수 있음
- **단점** 영상검색 기능이 없어 스마트선별관제 서비스와 이원화하여 실종자 탐색을 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음

스마트선별관제 서비스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서비스의 장점을 융합

↓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의 영상 정보 검색 기능 구현을 고민하여
통합플랫폼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
CCTV 영상 정보 스마트검색 서비스로 기능 고도화

결과 및 기대효과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 및 주민 만족도 향상

통합플랫폼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 CCTV 영상 정보 스마트검색 서비스는 전국 최초로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하여 일정 조건을 입력하면 사람이나 차량 정보 등 CCTV 영상정보를 자동으로 찾아 통합플랫폼 GIS 모니터링 화면에 띄워주는 지능형 검색 서비스이다. 실시간 CCTV 영상을 딥러닝 방식으로 학습한 내용 중 필요한 영상을 통합플랫폼 GIS에서 검색 영역 지정 후 신속한 검색이 가능하다. 그 결과 긴급 상황에 즉각 대응과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해지면서 관제 운영 효율이 향상되었다. 2024년 2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범 운영한 울산광역시에서 지적장애 실종 아동을 발견하여 단 9분 만에 가족에게 인계하는 데 성공한 사례가 있었다. 이는 기존 선별관제 시스템이었다면 3시간 이상 걸릴 일을 9분 만에 해결해낸 사례로 평가받는다.

울산광역시 북구는 앞으로 통합플랫폼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 CCTV 영상 정보 스마트검색 서비스를 통해 신속한 재난 상황 전파·긴급 대응, 범죄 예측 분석 지도를 활용한 골든타임 확보, 관련 정보 공유·안내 등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중요하게 활용할 계획이다.

통합플랫폼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 CCTV 영상 정보 스마트검색 서비스 활용 분야

스마트도시 안전망	울산광역시, 경찰, 소방, 군, 법무부 등 유관 기관과 상황 및 영상 정보를 연계
스마트 선별관제	사회적 약자 집중 케어
도심지 폭우·침수 대응	하천 및 지하차도 침수 등 재난 상황의 선제적 대응, 주민 문자 전송, 하천구역 출입 자동 차단
모바일 공공기관 상황 공유	재난 관련 공공기관 상황 대응 업무 협력체계 구축
범죄 예측 분석 지도	빅데이터를 통한 각종 범죄 및 사건·사고 등 사전 예측 집중 관제



통합플랫폼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 CCTV 영상 정보 스마트검색 서비스

1 신속한 영상검색

긴급 상황 발생 시
영상검색을 통해 관제 효율 증가



관제센터 운영 효율 향상

긴급 상황 즉각 대응

2 선택형 조건검색

실종 발생 시 인상착의 검색으로
추적하여 안전한 환경 조성



생활 안전 지수 향상

거주민 만족도 향상

3 솔루션 통합 환경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여
효율적 서비스 및 시설물 관리 지원



서비스 확장 환경 구현

공공데이터 활용 향상

4 재난 상황 신속 전파

신속한 재난 상황 인지로
긴급 대응 통한 골든타임 확보



재난 사고 긴급 대응 실현

출동 인력 영상 공유 구현

특정 지역 검색 가능	카테고리에 특정 인물의 성별과 연령, 옷 색상 등을 선택하고 지도에 마우스로 범위를 그려 검색하면 해당 인물이 찍힌 CCTV 영상이 표출됨
선택형 조건 검색 가능	장소·시간·인상착의·이동 수단 등 조건을 지정하면 설정 기간 내 CCTV에 수집된 사람이나 차량 정보를 자동으로 검색 가능
자동 검색 가능	CCTV를 하나하나 검색해야 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자동으로 대상을 찾아주기 때문에 실효성이 높음

적극행정 우수사례

전국 최초 스마트 응급의료 시스템 구축 및 환자 분류체계 일원화

Brief Report

→ 현 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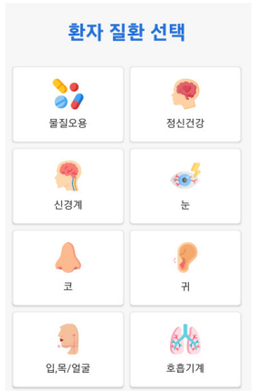
아날로그 이송 시스템과 중증도 분류체계 상이로 응급환자 이송 시간 지연

→ 개 선

전국 최초로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응급의료 시스템 개발·구축과 응급환자 분류체계 일원화를 통해 응급환자 이송 및 적기 치료에 필요한 골든타임 확보

규제개선 배경 골든타임을 놓치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의 심각성

기존의 응급환자 이송은 119구급대원이 환자 중증도 분류체계를 종이로 작성하고 이송 가능 병원을 일일이 유선 통화로 확인해야 하는 등 아날로그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다 보니 119구급대원의 구조 현장과 병원의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KTAS) 기준이 맞지 않아 응급환자에게 적합한 이송 병원 선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119구급대원의 간단한 응급처치 이외에는 치료가 어려운 동안 응급환자가 적정 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쳐 전원이 어렵거나 사망하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며 응급환자 이송 방식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Pre-KTAS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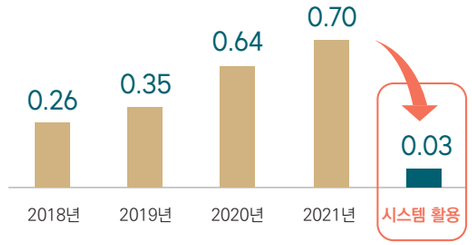
규제개선 과정 응급환자 이송 방식,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

충청북도는 응급환자 이송 방식을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에서 ICT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세웠다. 먼저 소방청의 구조·구급체계와 복지부의 응급의료체계를 연계하는 실시간 시스템 구축을 위해 관계 기관의 상호 협의·조정을 거쳐 2023년 6월부터 18개 특별구급대 시범 운영부터 시작하였다. 9월에 충청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10월부터 72개 전 구급대의 정식 운영을 하였다. 2024년 2월에는 대한응급의학회의 Pre-KTAS 사용 승인을 받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체계 일원화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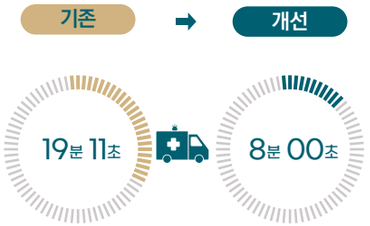
결과 및 기대효과 원스톱 응급의료 시스템으로 스마트 의료의 성공모델 구축

충청북도는 전국 최초로 ICT 기술을 활용하여 구조-구급 현장-119상황실-병원을 실시간 연계하는 스마트 응급의료 시스템을 개발·구축함으로써 소방과 병원이 환자 상태를 실시간 공유하여 영상을 통한 응급의료 지도와 병원 도착 전 치료 준비 및 배후과 연계를 가능하게 하였다. 더불어 대한응급의학회의 승인을 받아 Pre-KTAS 체계를 적용하여 응급환자의 상태에 맞는 병원을 빠르게 선정하고 이송에 걸리는 시간을 대폭 단축하였다. 그 결과, 응급환자 이송 및 적기 치료에 필요한 골든타임을 확보하였고 응급환자의 재이송 및 사망률을 크게 개선하였다.

응급환자의 재이송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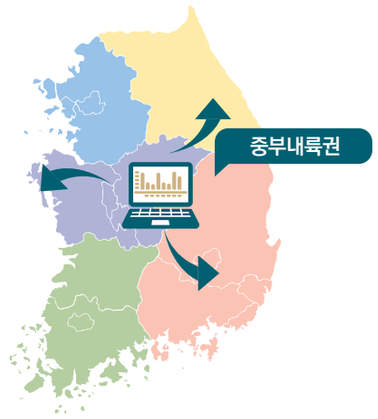


응급환자의 이송 시간 단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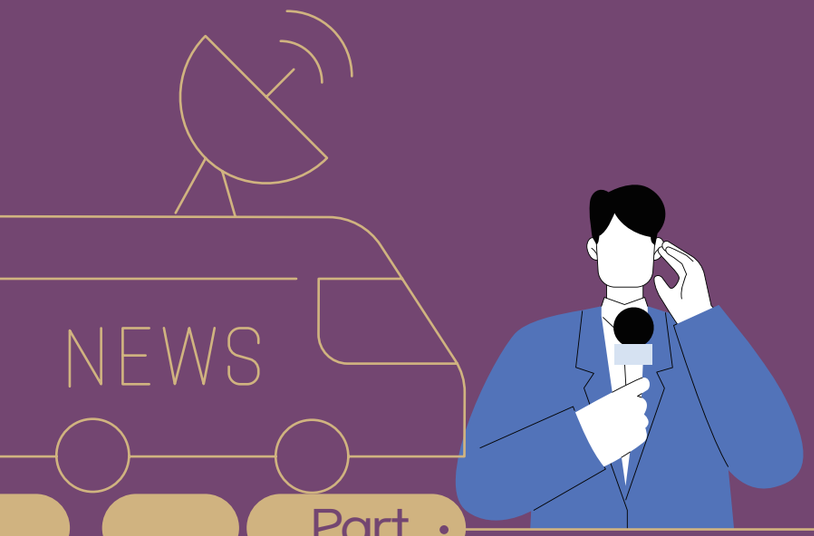
충청북도의 스마트 응급의료 시스템은 도내 병원과 요양병원은 물론이고 원주·대전 등 인접한 타 시도의 병원 참여 확대를 통하여 중부내륙권으로 지속 확산하고 있다. 충청북도는 향후 디지털 의료 데이터 분석을 통한 최적의 의료 서비스 제공 및 의료 정책 제안·적용을 위해 스마트 응급의료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중부내륙권 스마트 응급의료 서비스 확산



의료 데이터 활용, 충북 의료 정책 제안 및 적용





Part VII

보도자료로 만나는 규제혁신 성과

2024년에도 행정안전부는 지역발전의 염원에 부응하고자
관련 부처·지자체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규제혁신 과제를 집중 발굴·개선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국민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의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혁신의 생생한 기록을 만나봅니다.





NEWS
2024. 2. 8.(목)

국민 체감 증진,
기업활동 분야 등 2023년 총 163건 개선

지난해 163건 규제개선으로
기업활동 지원하고 국민 편의 높였다

2023년 지역 현장에서 발굴·개선한 중앙부처 규제는
국민 편의 분야(46건), 기업활동 지원(36건), 산업단지(12건) 등 총 163건이다.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규제 해소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관계 부처, 지자체와 함께 ▲지방규제혁신위원회 발족, ▲현장 협의회 개최, ▲행안부 주재 규제혁신회의 등을 수시로 진행했다.

2023년 처음으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자문기구로 신설된 지방규제혁신위원회는 규제 애로를 전담하는 자문기구로서 지자체가 오랫동안 건의해도 해결되지 않던 지역 현장의 각종 규제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수시로 지자체·소관 부처·행안부 합동 현장 방문과 현장 협의회를 개최하여 산업단지 입주 허용 등 규제를 신속히 해결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전국 시·도 기조실장이 참석한 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하여 규제 현장 점검·개선 방안 논의, 규제혁신 우수사례 등을 공유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에도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지자체 건의과제를 발굴하고 현장 간담회, 규제혁신위원회 등을 통해 현장 규제 애로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덩어리규제, 킬러규제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하여 적극 해결을 지원한다. 고기동 차관은 "지역 숙원과제와 국민 불편 개선과제를 집중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지역주민께서 규제개선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NEWS
2024. 2. 14.(수)

준조세 관련 지방규제 정비 및
지역건설사 맞춤형 규제 애로 해소

지자체와 함께 규제혁신으로
기업·국민 준조세 부담 낮추고, 어려운 지역건설사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기업과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 해소 대책으로 2024년도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은 지역기업과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준조세 재정비, 지역건설사 맞춤형 규제 애로 해소 등 지역이 체감하는 규제 발굴과 혁신에 중점을 두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중점 분야의 규제혁신을 위하여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한다. 현재 10인인 민간위원의 수를 최대 14명까지 확대하여 중점 분야의 전문성과 지역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고, 심의 안건의 수 확대(3건 이상) 및 분과별 심의를 활성화하여 규제혁신의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규제연구센터의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지원도 가동된다. 올해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심의 안건이 늘어나는 만큼 전문성 있는 지방규제연구센터가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상정 안건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규제로 인해 국민과 지역기업이 느끼는 비용을 분석하여 규제 해소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규제 해소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앙·지방규제책임관제도 새롭게 도입된다.

지방규제혁신의 지역 체감도 제고 목표

준조세 경감	부담금, 사용료, 과태료 등 지역기업과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준조세 관련 지방규제 일제 정비
지역건설사 애로 해소	경기 불황으로 폐업 중인 지역건설사의 규제 애로 해소
소극관행 타파	2023년 100개 기업 실태 조사 결과, 다수 불만이 많았던 규제 애로*에 대해 지자체 행태 조사 및 개선 * 규제 애로 혁신 필요 분야: 인허가 규제 (81%), 행정지도 및 단속규정(80%), 민원 처리 시 행정 해결 절차 (82%), 영업 관련 각종 규제(78%)
국민 애로 해결	기존 국민 대상의 민생규제 공모전을 기업 및 업종협회로 확대, 공모된 규제 관련 현장 방문단 구성·권역별 주력 업종 현장 간담회 추진

NEWS
2024. 2. 19.(월)

지역 이해당사자와 관계 부처가 참여한
「지방규제혁신위원회」 개최

농어촌민박 연면적 제한 완화 등
지역 현안의 핵심 규제개선

**행정안전부는 2월 16일(금) 14시 서울에서
2024년 첫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첫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현장에서 수차례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으나 해결되지 못한 지역경제에 핵심적인 규제 애로 사항에 대해 안건을 선정하는 한편, 지역 현안인 해당 규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지역 내 이해당사자도 참여하여 바람직한 규제개선 방향을 위한 열띤 논의를 펼쳤다. 이번 위원회 안건은 「농어촌민박 연면적 제한 완화」(수용), 「빈집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수용), 「석탄 경석의 산업 원료화 활용 방안 마련」(재논의)으로, 지자체에서 시급한 현안이라고 생각하는 규제들로 구성되었다.

민간 공동위원장인 박익수 위원은 "2023년 신설된 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으로 작년부터 활동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평소 규제개선에 관심이 있었던 만큼 올해도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많은 규제혁신이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정부 측 위원장인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2024년에는 규제개혁위원회를 확대 개편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피력하였다.

2024년 첫 지방규제혁신위원회(제9차) 심의 안건

수용	농어촌민박 연면적 제한 완화	농식품부는 규모 기준을 포함한 전반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향후 농어촌 관광 활성화 기대
수용	빈집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국토부는 빈집 정비사업 대상지 등에 대하여 해체계획서의 전문가 검토를 생략하는 등 해체계획서 절차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여, 농촌환경 개선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됨
재논의	석탄 경석의 산업 원료화 활용 방안 마련	향후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개선 방안을 적극 도출하되, 필요 시 규제개혁위원회에 해당 규제를 안건으로 상정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함

NEWS
2024. 5. 1.(수)

"국민의 아이디어가
불합리한 민생규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됩니다"

국민이 제안하고 함께 풀어갈
'민생규제 개선과제'를 찾습니다

**행정안전부는 5월 1일(수)부터 5월 31일(금)까지 「2024년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를 실시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일상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소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9회를 맞은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는 2016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소통 창구로서 그동안 국민의 요청이 규제개선에 지속 반영되었다.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공모를 통해 총 8천 176건의 국민 제안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297건의 아이디어를 채택하고 관련 법령 및 규정 개정, 정책 개선 등을 통해 민생규제를 개선한 바 있다.

올해 공모 분야는 ① 청년·경력 단절자·노인 등의 취업 및 일자리 창출에 불합리한 규제, ② 외국인 근로자의 정착·고용 등을 저해하는 규제, ③ 소방·보건·환경 부문에서 국민안전을 저해하는 규제 등 3개 분야로 일상 속 불합리한 규제가 대상이다. 국민 누구나 제한 없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과 소통24(sotong.go.kr)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민생규제 개선과제」 국민 아이디어 공모(5.1.~5.31.)

심사 기준	창의성(35%), 실현 가능성(35%), 효과성(30%) 등
심사 과정 및 선정 편수	실무 심사, 분야별 전문가 심사, 소관 부처 협의, 심사위원회 심의 (외부 전문가 포함 5인 이내) 등을 거쳐 최종 우수사례 20건을 선정
접수 기한 및 방법	5월 31일(금)까지 전자우편(sishera@korea.kr)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단, 우편은 공모 마감 당일 소인분에 한한다. *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11호)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발표	11월 중 최종 상위 우수사례가 발표되며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17명 총 20명에게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시상(부상품)	최우수1(100만 원 상당), 우수2(50만 원 상당), 장려17(10만 원 상당)

NEWS
2024. 5. 1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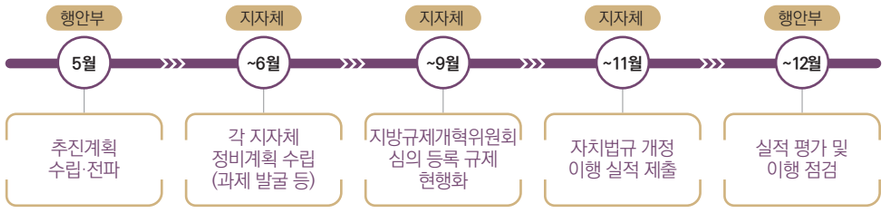
현실에 맞지 않거나 오래된 지방규제는
재검토 후 폐지

'낡고 오래된 지방규제' 일제히 정비한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5월 13일부터 12월까지 '2024 지방규제 일제정비' 기간을 운영하고 전국 지자체와 합동으로 조례나 규칙 속에 있는 규제 중 시행한 지 오래되어 사문화된 지방규제를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024 지방규제 일제정비' 기간 동안 지자체와 함께 지방규제 약 4만여 건에 대해 전수조사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는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개선과제 발굴 및 지방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하며, 행정안전부는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그에 따라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기업과 주민에게 걸림돌이 되는 낡고 오래된 규제를 혁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부담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하며, "지방규제 일제정비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임해주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지방규제 일제정비 추진 절차



일제정비의 주요 점검 내용

새로운 환경 변화에 부합하지 않아 지역투자를 가로막고 주민 생활에 불편을 미치는 규제를 집중 정비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내부 규정이나 지침 등으로 지역기업과 주민에게 불필요한 절차를 요구하거나 처분을 지연하는 그림자·행태규제 점검	규제가 아닌데 규제로 등록된 비규제, 지역 내 활용도가 없어 사문화된 규제, 복수 등록된 중복 규제 등 불필요한 등록 규제 정비	지자체 규제정보 시스템 내 오류 기재를 점검하고 기존 규제 내용에 변화가 없는지 확인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

NEWS
2024. 6. 14.(금)

석탄 경석을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
건축자재·신소재 등 산업적으로 활용

석탄 경석, 폐기물 규제 벗고 활용의 길 열렸다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강원특별자치도와 태백시는 6월 13일(목),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석탄 경석 규제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제12차 지방규제혁신위원회에서 환경부와 지자체가 석탄 경석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서 폐기물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합의·의결했다. 이번 규제개선으로 경제적 편익은 3천 383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원료 판매, 골재 등 부산물 판매로 1천 545억 원의 직접적 편익과 개발 행위 재개 등으로 1천 838억 원의 간접적 편익 발생이 예측된다.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강원특별자치도와 태백시는 이러한 규제개선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각 기관의 업무 재확인 및 빈틈없는 이행 약속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식에서는 그간 폐기물로 관리되었던 석탄 경석을 친환경적 관리를 통해 폐기물에서 제외하고, 각 기관이 석탄 경석의 산업적 활용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오늘 체결된 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석탄 경석 관리와 관련된 훈령 및 조례 작성, 폐기물 제외 이행 및 타 지자체 확산에 이르기까지 규제개선 전 과정에서 협력을 강화하게 된다.

4개 기관의 석탄 경석 규제개선 업무협약

환경부	석탄 경석의 친환경적 관리 방안을 환경부 훈령으로 마련하고, 친환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는 석탄 경석에 대해서는 폐기물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행정안전부	석탄 경석 관련 조례 등 제정을 지원하고 합의 사항을 이행하는지 관리하면서 규제개선이 지역발전에 도움되게 행정·제도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강원특별자치도·태백시	채취, 이송·반입, 보관, 사후 관리에 이르는 석탄 경석의 관리체계에 대한 조례 등을 제정하고 사토장을 통한 석탄 경석의 반출 관리를 강화한다.

NEWS
2024. 7. 22.(월)

지역건설사가 겪는
불합리한 규제 190건 발굴, 20건 집중 논의

지역건설사 규제 애로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다!

행정안전부는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업종협회를 통해 '지역건설사가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관계 부처 논의를 거쳐 3건의 규제를 해소했다.

행정안전부는 7월 19일(금) 14시, 서울청사에서 제14차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건설사가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관련된 보고·심의 안건 3건에 대해 '수용' 의결했으며 후속 조치 계획을 계속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역건설사 규제 해소를 위한 20개 중점과제' 중 아직 미해결된 과제도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위원회 안건 상정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최근 건설 경기 부진으로 민생 경기 및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번 위원회의 결정으로 지역건설사의 애로가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지역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자체·관계 부처와 함께 지방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3건의 안건 세부 내용

1.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한 품질시험계획 관련 규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
2. 연간 단가계약*으로 수행하는 유지·보수 등의 건설공사 중 발생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비에 계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
   * 연간 단가계약: 전체 계약(물량) 금액이 확정되지 않고 필요 시 차수별로 개별 공정 또는 항목에 대한 단가와 요율을 근거로 체결하는 계약
3. 건설업 인력 부족이 심각한 현실을 고려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비자 관련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

NEWS
2024. 8. 29.(목)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노력

60년된 조업 규제개선으로 어장을 대폭 확대하고, 운영 중단 철도 부지를 공장용지로 활용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행정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기업 애로를 해소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 '2024년 상반기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적극행정 우수사례' 12건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기업(생업) 경영 지원 4건(인천·울산·대구·서울) ▲주민 편익 증진 3건(강원·경기 파주시·부산) ▲시민 안전 강화 2건(울산 북구·충북) ▲지역 행정 효율화 3건(세종·경기·경북 의성군) 등 4개 유형 총 12건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 내 기업과 주민들이 겪는 생업 애로나 생활 불편에 공감하고 능동적으로 개선하려는 지자체 공무원의 노력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면서 "행정안전부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적극행정 사례가 다른 지자체에도 지속적으로 공유·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수사례 12건

기업(생업) 경영 지원 (4건)	① (인천광역시) 2년 연속 조업 규제 해소로 여의도 면적 61배 조업어장 확보 ② (울산광역시) 운행 중지 철도 부지를 공장용지로 활용해 기업경쟁력 강화 ③ (대구광역시) 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가 막힌 기업 애로 해소 ④ (서울특별시) 비대면 알선조정제도 도입으로 상가임대차 분쟁 조정 활성화
주민 편익 증진 (3건)	⑤ (강원특별자치도) 저소득 유·청소년 스포츠이용권 제도개선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⑥ (경기도 파주시) 한정면허를 활용한 학생 전용 노선버스 개통으로 통학환경 개선 ⑦ (부산광역시) 선불형 동백패스 도입으로 소외계층 교통 분야 복지 혜택 증진
시민 안전 강화 (2건)	⑧ (울산광역시 북구)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 CCTV 영상 정보 스마트검색 서비스 운영으로 시민 생명과 재산 보호 ⑨ (충청북도) 전국 최초 스마트 응급의료 시스템 구축으로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
지역 행정 효율화 (3건)	⑩ (세종특별자치시) 선제적인 자치법규 규제개선으로 빈집 정비사업 걸림돌 제거 ⑪ (경기도) 적극적인 공유재산 용도폐지 지침 마련으로 행정 처리 혼란 해소 ⑫ (경상북도 의성군) 소규모 건축물 해체 절차 완화로 빈집 정비사업 활성화 도모

NEWS
2024. 9. 24.(화)

지자체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규제혁신 추진 동력 강화

올해 최고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는?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행정안전부는 9월 24일(화) 대구 엑스코(EXCO)에서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상위 10건의 우수사례에 대한 현장 발표 심사가 진행된다. 이번 경진대회에서 발표되는 사례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 4건(강원, 충북 괴산군, 전북, 전남), ▲기업 애로 해소 4건(대전, 울산, 경기 안양시, 경기 양주시), ▲생활 불편 해결 2건(대구, 세종)이다. 행안부는 이번 경진대회에서 발표한 우수사례 10건과 장려상으로 선정한 7건의 규제혁신 사례가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집 및 규제혁신 과정과 성과를 담은 홍보 영상을 제작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홍보 영상은 행안부 공식 유튜브, 내고장알리미 등에도 게시되어 규제혁신에 관심을 가진 국민은 누구나 볼 수 있게 된다.

장려상 확정(7건) 규제혁신사례

지역경제 활력 제고	대전 서구	빈집 방치를 초래하는 불합리한 재산세 제도 개혁
	경북 포항시	선제적 규제개선으로 지속 가능한 이차전지 산업 성장 기반 마련
기업 애로 해소	인천 중구	차이나타운특구 사증발급 매뉴얼 개정으로 외국인 요리사 고용 요건 완화
	울산광역시	미활용 산업용지 주차장·야적장 임시 사용을 위한 법령 개정
	충남 서산시	산업단지 내 주차장 임대, 기업 애로 사항 해결을 넘어 법률 개정까지 1+1
생활 불편 해결	대구 중구	폐기물 배출 방법 개선으로 환경오염은 낮추고 주민 편의와 행정 효율을 높이다
	경기 파주시	제도적 허들을 넘어 학생 전용 통학순환버스의 길을 열다

발표 우수사례(10건)

지역경제 활력 제고	강원특별자치도	22년간 묶인, 석탄 경석의 폐기물 규제 해소
	충북 괴산군	농민 즉석판매 제조가공 탄소중립시대 로컬 판매 포문 열다 (소규모 농산물 가공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전북특별자치도	규제혁신으로 전국 최초 블루오션을 찾은 우분(소똥) 고체연료화
	전라남도	세계인, 전남人이 되다! 외국인 비자제도 개선 등을 통한 인력난 해소! (외국인 근로자와 공존을 통해 농·어업과 조선산업 등 지역산업 활성화)
기업애로 해소	대전광역시	대덕특구 토지 이용 효율화(고밀도 개발)를 위한 「연구개발 특구법」 시행령 개정
	울산광역시	운행 중지 철도 부지를 활용한 공장용지 공급
	경기 안양시	카페인 등 식품 기피 성분 표기 규제개선
	경기 양주시	지방 소멸의 해답, 규제혁신에서 찾다 (산업단지 입주협약 권한 확대로 기업 수요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
생활 불편 해결	대구광역시	소비자가 먼저 반기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세종특별자치시	전국 최초! 빈집 규제 협업으로 불합리한 규제개선



NEWS
2024. 10. 11.(금)

현장에서 청취하는 태백시
신산업 추진 상황 점검 및 애로 사항

강원 태백시에서
폐광지역 활성화 방안 찾는다

행정안전부는 10월 10일(목)부터 11일(금)까지 고기동 차관이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일원을 방문해 지역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석탄 경석 신소재 활용 상황 등을 점검해 지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강원 태백시는 한때 우리나라 최대 석탄 생산지로 1987년에는 인구가 12만 명을 넘었지만 1989년 석탄합리화정책 이후 인구가 계속 줄어 지금은 기초자치단체 '시' 중 인구가 가장 적은(38,094명, 2024.8월 기준)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 게다가 지난 6월에는 지역의 마지막 탄광이었던 장성광업소가 폐광되며 추가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고기동 차관은 10월 10일(목)과 11일(금) 태백시를 방문해 지역 고유 특색을 활용한 신성장 동력 육성 과정을 점검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 사항에 대한 행정안전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찾는다. 고기동 차관은 "행정안전부는 인구 감소 위기에 직면한 태백시와 같은 지역이 고유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방문지

강원테크노파크 원료산업지원센터	석탄 경석을 신소재로 활용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강원테크노파크 원료산업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석탄 경석의 친환경적 관리·활용 현황 점검
장성광업소	태백의 마지막 탄광지였던 장성광업소를 찾아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
비와야폭포	로컬브랜딩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태백 비와야폭포 일대를 방문하여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

NEWS
2024. 12. 11.(수)

2024년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
수상작 16건 선정

국민이 제안하고 정부가 개선하는
'민생규제 개선과제' 우수작 선정

**행정안전부는 '2024년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
수상작 16건(최우수 1, 우수 1, 장려 14)을 선정해 시상한다고 밝혔다.**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는 국민이 규제로 일상에서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실시하며, 공모에서 채택된 우수작은 관련 법령·규정 개정, 정책 개선 등을 통해 민생규제를 개선하고 있다.

올해 공모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난 5월 한 달간(5.1.~5.31.)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고, 총 865건의 국민 제안이 접수됐다. 국민 제안은 지자체, 전문가 사전 심사와 안건 해당 부처 검토를 진행해 수상 후보작을 선별했다. 이후, 소통24(sotong.go.kr)를 통한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 16건(최우수1, 우수1, 장려14)을 선정했으며, ▲최우수작으로 정재호 씨(강원 춘천)가 제안한 '여성기업의 창업 보육센터 입주 기간 확대(최대 5년→8년)', ▲우수작으로 문지우 씨(경남 김해)가 제안한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에 질환명 한글 병기 및 의료 용어 설명 요청'이 선정됐다.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된 16건에는 행정안전부장관상과 함께 부상품(최우수 100만 원 상당, 우수 50만 원 상당, 장려 10만 원 상당)도 수여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국민이 제안한 민생규제를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 수상작(16건)

상	개선과제	내용	기관
최우수	여성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간 규제 완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및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28조에 따라 최소 3년, 최대 8년까지 입주할 수 있음. 여성창업보육센터도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창업보육센터 지정받아 운영 중이나 자체 운영요령으로 입주 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제한하고 있음. 이에 타 창업보육센터의 입주 기간을 고려해 입주 가능 기간을 최대 8년까지 연장할 필요가 있음.	중소벤처기업부
우수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에 질환명 한글 병기 및 의료 용어 설명 요청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의 검사 항목과 검사 결과가 영문이나 전문용어로 표기된 경우가 많아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특히 모바일·인터넷 등을 활용한 검색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경우 본인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 알기가 힘듦. 따라서 결과 통보서에 한글을 병기하고 검사 항목에 간단한 설명을 넣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보건복지부
장려	확인서 발급 간소화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공동인증서 본인 확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나 공동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은행을 방문해야 하며 수수료를 부담해야 함. 이에 PASS·네이버 등 간편인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중소벤처기업부
	건설기계 수출이행 신고 지연 과태료 기준 규제 완화	건설기계를 수출하는 자는 수출이행 여부를 신고해야 하나, 신고 미이행 시 지연 일수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과태료(100만 원)를 부과해 수출업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과태료 지연 기간에 따른 차등 부과가 필요함.	국토교통부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사업 신청 시 저소득층 자격 확인 절차 간소화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사업의 경우 노인요양시설 및 의료기관 입원 치매환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 비율이 높으나 주민센터에서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다시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므로 자격 확인 절차 간소화가 필요함.	보건복지부
	위생용품 제조업소 창고시설 기준 완화	위생용품 제조업과 용기·포장류 제조업을 같이 운영하려는 경우, 「위생용품 영업 시설기준」의 단서 규정에 따라 용기·포장류 제조업과는 창고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없다고 해석됨. 이에 위생용품 제조업자가 용기·포장류 제조업을 함께 운영하려는 경우, 창고 시설을 공동 이용할 수 있게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설 기준 완화가 필요함.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례시 위생업소 기존 영업자 대상 식품 위생 교육 이중 부담 해소	유사 업종의 경우 허가·신고·등록 관청이 같은 경우에만 정기교육이 갈음되어 동일한 시에 속해도 서로 다른 구에서 영업할 경우 이중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함. 따라서 유사 업종 허가·신고·등록 관청이 기존 영업소와 동일 시·도에 속해 있다면 정기교육이 갈음되도록 개선이 필요함.	식품의약품안전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기관 확대	현행법상 재외국민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귀국해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나 이동 시간과 비용 부담으로 불편함이 초래됨. 이에 재외공관에서 본인 확인을 거쳐 재외공관장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	행정안전부
장려	화재안전기술 기준 내 금속화재 기준 마련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는 금속화재의 기준이 부재하여 본 기준에 금속화재를 정의하고 분류체계 마련이 필요함.	소방청
	장애인 일자리 반복 참여 제한 완화	장애인 일자리는 최대 2년까지 반복 참여를 허용함이 원칙이나 농촌지역은 지원자 수가 적어 참여 제한 기간 동안 참여자가 없는 경우도 있음. 반복 참여 제한 예외 대상에 농·어촌지역 거주 장애인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 신청 확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 등록과 서비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하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의 주민센터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	보건복지부
	외국인 유학생의 비전문취업(E-9)을 허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유학생 체류 자격(D-2)으로 입국한 외국인의 경우 구직비자(D-10)를 받아도 회화지도·연구·기술지도 등 '전문취업' 분야에 취업할 수 있을 뿐 비전문취업(E-9)으로는 취업이 어려워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함.	고용노동부
	신규 및 재발급 주민등록증 우편 발송 개선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반송된 주민등록증 재중 봉투가 일반 우편 봉투와 구별이 쉽지 않아 분실되는 사례가 발생함. 이에 일반 봉투가 아닌 유색 봉투를 사용하고 '주민등록증 재중', '반송 시 담당자에게 반드시 전달' 문구를 삽입해 분실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행정안전부
	공무원 임용 후보자 등록원서 등록필증 송부 방법 개선	임용 후보자 등록원서는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이 가능하나 우편 제출 시 등록필증 회신을 위한 우표 동봉이 요구되며 등기우편 대면 수령 등으로 불편이 초래됨. 이에 등록필증 회신 시 이메일 등 전자적 송부 방법을 원칙으로 하거나 본인이 등기필증 수령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행정안전부
	국가기술자격 취득 요건 완화	현행법상 기사 또는 산업기사 등급 응시 자격의 학력 요건으로 응시 기회에 차등이 있어 애로가 있음. 이에 기사 응시 자격 중 학력 요건을 1년 단축하여 응시 기회 확대가 필요함.	고용노동부
	어린이집 설치 기준 및 보육교사 배치 기준 완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별표1] '어린이집 설치 기준'과 [별표2] '보육교사 배치 기준'을 홀수로 제한하고 있어 짝이 없이 소외되는 영유아가 발생하므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짝수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동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르면 '연장보육반 전담교사 배치 기준'은 3년마다 검토하도록 되어 있으나, '보육교사 배치 기준'은 재검토 대상에 제외되므로 '보육교사 배치 기준'도 재검토 대상에 포함해 현실적 여건을 반영한 보육교사 배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교육부

NEWS
2024. 12. 27.(금)

2024년 지방규제혁신 성과 평가 결과,
우수 지자체 60개 선정

규제혁신으로 빈집 정비하고, 식품표기법 개선한
지방규제혁신 우수 지자체 선정

행정안전부는 '2024년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 평가'를 통해 우수 지자체 60곳(광역 6곳, 기초 54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자체의 자발적인 규제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 평가'에서는 ▲법령에 규정된 규제를 발굴하고 중앙부처에 개선을 요청하는 활동, ▲지자체 조례·규칙상의 규제 해소 추진, ▲그 밖에 인허가 등 행정 업무 수행 시 지자체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등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올해는 지자체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평가 대상을 광역, 시, 군, 자치구 4개의 단위로 구분했다. 특히 기초지자체에 대한 우수 기관 선정 규모를 확대해 기초지자체의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독려했다. 또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성 평가를 도입하여 각 지자체의 규제혁신계획 수립부터 목표 달성까지 주요 활동에 관한 질적 평가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평가제도 개선에 따라 평가에 참여한 기초지자체가 지난해 73개에서 올해 143개로 대폭 늘어나는 등 그간 규제개선에 관심이 낮고 개선 활동에도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던 기초지자체의 지방규제혁신이 활성화 되었다.

참여 지자체 수 변화

2022년	2023년	2024년
64개 (광역 15개, 기초 49개)	90개 (광역 17개, 기초 73개)	159개 (광역 16개, 기초 143개)

평가 결과, 총 60개의 지자체가 성과 평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그중 최우수 기관에 광역 단위는 세종특별자치시, 시는 안양시, 군은 옥천군, 구는 대구 중구 등 4개 지자체, 그 외 우수 기관은 12개, 장려 기관은 44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이번에 우수사례로 선정된 60개 지자체에는 지자체당 1억 원~5억 원의 특별교부세(총 90억 원)가 교부된다.

발행일 2024년 12월

발행처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국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T. 044-205-3933 F. 044-204-8974

펴낸이 지역경제지원국장 조성환
지방규제혁신과장 김우철
서기관 류성수, 김길수
사무관 강말순, 곽성준, 강규욱, 박지혜, 유해리, 고혜영, 홍영준
주무관 김윤식, 김진희, 류소연

감 수 유시나

편집디자인 제일기획
T. 02-2269-8900

인쇄 사)한국장애인유권자연맹인쇄사업부

이 책의 저작권은 행정안전부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행정안전부의 허락 없이는 무단으로 싣거나 복제할 수 없습니다.